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6. 4.

대 한 민 국 정 부

- 목 차 -

(해양수산부 : 216건)

1.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 ····· 3
2. 서해 중국 불법구조물 설치 및 해양조사 방해 등으로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 ····· 3
3. CPTPP 가입 및 한-말 FTA에 따른 우리 어민 예상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3
4.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배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 ····· 4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핵종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
6. 조사대상에 빠져있는 핵종에 대한 검사 및 (검사)장비 추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4
7.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30by30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4
8. 블루카본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원 조성용 사업으로 변질되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5
9.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5
1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해양레저 관련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 ····· 5
11. 지자체별 해양관광레저 사업의 중복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관광레저 연계벨트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6
12. 전북지역의 특화형 크루즈 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 ····· 6
13.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하여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
14. 비지정해변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7

15. 전국 해수욕장 중 동력해상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면허소지자가 태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욕장 안전체계를 마련할 것 ····· 7
16. 해양전시시설 내 장애인 관람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8
17. 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관측 부이(觀測 浮標) 점검주기규정을 개선할 것 ····· 8
18. 충남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를 지원할 것 ····· 8
19.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 ····· 9
20. 경남 남해안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어항 관리선 배치를 검토할 것 ····· 9
21.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KRISO) ····· 9
22.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10
23. 극지연구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을 강구할 것 ····· 10
24.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 작성된 해도의 민간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것 ··· 10
25. 해안사구 조사 및 보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11
26.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관련, 어묵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 11
27. MMPA 관련, 혼획저감장치 개발계획 등 적극 수립 필요 ····· 11
28. 대미 관세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12
29.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 12
30. 뱀장어 CITES 부속서 II 등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 ····· 13
31. 해외 위조·모방 수산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13
32. 해외 수산식품 위조·모방에 대해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세 수산식품기업을 보호할 것 ····· 14
33.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14
34. 수산물 할인대전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에 많은 이익이 귀속되고 어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14

35. 대형 유통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수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을 개선할 것 ····· 15
36.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쿠팡)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정산주기가 늦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15
37. 김 제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고 김 수출지원 및 김산업 성장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15
38.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 ····· 15
39.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6
4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상 소비자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이력 조회시스템을 보완할 것 ····· 16
41. 수산물이력제 관리 인력 충원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7
42. 중국산 활바지락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17
43. 국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의 일본산 둔갑 및 혼입 유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자원 보호 의무와 수입 정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기 성어기 전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18
44. 어선 화재폭발 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
45.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정착 및 감독관 수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 19
46.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등으로 인한 우리 어선의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 20
47.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 20
48. 어업인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어업인 산재보험 통계를 작성할 것 ····· 20
4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어민부담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할 것 ····· 20
5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지급 불가내역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21
5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피해 특약 가입 관련 어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 21
52.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관측자료가 부재한 경우 대체 판정 기준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1

53.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게 패류독소 조사체계를 개선할 것 ····· 21
54. 어업인의 폐어구 반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22
55. 어구부표 보증금 환급을 위한 폐어구 반환장소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 22
56. 수산부산물 자원화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22
5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양식산업발전법 등) 및 이행 여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 23
58.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품종을 개발할 것 ····· 23
59. 수온상승에 따른 해역별 어종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업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 ····· 24
60.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24
61.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 ····· 24
62.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시 현행 꽃게와 붉은 대게 외에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4
63. 유인책 마련 및 어업인 생활안정대책 강화 등 어선 감척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25
64. 감척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확대에 노력할 것 ····· 25
65. 어선 감척지원금 과세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25
66. 어선청년임대 사업에 정부의 어선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 ·· 26
67. 어선 감척 관련하여 정부가 감척 대상 어선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6
68. 소송으로 중단된 국가어업지도선의 건조를 재개하고,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여 해역 공백을 최소화할 것 ····· 27
69.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인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7
70.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28
71. 내수면 관광·레저까지 연계한 내수면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지역 연계형 사업 등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28
72.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인한 내수면어업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29
73. 내수면 어도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9
74. 내수면 양식 어가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29

75. 전남 지역 수산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진흥방안을 마련할 것 ····· 30
76. 전북에 김 산업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30
77. 영덕항 강구 등의 지역을 참다랑어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1
78. 제주 오분자기 생산량 감소 대응을 위해 산란·서식장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 31
79. 경남 국가중요어업유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 31
80. 부안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31
81. 수산물 위판장의 원활한 현대화를 위해 예산 집행률 제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2
82.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시설 설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32
83. 자갈치시장 무상사용 협약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32
84. 새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32
85. 어촌생활환경정비 방침을 수립하여 어촌 빈집 문제를 개선할 것 ····· 32
86. 어촌뉴딜사업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 감독을 할 것 ····· 33
87. 어촌 인력 부족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지역별 편차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33
88. 어촌, 어항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활용 안전예측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34
8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정한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34
90. 어업 정착을 위한 어업경영비가 농업 분야보다 많이 소요되는 어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어업인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 ····· 34
91. 어업인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35
92. 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지원 필요 ····· 35
93.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조건 소급 적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35
94. 2023년 이전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사항의 소급적용을 검토할 것 ····· 36
95.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산분야에 어업용(농사용) 전기 적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36
96. 수산관계법령 상 1차 위반만으로 허가 취소토록 하는 처분 기준을 정비할 것 ···· 37

97. 소금산업에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것 ····· 37
98. 제6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 ····· 38
99. 현행 여성어업인 육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8
100.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담긴 어민들의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 38
101.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섬마을 기본소득 사업 접목 필요 ····· 39
102. 수협 부당대출 외부 감사 필요 ····· 39
103. 부실경영이 지속되는 추자수협의 경영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9
104.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제고를 위한 보급·지원물량 확보대책 마련 필요 ··· 40
105 플라스틱 어상자 예산 확대 또는 현장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40
106. 긴급방류 시 동일해역에서 일시적 대량방류를 제한하고 있는 조피볼락 관련 지침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 40
107. 긴급방류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중간어 단가 신설을 검토할 것 ··· 41
108. 서해 NLL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 ····· 41
109. 타 지역 어선의 추자도 해역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41
110. 안전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서해5도 백령도 북방어장을 확장하고 야간 조업시간을 연장할 것 ····· 42
111. 낚시어선에도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하고 낚시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 42
112. 낚시로 인한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 43
113. 전복 생산량 증대로 전복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43
114. 글로벌 김산업 주도권 사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43
115. 김산업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44
116. 수산기자재 관련 법안 시행되면 준비 철저 필요 ····· 44
117.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어업인 경영안정자금과 비축자금은 유지할 것 ····· 44
118.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45
119. 납입 대비 보험금 지급이 저조한 수협 재해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5
120.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의혹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45

121.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46
122. 마을어장에서 생산하는 바지락 등 패류도 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 ···· 46
123. 지특회계로 이관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자체와 협조할 것 ···· 46
124. 단김 양식 및 위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7
12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47
126.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등 추자도에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7
127. 국립공원 내 양식장 월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48
128.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월동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8
129.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의 기본급 상향 등 처우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 48
130.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적극 검토할 것 ···· 48
131.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과거 북극항로 운항실패 요인, 문제점 등을 찾아 극복 대안을 마련할 것 ···· 49
132. 북극항로 개척 관련 범정부 협력체 및 민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 49
133. 북극항로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위험요인, 경제성 확보 및 외교적인 문제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북극항로 개척에 접근할 것 ···· 50
134. 북극항로의 환경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EU 녹색해운항로 구축 필요 ····· 50
135. 북극항로 개척 관련 데이터 구축, 항로 안전 제공 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를 포항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0
136.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51
137. 수리·정비 등으로 여객선 미운항 시 대체선 투입 의무화 대책을 마련할 것 ··· 51
138. 연안여객선이 사고·수리 등으로 미운항할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 ···· 52
139. 울릉도 항로의 미운영과 관련하여 울릉도 거주주민 및 관광객 등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52
140. 연안해운의 여객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52
141. 여객선 요금제 할인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 53

142. 내항여객선 안전을 위한 선원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53
143.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등 내항선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53
144. ILO 어선원 노동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53
145. 선원노동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할 것 …… 54
146.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율 필요 …… 54
147. 연안화물선사와 화주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54
148.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륙도서민에 추가 배송비를 부당하게 부과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 및 부당액 환수 등 조치할 것 …… 55
149. 연륙섬 주민에게 청구되는 추가택배비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후 환수조치 할 것 …… 55
150. 평택항 내 전기차 화재 및 화학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55
151. 항만별 맞춤형 항만 재해정보 통계 구축을 검토할 것 …… 56
152.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복구 점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위를 밝힐 것 …… 56
153.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로드맵 마련 필요 …… 56
154. 제주항 항만 보안 방안 마련 필요 …… 57
155. IMO 넷제로 전략 준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 58
156. 국가필수선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58
157.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58
158. 항만공사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 …… 59
159. 군산항 준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 59
160. 감천항 내 기존 수리조선소 폐지 및 신규 단지 조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 59
161. 군산 · 새만금항만공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 60
162. 연안 자율운항선박(K-CASS) 추진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60
163. 여수항만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를 검토할 것 …… 60

164. 해운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IoT 장비 보급 및 활용 지원사업의 재개를 검토할 것 ····· 61
165. 제6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이 실현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61
166. 매년 발생하는 선박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 ····· 61
167. 국제운송규정 강화로 숯 수입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61
168. 이용자가 저조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 안내 앱을 개선할 것 ····· 62
169. 화종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육성할 것 ····· 62
170.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 ····· 63
171.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대부두를 포함할 것 ····· 63
172. 항만기본계획이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의 원칙과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 필요 ····· 63
173.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필요 ····· 64
174. 지방관리 항만의 국가로의 전환 방안 마련 할 것 ····· 64
175. 북극항로 개척 관련 제주항의 크루즈 육성 및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 64
176. 새만금신항이 푸드허브항·수소전용·콜드체인 항만으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65
177.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30년까지 3선석을 추가 건설하도록 할 것 ····· 65
178. 항만자동화 국산화 비율 목표치 달성 및 5G 통신망 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 ····· 65
179. 여수광양항을 AI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컨테이너 부두 항로를 증심할 것 ··· 66
180. 항만 안전사고 연구용역 실시 등 대책 마련 필요 ····· 66
181.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의무화를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등 개정 필요 ····· 66
182. 항만에 특화된 재해통계 집계 대책 마련 필요 ····· 66
183. 연안침식 대응 관련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것 ····· 67

184.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비리 관계자의 처벌과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를 실시 할 것 ····· 67
185. 비상사태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항만운영협약 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7
186. 부산항 환적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68
187.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및 포승~평택 철도 공사를 조기 추진할 것 ····· 68
188. 감천항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69
189. 남해 미조항 방파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 69
190. 본부 및 소속기관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69
191. 부산이전 관련 인력 이탈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70
192.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 ····· 70
193.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이사 인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 ····· 70
194. 해수부 내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할 것 ····· 71
195.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 ····· 71
196. 온나라 해킹사고 보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71
197. 이중화, DR 구축 등 데이터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 72
198.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72
199. 해수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73
200. 향후 세월호 선체절단물 폐기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할 것 ····· 73
201.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73
202.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문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74
203. 예선사업자와 해운대리점 사업자간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74
204. 해기사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기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 양성된 해기사의 북극항로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 ····· 74
205. 화종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육성할 것 ····· 75

206.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기후변화 시책 규정할 것 ····· 75
207. 바다내비 센터 이전지가 부산 임시청사와 떨어져 있는데 이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76
208. 김 판매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할 것 ····· 76
209. APEC 대비 해양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76
210.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확대할 것 ····· 77
211.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77
212.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 ····· 77
213. 북극항로 개척 관련 항만별 기능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77
214. 민간투자개발사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문제 해소 필요 ····· 78
215.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78
216. 서해어업공무원 해양수산부장(葬) 거행 관련 재조사 할 것 ····· 78

(해양경찰청 : 53건)

<해양주권수호>

1.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 ····· 81
2.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출장보고서 누락, 방첩사 업무협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 ····· 81
3. 서해북방한계선(NLL) 등에 집단으로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81
4.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관련 잠정조치수역 內 경비구역 확대, 대형 경비함정 추가 배치 및 유관기관 협력 필요 ····· 82
5. 한반도 주변 광역 해역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인 감시체계를 포함한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83
6. 조리사 없는 열악한 소형 경비함정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 83
7.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최 관련 해상경호 등 대응 ····· 84
8. 무인기 도입 시 실제 비행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84

9. 해양경찰청 초계기는 2012년 이후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항공대(김포·무안)에만 배치되어 있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도입 필요 ····· 84
10. 원거리 해역에서의 장시간 수색·구조 임무 수행을 고려한 대형헬기 도입 검토 필요 ····· 85
11.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85
12. 신안 해역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목포광역VTS와 전남 해상풍력 간 레이더 연계 관련 대책 마련 ····· 86
13.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개정된 사례가 확인된 바, 위임입법 한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87

<해양범죄단속>

1. 해양경찰청의 업무 범위 근거가 불분명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 수사는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급증하는 해양 마약 범죄 대응에 배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 ····· 87
2.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및 범죄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 증원,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 국제공조 확대 등을 통해 수사력 강화 필요 ····· 87
3. 밀입국 등 국경범죄 관련 해상경계 강화를 위한 경비함정 추가 배치, 무인 항공기 도입 및 유관기관 공조 체계 확대 ····· 88
4.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수사인력 양성, 수사연구소 직제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89
5. 해양경찰 수사권 범위 명확화 필요 ····· 90
6. 경찰에서 기소 송치 후 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한 분석·평가 시스템 등 제도 보완 필요 ····· 90
7.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 번복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고발 필요 ····· 91
8.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관련 불법 의혹 및 해양 경찰청 수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동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 규명할 필요 ····· 91

<해양구조안전>

1. 영흥도 순직 사건 관련 근무수칙 미준수 상황보고 지연, 초기 대응 부실, 구조장비 미지참 등 대응체계 개선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91

2. 해루질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운영, 갯벌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야간 해루질 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92
3. 사고 위험성이 높은 테트라포드에 출입통제 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 93
4.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및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93
5.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필요 ····· 93
6.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94
7.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점검 필요 ····· 95
8.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96
9. 해양재난 현장 수색구조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 ····· 96

<장비기술>

1. 내구연한 경과한 5천톤급 삼봉호 (제2독도함) 대체건조 필요 ····· 97
2. 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98
3. 산업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함정 안전모 개선 대책 필요 ····· 98
4. 서부정비창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99
5. 부산정비창의 노후 시설 개선 및 관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9
6.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 ····· 100
7. 연구센터 R&D사업 효율적 추진 및 3D 프린팅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101

<오염방제>

1. 해양오염관련 변상금 미수납 대책 마련 필요 ····· 102
2.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측정 간이분석장비의 주기적 검·교정 필요 ····· 102

<조직운영>

1. 파출소 근무 규정 위반·성 범죄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쇄신방안 마련 필요 ····· 103
2.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내부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03
3.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 대상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징계 기준 마련 필요 ····· 104

4. 평택 대산항 경찰관 공상사고 관련 전면 재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104
5. 함정스피커 등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 개선 ····· 105
6. 해양경찰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확보 필요 ·· 105
7. 함정 등 현장과의 소통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 가입 기준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106
8. 국제적 해양경찰 임무특성을 고려, 조직의 업무범위 등 검토 필요 ····· 106
9. 고흥 및 제주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 ····· 107
10. MZ세대 경찰관 의원면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107
11. 여성 경찰관 고위직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108
12. 함정·파출소 등 지방관서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 108
13.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무와 직무 중심으로 교육훈련 전면 재검토 필요 ··· 109
14. 전문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 109

(부산항만공사 : 30건)

1. 사이버보안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 113
2. 관리자산 및 예산 규모 대비 전반적인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113
3.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을 증액할 것 ····· 113
4.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관리·심사 강화하고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할 것 ····· 113
5. 북극항로 전략 수립 시 정부의 멀티포트 전략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114
6.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선임 시 특정 기관 출신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 114
7.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114
8. 경영혁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114
9. 감천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 ····· 114
10. 부산항 클러스터 사업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15
11.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및 사업화 계획을 수립할 것 ····· 115
12. 영도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115
13. 청학안벽 활용 용도를 명확히 정리할 것 ····· 116
14. 신항 7부두 물동량 확대, 대기 시간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116

15. 신항 터미널 과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16
16. 제주-부산 크루즈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연안화물 노선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 ···· 116
17. 항만공사 간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 ····· 117
18. 항만공사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 117
19. 불법 전대와 임대 관리 부실 문제를 점검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 117
20. 장기 방치 선박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 ····· 118
21.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 ····· 118
22.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 118
23.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18
24.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119
25. 신항의 질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119
26. 동북아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것 ····· 120
27.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 ····· 120
28.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 121
29. 해외사업 인력관리 비용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되도록 기재부에 적극 요청할 것 ··· 121
30. 북항 재개발에 있어 공공성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121

(인천항만공사 : 14건)

1. 미납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125
2. 사이버보안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 125
3. 안전관리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125
4. 공사 부채비율 현황을 점검할 것 ····· 126
5.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126
6.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127
7. 항만배후단지 임대 기간을 형평성 있게 연장할 것 ····· 127
8.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 128
9. 인천-제주 항로 재개를 위한 지원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 128
10. 골든하버 부지매각 계획 및 근린공원 미개방 관련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129
11. 항만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를 추진할 것 ····· 129

12.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 ····· 129
13.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 130
14.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130

(여수광양항만공사 : 14건)

1. 공사 부채비율 현황 점검 필요 ····· 133
2. 항만공사 미납채권 관리 필요 ····· 133
3. 사이버보안 인력·예산 확보, 항만공사 간 협의체 구성 필요 ····· 133
4.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적정성 점검 필요 ····· 134
5. 항만 안전관리 철저 필요 ····· 134
6.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있는 마스터플랜 추진 필요 ····· 135
7. 2026여수섬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 ····· 135
8. 공석인 신임 사장의 조속한 인선 필요 ····· 135
9. 정보시스템 DR 구축 필요 ····· 135
10. 크루즈 특경 위·수탁 계약 관련 징계 감경 타당성 검토, 재발 방지 필요 ···· 136
1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율, 수익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36
12. 불법전대 현황 점검하여 조치할 것 ····· 136
13.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 137
14.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적극 구축 필요 ····· 137

(울산항만공사 : 14건)

1. 인사평가 오류 재발방지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141
2. 사이버보안 협의체 구성 등 사이버보안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 141
3. 영업이익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 증액 필요 ····· 142
4. 미납채권 회수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42
5. 안전관리 인력 · 예산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142
6.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 143

7. 육상전원공급설비(AMP)이용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 143
8.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토양오염 정화 조치 조속히 이행 필요 ····· 144
9.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사업 조속히 완료 필요 ····· 144
10.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 144
11.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필요 ····· 145
12. 항만게이트 전동화 가능성 검토 필요 ····· 145
13. 항만 간 중복 투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145
14. 불법 전대, 임대 관리 부실 문제 점검 필요 ····· 146

(해양환경공단 : 13건)

1. 해파리 폴립 제거 잠수인력 양성 및 해상풍력 관련 해파리 폴립 서식지 증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149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수거 목표 달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149
3. 공단이 보유한 유회수기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150
4.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 ····· 150
5.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 ····· 151
6. 민·관·학이 함께 폐어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 151
7. 중앙부처의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152
8.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할 것 ····· 152
9.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노후선박 교체, 공공집하장 설치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할 것 ····· 153
10.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관련, 해양환경측정망 수준의 전문인력, 예산(분석장비)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153
11. 위치미상 및 고위험 침몰 선박의 잔존유 제거 ·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154
12. 대형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영 구난 전문기관 신설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중장기적으로 협의 할 것 ····· 154
13. 다목적 대형 방제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 15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4건)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 159
2.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 159
3. 폐어구 재활용 체계와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 ····· 159
4. 해양수산 R&D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 ····· 159

(한국수산자원공단 : 12건)

1. 수급업체 포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163
2.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및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 163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 노력 필요 ····· 164
4. 수산종자방류사업의 품종별 효과 차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이 높은 품종 확대 및 방류 품종 편중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164
5. 사천·남해권을 포함한 광역단위 자원 회복 체계 구축 및 국가 차원의 집중 관리 필요 ····· 164
6.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를 재검토하고 바다사막화에 따른 피해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대책 강구 필요 ····· 165
7. 국제기구의 의무승선률 확대 기조에 맞춰 옵서버 인력 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보고 필요 ····· 165
8. 수산분야 전문가 파견 ODA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166
9. 어촌소멸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강화, 예산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필요 ····· 166
10.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임대인(노령어업인)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67
11. 공단 제주본부 시설물 노후화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후생명자원센터 설립안 마련 노력 필요 ····· 167
12. 어부가 판다 플랫폼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 및 담당자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16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9건)

1. 하이브리드 선박의 체계적인 검사 방안을 마련할 것 ····· 171
2. 한강버스의 전기계통, 방향타 등의 고장원인에 대해 파악할 것 ····· 171
3. 선박 시운전 검사 시 운행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방안을 마련할 것 ····· 172
4. 내수면선박 구명·소방설비 도면승인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172
5. 여객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추진안을 마련할 것 ····· 173
6. 부유물 감김사고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174
7. 매년 증가 중인 어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174
8. 미수검 선박 관리를 위해 연락불가 어선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175
9. 공단의 수지차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선검사 수수료 등 어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17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5건)

1.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179
2.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179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179
4. 관내 훈련장 부재로 법정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권 선원들의 교육훈련 적기 이수를 위하여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유치를 위한 연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 180
5. 해기사 시험 문제의 적정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상시적·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180

(한국해양진흥공사 : 6건)

1. HMM 매각 방향 및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해운 업계의 우려를 청취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183
2. 내항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것 ····· 183
3. 북극항로는 해양전문 정책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필요한 금융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 183

4. 중소선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할 것 ····· 184
5.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 ····· 184
6. 데이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할 것 ····· 18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4건)

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하여 해양과학기술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87
2.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 관련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진단과 대응 연구를 추진할 필요 ····· 187
3. 심해저 자원은 정부 주도의 준비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정부-민간 협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 ····· 187
4. 2022년 발생한 연구소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보완대책 및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188

(한국어촌어항공단 : 12건)

1. 수급업체를 포함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 191
2.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191
3. 낮은 보수 및 취약한 복리후생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191
4.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192
5. 어촌어항공단 등 수산업 관련 기관의 본사 소재지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192
6.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어촌·어항 특화 정책으로 확대하고, 전담기관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192
7. 체계적인 어촌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추진할 것 ····· 192
8. 부산 지역의 어촌·어항 개발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 ·· 193

9.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촌 기업과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193
10.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양식장 임대료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극 지원할 것 ····· 193
11.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컨설팅 유형에 따라 상담비를 차등화하는 한편, 더 많은 귀어귀촌인 및 어업인이 상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 194
12.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대응을 강화하고, 어항관리선 배치 등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할 것 ····· 19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5건)

1.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필요 ····· 197
2.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 197
3. 장애인 전용 서비스 제공률 개선 필요 ····· 198
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99
5. 해양바이오뱅크 자원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199

(국립해양박물관 : 5건)

1. 연평균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 ····· 203
2.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203
3. 박물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04
4. 지난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미흡한 바, 구매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4
5. 창의적인 민간기업의 역량 발휘를 취지로 하는 민간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 205

(국립울진해양과학관 : 6건)

1.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209
2.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 209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 210
4.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 210
5. 과학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211
6. 지역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양과학교육을 활성화할 것 ····· 21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6건)

1. 캄보디아 ODA 사업을 계획에 맞게 이행할 것 ····· 215
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운영과 대외 활동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 ····· 215
3. 국립등대박물관과 부표사업소의 인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15
4.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 216
5. 정보보안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 ····· 216
6.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조속히 진행할 것 ····· 216

(한국해양조사협회 : 4건)

1. 장애인 의무고용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 ····· 219
2. 영해기준점 시설 훼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관리자 안전 대책 필요 ····· 219
3. 정보보안 전담인력 증원 및 예산편성의 일관성 필요 ····· 220
4.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 2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61건)

1.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223
2. 진해수협 및 고성수협의 사랑제일교회 대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223
3. 여수수협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223

4. 회원조합 횡령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 준법감시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223
5. 조합원 1인당 출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배당금액은 감소하고 있는바, 과도한 부동산 대출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224
6.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것 ····· 224
7.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검토할 것 ····· 224
8. 비상임이사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225
9.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2022년부터 3등급 유지) 상향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225
10.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 225
11.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노량진 수산시장) ····· 226
12.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 226
1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227
14. 도이치모터스 그룹, 사랑제일교회, 우진메디컬프라자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227
15. 대출 관련 사전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227
16. 일반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할 것 ····· 228
17. 상호금융 공동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228
18. 단위수협 고위험(브릿지론)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229
19.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 신탁 공동대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229
20. 상호금융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 비율 관리를 위하여 건전성 회복 목표치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230
21. 비어업인 대출 연체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230
22. 부실채권 매각 자회사(수협엔피엘대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231
23. 양식재해보험의 낮은 지급률 문제에 대하여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 지급 불가 내역에 대한 통계 관리 및 사후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 ····· 231
24. 양식재해보험 조기 가입을 유도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위한 가상계좌 제도 등을 신설할 것 ····· 232

25. 양식재해보험 할증 방식 및 특약(약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33
26. 소음성난청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지급 기준을 보완할 것 ···· 233
27. 해녀학교 실습생에 대한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할 것 ···· 233
28. 바지락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 ···· 234
29. 섬 주민을 위한 자동차 보험 상품 신설을 검토할 것 ···· 234
30.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것 ···· 234
31. 발전소 건설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손실액을 현실화할 것 ···· 235
32.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 235
33. 낚시 활동과 관련된 기준 및 어업인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38
34. TAC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238
35.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 239
36. 어선 감척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239
37. EU의 뱀장어 양식 CITES 부속서 등재 요청에 대하여 등재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트랙 대응을 추진할 것 ···· 240
38. 김 양식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 ···· 240
39. 일반선원 및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어선원 안전교육을 확대할 것 ···· 240
40. 구명조끼 지원사업을 내수면 어업까지 확대할 것 ···· 241
41. 구명조끼 지원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지원 후정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41
42. 내수면 어업에 대한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 241
43.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 모델 다각화, 친환경 인증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242
44.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원조합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242
45. 회원조합 임금체불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243
46. 수산업의 AI 전환과 관련하여 수협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243
47.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 ···· 244

48. 경제사업 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244
49. 수협유통(바다마트) 적자 문제에 대하여 구조개혁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45
50. 수협유통의 기계장치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246
51. 수협-오리온 합작법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247
52. 김 양식업자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 247
53. 마른김의 조미김 전환 가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 247
54. 수협사료 공장의 전남 신축을 추진할 것 ····· 248
55. 다수의 위판장에서 방조·방서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가 미흡한 바, 단계적인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할 것 ····· 248
56. 산지위판장 및 폐어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49
57. 회원조합 친환경 냉매 전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와 논의하여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249
58.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49
59. 학교급식에서의 수산물 선호도 저하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한식진흥원·영양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250
60. 군급식 수산물 물량 감소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250
61. 국방부와의 급식단가 협의 시 수산물 급식비를 물가 및 인건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51

(수협은행 : 16건)

1.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 ····· 255
2.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신용대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여신심사 판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용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255
3. 신용대출 심사 절차 및 회의록 작성 기준을 강화할 것 ····· 255
4. 8년 만에 공시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55

5. 대출 연체율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56
6. 비어업인 대출 연체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256
7. 무수익여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256
8. 자산 대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경영 혁신 노력을 추진할 것 ····· 257
9. 수기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 257
10. 귀어정책(창업)자금 대출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 ····· 257
11.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 258
1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것 ··· 258
13. 음주운전 관련 인사 규정을 강화할 것 ····· 259
14.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콜센터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을 포함하여 노란봉투법 시행에 적극 대응할 것 ····· 259
15.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할 것 ····· 259
16.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회사 인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 또는 계열사 신설을 자제할 것 ····· 260

(한국선급 : 5건)

1. 선박검사 관련 징계 건수 증가에 따라 검사 미흡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263
2. 외국 선급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현재 세계 7위에서 세계 6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263
3.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 264
4.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264
5. IMO에서 탄소세 도입을 1년 보류한 것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 조선·해운업계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선급의 지원 당부 ····· 265

해 양 수 산 부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1.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서해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권익 수호 활동 관련 '26년 예산으로 70억원 편성 **<향후 추진계획>** □ 해양과학조사, 해양관측부이 운영, 우리측 대응 관련 적정성 검토, 연구선 대체건조 등 인프라 확대 * 관할해역 정밀 해양탐사 기술개발(R&D, 70억원), 온누리호 대체 선박 건조(R&D, 27억원) 등
해양	2. 서해 중국 불법구조물 설치 및 해양조사 방해 등으로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	**<시정·처리결과>** □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 중 * 해수부(조사기관)는 해양조사 계획을 사전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공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 가동 **<향후 추진계획>** □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에 맞춰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하게 추진
해양	3. CPTPP 가입 및 한-말 FTA에 따른 우리 어민 예상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한-말 FTA 영향평가 용역 추진관련 관계부처 협의('25.12.18, 12.30) **<향후 추진계획>** □ CPTPP 가입 가시화시, 영향분석 및 피해보완대책 마련 □ 한-말레이시아 FTA 영향평가 연구용역 추진('26.4~7, 잠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4.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배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통일부, 원안위, 기후부) 합동으로 특별조사 시행 중(분기별) ○ 강화도 및 인천 인근해역 7개 조사정점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26.3, 이상없음)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 지속 추진(분기별) □ 필요시 주관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확대 필요성 등 논의
해양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핵종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추가검사 필요성, 검사방법 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등 협의('25.11, '26.2, '26.3) **<향후 추진계획>** □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추가장비 확보 필요성 등 논의
해양	6. 조사대상에 빠져있는 핵종에 대한 검사 및 (검사)장비 추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추가검사 필요성, 검사방법 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등 협의('25.11, '26.2, '26.3) **<향후 추진계획>** □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추가장비 확보 필요성 등 논의
해양	7.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30by30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무안갯벌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26.1), 서해 중부 무인도서 대형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26.2) **<향후 추진계획>** □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속 추진 □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26.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8. 블루카본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원 조성용 사업으로 변질되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갯벌복원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25.12) □ 환경단체 등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지속 소통 **<향후 추진계획>** □ 갯벌 복원 사업 추진 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위적인 공법 사용을 지양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
해양	9.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계획입지 도입,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어업인 상생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지원하는 해상풍력법 시행('26.3) * 어업인·주민 대표가 50% 이상으로 구성 □ 해상풍력 관련 지역수협 조합장 등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2.23(통영), 2.27(부산) **<향후 추진계획>** □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이익공유 제도 마련 등을 위해 기후부와 지속 협의 □ 해상풍력-수산업 상생을 위한 현안 및 정책 건의 등 수산업계 의견 청취(4~5월)
해양	1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해양레저 관련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온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있게 해양레저관광 사업 정상 추진 중 * 11개 연안지역 광역지자체에 해양레저관광 거점(9개소), 해양치유센터(6개소), 거점형 마리나(6개소) 등 추진 예정 또는 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공모 등 방식으로 균형있게 추진 예정
해양	11. 지자체별 해양관광레저 사업의 중복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관광레저 연계벨트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유기적·효율적으로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제1차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중('25.5~) **<향후 추진계획>** □ 제1차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발표('26.下)
해양	12. 전북지역의 특화형 크루즈 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광자원, 접안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 신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26.12) **<향후 추진계획>** □ 기항지 항만여건 및 관광상품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크루즈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 2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 협의 예정
해운	13.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하여 순항 여객운송 사업의 면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정책연구 진행(~'26.10)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마련(~'26.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14. 비지정해변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수욕장 구역 밖 인근 및 비지정해변(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해경, 지자체, '25.8) □ 폐장 후 해수욕장 및 비지정 해변 특별 현장점검 실시('25.9) □ '26년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기본계획(행안부) 계획 수립 시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비지정해변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26.3)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비지정해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시행 요청('26.上) □ 해경·지자체 등 해수욕장 관계기관 회의 시 비지정해변 관리 강화 요청('26.6) 및 합동 현장점검(해경·지자체 등) 실시('26.7~8)
해양	15. 전국 해수욕장 중 동력해상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면허소지자가 태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욕장 안전체계를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전국 해수욕장 전수 조사('25.9) 결과, 주요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외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있는 119 구조요원 등이 같이 상주하여 비상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안전관리요원 면허 미소지 사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장비 소유주인 소방청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운영, 면허 소지가 불필요한 5마력 이하 수상오토바이 보유 등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에 대해 장비 운영 상황 등 현장점검('26.7~8) 및 지자체별 미비점 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16. 해양전시시설 내 장애인 관람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각 해양문화시설별*로 장애인 관람 지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26.1)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향후 추진계획>** □ 조치 완료
해양	17. 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관측 부이(觀測浮標) 점검주기규정을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피해 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주요 관측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 '25.12. / 수협중앙회(해양관측부이 5개소) □ 주요 해양관측부이 점검시기 조정 및 관계기관 통보절차 신설 등을 반영한 「해양관측 업무규정」 개정 완료('26.4.2.)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수협중앙회 등) 간 상호 협조를 위한 정례회의 추진(년 1회)
해양	18. 충남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를 지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지원 예산 반영 * (기간/총사업비) '26~'28 / 75억원(국비 50%) □ 1차년도 사업비의 70%(국비 4억원 중 2.8억원) 교부 완료('26.3월)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잔여 사업비(국비 4억원 중 1.2억원) 교부('26.下) □ 연차별 사업비('27. 23.5억원, '28. 10억원) 교부 및 선박 준공·운항('29.上)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19.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방정부의 해안가 폐기물 처리 지원 예산 확대 * '25. 83.3억원 → '26. 102.4억원(22.9%↑) **<향후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해안가 폐기물 처리 등 국비 지원비율 상향(50%→70%) 등을 적극 추진
수산	20. 경남 남해안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어항관리선 배치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항관리선 12척을 권역별 여건 및 정화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치·운영 중 * 어항관리선 12척 운영 중(인천·경기 1척, 충남·전북 2척, 전남 4척, 강원 2척, 경북 1척, 경남 1척, 제주 1척) **<향후 추진계획>** □ 경남 남해안 지역의 정화수요, 출동거리, 관할구역, 인접 권역 지원 가능성 등을 포함한 어항관리선 배치·운영 방안 검토 추진('26.下.) * 신규 어항관리선 건조 설계와 연계한 어항관리선 운영·배치 검토를 통해 권역별 배치 조정방안 마련
해양	21.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KRISO)	**<시정·처리결과>** □「정보보안을 위한 통신망 분리(망분리) 사업」 추진 중('25~) □ 정보보안 담당인력 전문교육 확대(연 20 → 40시간 이상) 실시('26.3~) **<향후 추진계획>** □「정보보안을 위한 통신망 분리(망분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업」 조기 완료('27.上) * (당초) '27년말 → (변경) '27년 상반기 내 ○ 인증시스템 및 보안 솔루션 도입,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해양	22.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운영 상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25.11, '26.1) **<향후 추진계획>** □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예정('26.4, 감사관실)
해양	23. 극지연구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26년 극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장학생 2명 선정 * 공고(1.12~1.28) → 서류평가(1.29~2.3) → 면접(2.9) → 최종합격자 발표(2.13) **<향후 추진계획>** □ 효과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장학 대상자 수 확대 및 분야 확장* 추진 * 과학 분야 → 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
해양	24.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 작성된 해도의 민간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한강하구 해도' 정보공개요구 재판 국가승소* 최종 결정(3심, '26.2.) * 1·2·3심 모두 '비밀지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 □ 관계기관(국정원) 협의('26.3)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국방부 등) 의견 조회('26년 2분기) □ 민간 공개 여부에 대한 보안심의위원회 개최('26년 3분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25. 해안사구 조사 및 보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해양생태계법」개정 추진 중 * 발의('25.9) →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5.11) **<향후 추진계획>** □ 법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 등 관련 근거 확보 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수산	26.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관련, 어묵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시정・처리결과>** □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26.1) 대비,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미 수출 업체에 대한 증명서 발급 체계를 조기 구축('25.11~)* * 수품원 / '25.11~'26.3 까지 총 1,150건 증명서 발급(어육가공품 116건) ○ 어묵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업계설명회 추진('25.11), 어묵 등 가공품에 대하여 미측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 추진(국제국) **<향후 추진계획>** □ 수협 무역지원센터, 공관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美 통관 사항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
수산	27. MMPA 관련, 혼획저감장치 개발계획 등 적극 수립 필요	**<시정・처리결과>** □ 현재 안강망·자망·트롤 어업을 포함한 5개 업종에 대해 혼획저감장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 중임('23~계속) * (수행기관) 국립수산과학원, (내용) 음향 경고장치, 장력유지형 부표줄, 방류장치, 탈출장치 등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개발이 완료된 혼획저감장치 보급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추진('26.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28. 대미 관세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홍보·마케팅 지원, 물류 지원 등 대미 관세 대응계획 수립('25.10) * '25년 대미 수출 실적 5.2억불(전년동기 대비 9.0% 증가) □ '26년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계획을 수립('26.1)하고, 업계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26.2) **<향후 추진계획>** □ 수산분야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와 현지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 우수수산물 융자 1,564억원(+75억원) ** (신규) K-GIM 상표등록 지원, 한류 연계 마케팅, 글로벌 스포츠 행사 연계 마케팅 등
수산	29.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한일어업협상 재개 노력 지속 및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제도개선 필요사항 검토('25.10)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유류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 민간협의회 정부 옵서버 참석 등 한일어업협상 재개 노력 지속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table>
<tr><th>구분</th><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수산</td><td>30. 뱀장어 CITES 부속서 II 등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td><td><시정・처리3결과>
□ CITES 당사국 총회('25.11.24~ 12.5, 우즈베키스탄)에서 CITES 등재 저지 (반대 100표, 찬성 35표, 기권 8표)
* 현지 대응 : 국장급 양자 회담 12개국, 실무협의 30개국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등재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물장어 자원 관리정책 지속 추진
* 민관협의체 운영, 불법어업 단속, 원산지 관리 강화, 실뱀장어 방류 사업</td></tr>
<tr><td>수산</td><td>31. 해외 위조·모방 수산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td><td><시정・처리결과>
□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 구축*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 수산식품 지식재산 보호 협의회(해수부-지자체-유관기관) 실시 : '25.2, '25.7. '25.9

< 주요 협업사항(안) >
<table>
<tr><th>기관</th><th>해양수산부(수협 및 KMI)</th><th>지식재산처</th></tr>
<tr><td>피해예방</td><td>■ 수출업체 대상 지재권 교육
■ 상표권 등록 비용 지원 및 상담</td><td>■ 지재권 교육 자료 제공
■ 상표권 등록 관련 법률 자문</td></tr>
<tr><td>현지대응</td><td colspan="2">■ 피해가 빈발하는 동남아 등 현지 정부당국과 협업하여 유통매장 단속, 현지인 대상 한국산 구별 켐페인 공동 추진
* 수협 무역지원센터(8개국 11개소)와 지식재산보호원 해외센터(8개국 10개소) 협업</td></tr>
<tr><td>피해지원</td><td>■ 업체와 전문 상담 연결</td><td>■ 업체 전문 상담 및 현지 소송 지원
■ 위조상품 온라인 확산 차단</td></tr>
</table>

<향후 추진계획>
□ 지식재산처, 수협 등 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대응체계 운영 철저</td></tr>
</table>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32. 해외 수산식품 위조·모방에 대해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세 수산식품 기업을 보호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 구축*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 수산식품 지식재산 보호 협의회(해수부-지재처-유관기관) 실시 : '25.2, '25.7. '25.9 **<향후 추진계획>** □ 지식재산처, 수협 등 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대응체계 운영 철저
수산	33.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단기적으로 정부 비축,·할당관세, 할인행사 등으로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어선 TAC 어업관리·양식장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 조성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할인행사 확대(추경 300억원 검토) 추진, 할당관세 매월 정기 배정(2.5만톤), 명절 등 주요시기 비축품 방출 추진(연중)
수산	34. 수산물 할인대전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에 많은 이익이 귀속되고 어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물 할인행사에 중소 유통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 전통시장도 확대 * 참여 중소업체: 31개→ 44개 확대 * 참여 전통시장(설): 128개→ 204개 확대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할인행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지속 추진(연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35. 대형 유통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수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을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물 할인행사에 중소 유통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대상 전통시장도 확대 * 참여 중소업체: 31개→ 44개 확대 * 참여 전통시장(설): 128개→ 204개 확대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할인행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지속 추진(연중)
수산	36.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쿠팡)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정산주기가 늦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대전(수산물 할인행사) 대상 업체에서 쿠팡 제외 *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1년간 참여 제한 ○ 정산주기 30일 이내 업체만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할인행사 지속 추진(연중)
수산	37. 김 제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고 김 수출지원 및 김산업 성장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HSK코드 개정안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25.11.~12.) **<향후 추진계획>** □ 재경부 HSK코드 개정 수요조사 시 수요 제출 예정 - (검토안) 현행 조제김→코드분리 조미김, 구운김, 스낵김 / 코드신설 냉동김밥
수산	38.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사업 추진 효과 관리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 재선정('25.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성과, 수출실적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26년 계획 수립 완료('26.1) **<향후 추진계획>** □ 주기적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 지속 추진 * 「수산식품산업법」과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
수산	39.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공개 추진 TF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제도개선 추진 □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논의('26.3) * 국내·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공개 사례는 없으며 소비자에게 가격·원산지 외 과도한 정보는 실효성 낮을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 TF 2차 정기회의 개최('26.6) * 소비자 알권리와 수입·유통업체의 영업상 비밀 보호의 조화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공개 가능 항목 논의 ** 정보 공개방식(기존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시스템 등) 및 소비자접근방식(사업자등록번호검색, 업체명 검색 등)에 대한 논의
수산	4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상 소비자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이력 조회시스템을 보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공개 추진 TF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제도개선 추진 □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논의('2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내·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공개 사례는 없으며 소비자에게 가격·원산지 외 과도한 정보는 실효성 낮을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 TF 2차 정기회의 개최('26.6) * 소비자 알권리와 수입·유통업체의 영업상 비밀 보호의 조화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공개 가능 항목 논의 ** 정보 공개방식(기존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시스템 등) 및 소비자접근방식(사업자등록번호검색, 업체명 검색 등)에 대한 논의
수산	41. 수산물이력제 관리 인력 충원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수산물이력제 관리 비용,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예산 확대 * ('25) 2,940백만원 → ('26) 3,538백만원 □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양식장의 이력제 참여 및 사후관리 부담 완화로 관리 인력 수요 절감('26.1.) * 양식장 기록 대상 정보 중 입식일·량 삭제, HACCP 등 인증 시 약제 사용내역 기록 의무 면제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개정*을 통한 대형유통사 다점포 일괄 등록 허용 등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관리 인력 확충 효과 제고('26.5 예정) * 동일한 유통망을 지닌 모든 지점이 개별적으로 등록하던 것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 규정 신설
수산	42. 중국산 활바지락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7~8월에 중국산 활바지락 수입검역 불합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년도 하계철 정밀검사 비율을 30%로 상향*하여 수입검역 강화 실시 * (**기존**) 연간 15% → (**개선**) 연간 15%, **7~8월 30%**로 집중 관리
수산	43. 국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의 일본산 둔갑 및 혼입 유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자원 보호 의무와 수입 정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기 성어기 전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 기관 협력 * (관세청) 일시적 통관 제한 또는 금지 → 안보 등의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 * (식약처) 수입 보류·금지 → 수입식품이 위해하거나 병원체에 오염된 경우 등에만 가능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품목으로 활대게(암컷) 추가('25.6.) □ 암컷 활대게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25.10~'25.11) 및 대게 성어기 대비 국내 암컷대게 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25.11~'26.2) □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농해수위 상정, 「수입식품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계류 *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유통 금지 **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수입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경우 수입신고 보류 조치 가능 **<향후 추진계획>** □ 활대게(암컷)의 수입·유통과정 추적과 온라인 암컷대게 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수입식품법」·「수산물유통법」 개정 시 적극 대응·협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44. 어선 화재폭발 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선박(어선포함) 화재・폭발사고 대응방안 수립 완료('25.10) **<향후 추진계획>** □ 자동소화시스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697백만원, 계속) □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한 주요 업종별 수협 소속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강화 * 취약시기 어선안전 점검(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라 6~8월 점검예정)
수산	45.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정착 및 감독관 수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9명→30명) 및 지방청 배치 완료('25.12) □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여비, 임차료 등 예산 반영 지원('25 180백만 원 → '26 444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어선원안전감독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현장감독 지속 추진 * 인명피해(사망·실종)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어선 1,650척 등 집중점검 □ 감독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 이원택 의원발의('24.9, 소위 미상정) / 국회 및 법무부 지속 협의('26.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해사	46.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등으로 인한 우리 어선의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합참·해경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상황 접수 시 우리 어선 대상 신속 전파 실시 **<향후 추진계획>** □ 합참·해경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전파체계 운영 지속
수산	47.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상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위해 어선원 소음 노출 현황 연구용역* 추진('26.1~'27.1) * '26.1~'27.1/ 4억원/ 어선 300척 소음측정 **<향후 추진계획>** □ 소음 노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난청 재해보상심사 신속 추진
수산	48. 어업인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어업인 산재보험 통계를 작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업재해 실태조사시, 고용부 산재보험 통계 활용 추진 **<향후 추진계획>** □ '27년 어업재해 실태조사(2년주기) 시, 타부처 통계자료 연계 추진
수산	4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어민 부담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피해가 많은 고수온 특약 보험료 국비지원 증액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고수온 특약보험 국비지원 확대 재정당국 지속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5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지급 불가내역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급불가 사유별 상세코드 신설, 전산 반영을 위한 테스트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정책보험 전산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해양수산 AX 신규발굴 후 '27년 예산안에 반영 노력
수산	5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피해 특약 가입 관련 어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피해가 많은 고수온 특약 보험료 국비지원 증액 추진 **<향후 추진계획>** □ 고수온 특약보험 국비지원 확대 재정당국 지속 협의 추진
수산	52.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관측자료가 부재한 경우 대체 판정 기준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의견수렴을 위한 양식보험 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실시('25.11)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안) 마련('26.7)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26.9~)
수산	53.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게 패류독소 조사체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25.10) □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강화방안 마련('25.12) 및 추진('26~) * 패류독소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1~2월 검출 우려지역**에 대해 조사 주기 확대(기존 월1회 → 강화 월2회) ** 부산, 경남 진해만 및 거제 일원 등 **<향후 추진계획>** □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 및 조사체계 적합성 여부 상시 확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54. 어업인의 폐어구 반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업인의 폐어구 유실율(30%) 및 경제적 손실 비용 보전을 위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및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 및 수용성 제고 * 어구를 반환하는 어업인에게 보증금 외 일정 규모의 포인트(700~1,300원) 지급 **<향후 추진계획>** □ 폐어구 반납 촉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보 노력 * 민간기부금 재원 마련 및 '27년 인센티브 예산 반영을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 적극 추진
수산	55. 어구부표 보증금 환급을 위한 폐어구 반환 장소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 폐어구 반납장소(192개소) 운영 지원 및 신규 반납장소 8개소 추가 지정('25.12.)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수협 등 협조하에 폐어구 반환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 및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26.4) □ 무인반납시스템 보급 및 운영 지원으로 폐어구 반납장소 인프라 확충('26, 5대 보급)
수산	56. 수산부산물 자원화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자원화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26.3) **<향후 추진계획>** □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26.下)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및 자원화시설 건립(～'28) *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 확대(패류 6종 → 패류 전체), 재활용 유형 추가 ** 비식용해조류 자원화시설, 전라남도 자원화 시설 구축('27),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 센터 조성('28)
수산	5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양식산업발전법 등) 및 이행 여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25.12) 및 조성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식산업발전법 개정 용역 추진('25.4～11)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의 육해상 테스트베드 건립 및 기술 현장실증 등 차질없이 추진 □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26.6)
수산	58.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품종을 개발할 것	**<시정・처리결과>** □ 넙치, 전복, 김 등 기존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연구 * 벤자리, 바리류, 참조기 등 기후변화 환경따라 새롭게 양식이 가능해진 품종을 대상으로 종자생산 등 양식산업 기반 연구 수행(수과원) **<향후 추진계획>** □ 연구성과 조기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상용화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59. 수온상승에 따른 해역별 어종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업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권역별 포럼 및 현장 방문('25.2.~6.)* 으로 어업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대응 어종별 세부 대응 방안 수립('25.12.) * 전남(2.27), 제주(3.6), 전북·충남(3.20), 경기·인천(4.11), 부산·경남(4.24~25), 강원(5.16), 경북·울산(5.30), 전체(6.26)
수산	60.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TAC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 **<향후 추진계획>** □ '26/'27어기 TAC 시행계획과 중장기 확대 방안 수립('26.6)
수산	61.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TAC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 **<향후 추진계획>** □ '26/'27어기 TAC 시행계획과 중장기 확대 방안 수립('26.6)
수산	62.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시 현행 꽃게와 붉은 대게 외에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TAC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 **<향후 추진계획>** □ '26/'27어기 TAC 시행계획과 중장기 확대 방안 수립('26.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63. 유인책 마련 및 어업인 생활안정대책 강화 등 어선 감척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척지원금* 과세 해소 및 폐업지원금 기준액 근거 마련(완료) 후 후속조치 * 폐업지원금+어선・어구 잔존가치 ○ (과세)「소득세법시행령」개정('26.3.1 시행)에 따라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경비율 60%)'에서 '사업소득(경비율 89~96%)'으로 변경하고, 가산세 감면 등 협의 ○ (폐업지원금)「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26.3.10.개정, '26.9.11.시행)에 따라 부령 개정 추진 * 폐업지원금 평가액이 업종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할 수 있도록 규정 **<향후 추진계획>** □ 의견수렴 및「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하위법령 개정(~'26.8.)
수산	64. 감척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확대에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단기 집중감척 방안 마련을 위한 적정규모 분석 및 집중감척 검토안 마련('26.3.)을 통한 예산확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6.4.), 예산 확보 대응(계속), 연근해어선 집중감척 방안 마련('26.下)
수산	65. 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시정・처리결과>** □「소득세법시행령」개정('26.3.1 시행)에 따라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경비율 60%)'에서 '사업소득(경비율 89~9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으로 변경하고, 가산세 감면*등 협의 * 국세청 협의 결과: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은 긍정적, 무기장 가산세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 가산세 관련 국세청 협의(계속) □ 감척지원금 비과세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협력 * 임미애 의원('25.7.22), 문금주 의원('25.8.27)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26.3월 발의 검토중)
수산	66. 어선청년임대 사업에 정부의 어선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공기관의 어선 직접 매입 후 임대방식 도입을 위한「수산업법」개정안 검토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어선 직접 매입 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수산업법」개정 추진(~'26.6.) □ 공공기관의 어선 직접 매입 후 임대사업방안 마련(~'26.10.)
수산	67. 어선 감척 관련하여 정부가 감척 대상 어선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척어선을 다시 어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및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추진 곤란 **<향후 추진계획>** □ 청년의 어선어업 진입 지원을 위해 어선청년임대 지원대상 확대 및 공공기관의 어선 직접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68. 소송으로 중단된 국가어업지도선의 건조를 재개하고,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여 해역 공백을 최소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건조재개 사업비가 반영되어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를 통해 계약체결 후 공사 진행 중 * '26년 예산에 건조재개 사업비 262억원(잔여 공정 526억원 x 49.9%) 반영 ** 조달청 입찰공고('25.12.24)→제안서평가('26.2.)→건조재개 계약체결('26.3.5.) □ 노후지도선 안전점검 강화대책을 수립*('26.1) 하여 운영 * 안전성 상태평가, 유지보수, 임무해역 조정 등 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 대체건조*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적기 투입을 위해 공정관리 추진 * 사업(계약)기간 '26.3～'28.2.
수산	69.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인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가어업지도선은 선령 25년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건조 추진 중 * '26.기준 5척 대체건조 추진 중(9백톤급 4척, 19백톤급 1척) □ 4,500톤급 신규 어업지도선 취항('25년3척)에 따라 현장 인력 증원을 '27년도 정기직제 수요로 요청 *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에 확연히 미달되는 어업지도선 5척 인력증원 요청 (33명) 10백톤급(2척) :16→22명 / 45백톤급(3척) 21명→28명 **<향후 추진계획>** □ 대체건조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적기 투입을 위한 공정관리* 및 인력 확보 노력 * 연 4회 건조사, 어업관리단 등과 공정관리 협의회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70.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재 간척지스마트 양식단지조성, 내수면창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추진 중이며, 지역별 수산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완료('26.3.) **<향후 추진계획>** □ ICT 기반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구축 및 고도화, 신품종개발, 어업허가 신고 제도개선을 위한 내수면어업법 개정('26.下), 제6차 내수면어업 진흥기본계획('27~'31)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 * (기간) '26.4.~12, (금액) 2억원 **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운용방향 이행 및 지역연계형 내수면산업 추진현황 보고(11월)
수산	71. 내수면 관광·레저까지 연계한 내수면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지역 연계형 사업 등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운용방향」을 차질없이 이행 * 간척지 활용 스마트 양식단지조성(충남 당진/ '24~'27) 및 내수면 창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전북 김제/'24~27) 실시 설계 진행 중, 청년 창업·임대형양식단지 조성(3개소(안동, 고흥, 신안)/ '25~'27) 기본계획 수립,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산업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충북 보은/ '24~'26) 등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6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7~'31) 수립 용역('26.4)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72.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인한 내수면어업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관리와 피해 예방대책 등 내수면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25.11) * 실태조사, 피해 예방 시설(경음기, 방조망) 설치 비용 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 □ 유해야생동물 관리와 피해 예방대책 등 내수면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방안등을 담은 제6차 내수면어업 진흥기본계획('27~'31) 수립 용역('26.4) 추진
수산	73. 내수면 어도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불량어도 비율을 낮추고, 해수부가 지자체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되도록 노력 * 어도 실태조사,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26년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 구축 예산 증액(2억원) 확보 **<향후 추진계획>** □ 그간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였으나, 조속한 개선을 위해 개선되지 않은 어도에 대해서,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이행 및 조치 독려, 최종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수산	74. 내수면 양식 어가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내수면어가 지원 필요성 검토를 위해 내수면어가 배합사료 사용 실태조사('26.3~12.) 수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수산	75. 전남 지역 수산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진흥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출·유통, 어촌, 수산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지원 중 * 수산식품 수출단지(목포, 1,137억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고흥 3개소, 신안 5개소 총 3,241억원) 등 **<향후 추진계획>** □ 전남 지역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 추가 사업 발굴 * 어선건조진흥단지, 김 품목 연구센터 설립 등
수산	76. 전북에 김 산업 진흥 지구를 지정하고 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가공설비지원사업'에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김 가공설비 신설, 교체 지원 - '26년 전북도에 김 건조기(1개소, 국비 3억원), 전품목(7개소, 국비 1.8억원) 등 총 4.8억원 배정 **<향후 추진계획>** □ **(김산업진흥지구)** 김산업 진흥구역 추가지정 가능 여부 검토 □ **(가공설비지원)**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충분한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 수요와 형평성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김산업 육성 지원 * '27년도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실시 예정('26.4.~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77. 영덕항 강구 등의 지역을 참다랑어 허브항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냉동·제빙 등 저온저장 시설 건립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26년 신규 예산(총사업비 184억원, 국비 50%) 반영 완료('25.12.) * 사업명: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내 경북권 거점위판장현대화지원(강구) **<향후 추진계획>** □ 조성사업 적기 추진 관리
수산	78. 제주 오분자기 생산량 감소 대응을 위해 산란·서식장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신규 조성('26~'30, 제주 한림) 사업 예산 반영 * 예산: 50억 원(국비 5 : 지방비 5) **<향후 추진계획>** □ 조성사업 적기 진행 관리
수산	79. 경남 국가중요어업유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타 박물관과의 유사성 여부, 적정 부지·규모 등을 종합하여 추진 검토 **<향후 추진계획>** □ 필요시 예산 당국과 협의
수산	80. 부안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 추진 * '26년 정부안에 1차년도 실시설계비(15억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낚시여가지구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26.3.1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7년 예산 반영 지속 추진
수산	81. 수산물 위판장의 원활한 현대화를 위해 예산 집행률 제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내 저온·친환경 위판장, 수산물위생안전 물류지원 사업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25.11)
수산	82.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시설 설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노후화된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26년 신규 예산(총사업비 60억원, 국비 50%) 반영 완료('25.12.) * 사업명: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내 삼천포 거점위판장현대화지원
수산	83. 자갈치시장 무상사용 협약기간 연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법* 상 무상사용 최대기간(20년)이 도래하여 시장상인회의 신규 사용수익허가 취득과 이에 따른 사용료 산출 방안을 검토 중(~'26.11월중, 부산시) *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리법」 제21조제1항 개정 필요
수산	84. 새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발표('25.12)
수산	85. 어촌생활환경정비 방침을 수립하여 어촌 빈집 문제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25.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86. 어촌뉴딜사업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 추진실적 점검(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25.5, 7, 10, 12)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집행관리 방안*('26.3) 시행중으로 집행 부진시에는 총사업비 감액 등 조치를 통한 사업관리 중 * 총사업비 감액(최대 10%), 부진 정도에 따른 신규 사업 신청 제한 등 □ 전문기관(KMI)을 통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중(매년) **<향후 추진계획>** □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관리 지속 추진 * 집행부진사업('26.3월 기준) 현장점검('26.3~4) □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속 추진
수산	87. 어촌 인력 부족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지역별 편차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법무부에서 매년 반기별로 지자체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후 배정심사협의회(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등)를 통해 배정 인원 확정 중 * 지역별 수산업 현황,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 **<향후 추진계획>** □ 계절근로자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88. 어촌, 어항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활용 안전예측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민안전을 위한 AI기반 국가어항 위험관리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중 * (사업규모)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00%), '27~'31년(5개년간) **(진행상황) '25년 하반기 R&D 기획연구 과제로 채택되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과제 수행(~'26.5) **<향후 추진계획>** □ '27년 정부 예산(안)으로 1차분 39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확보 추진 * '27년(39억원) → '28년(52억원) → '29년(69억원) → 30년(60억원) → 31년(30억원
수산	8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정한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1차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제1차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26.4)
수산	90. 어업 정착을 위한 어업경영비가 농업 분야보다 많이 소요되는 어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어업인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업 특성 및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귀어창업 대출기준 및 지원요건 등 개선 검토 ○ (어촌정착자금지원)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추진 * (**기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개선**)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만기 65세) ○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공급 확대*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6) 1,080억원 → ('27) 1,200억원 * 5년거치·20년상환/금리1.5%/최대 5억원 **<향후 추진계획>** □ 대출 상환기간 연장, 공급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
수산	91. 어업인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촌계원 자격유지기간 완화 특례 (10년 이상 → 5년)를 영구 제도화하고, 신청연령 상한(79세 → 84세)을 상향하기 위한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서삼석의원, '26.3.9) □ 전국 어촌계를 대상으로 직불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26.4~5) 개최 등 정책홍보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재정당국 설명(4월~) 등을 거쳐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
수산	92. 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지원 필요	**<시정・처리결과>**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시 어업인에게 팜플릿을 배포하고 수협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 추진('25.12) **<향후 추진계획>** □ 어업경영체 업무 연계 및 수협 협조를 통한 지속 홍보 추진 * 홍보 유인물 제작·배부('26.5.~)
수산	93.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조건 소급 적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3년 이전 수산경영자금 대출이용자*(약 2,862명)에 대해 개선된 대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조건 소급 적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 ('23. 前) 3년 거치·7년 상환/금리 2.0% → ('23. 後) 5년 거치 20년 상환/금리 1.5% **<향후 추진계획>** □ 농업경영인과의 형평성 문제*, 어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 동일한 정책자금인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기존이용자에 대해 대출조건 소급 적용('25)
수산	94. 2023년 이전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사항의 소급적용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23년 이전 수산경영자금 대출이용자*(약 2,862명)에 대해 개선된 대출조건 소급 적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 ('23. 前) 3년 거치·7년 상환/금리 2.0% → ('23. 後) 5년 거치 20년 상환/금리 1.5% **<향후 추진계획>** □ 농업경영인과의 형평성 문제*, 어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 동일한 정책자금인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기존이용자에 대해 대출조건 소급 적용('25)
수산	95.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산분야에 어업용(농사용) 전기 적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업 시설과 유사하나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수산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등과 지속 협의 추진 * 수산업 시설 적용 전력 현황

<table>
<tr><th>구분</th><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td><td></td><td>
<table>
<tr><th>수산업 시설</th><th>적용 전력</th><th>비 고</th></tr>
<tr><td>활어위판장 해수 양·배수 펌프 등</td><td>일반용</td><td>농업용 양·배수 펌프의 경우 농사용(갑) 적용</td></tr>
<tr><td rowspan="2">저온 보관 시설</td><td>산업용 (개인소유·운영)</td><td rowspan="2">농작물 보관시설은 소유·운영주체 제한 없이 농사용(을) 적용</td></tr>
<tr><td>농사용(을) (수협/어촌계 단독 소유·운영)</td></tr>
<tr><td>어류 폐사어처리시설</td><td>산업용</td><td>축산물 가축분뇨 처리장은 농사용(을) 적용</td></tr>
</table>
<향후 추진계획>
□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26.2분기)
</td></tr>
<tr><td>수산</td><td>96. 수산관계법령 상 1차 위반만으로 허가취소토록 하는 처분 기준을 정비할 것</td><td>
<시정・처리결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내 1차 위반 시 허가취소 규정의 적절성 등 검토

<향후 추진계획>
□ 해당 규정의 처분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와 전체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 확인 및 필요시 개선 예정
※ 다만, 허가취소 사유 중 '외국과의 어업협정을 위반하여 나포 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어업협정 미타결의 원인이 되는 등 전체 어업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엄중 처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 필요
</td></tr>
<tr><td>수산</td><td>97. 소금산업에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것</td><td>
<시정・처리결과>
□ KMI 소금 유통·관측 정보 제공 및 천일염 수산 관측* 조치 완료
* (경과) '23년 기초연구 → '24년 관측설계 → '25년 천일염 수산 관측 추진
</td></tr>
</table>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 관리 중 * 제26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적발된 경우 인증 및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가능토록 규정 **<향후 추진계획>** □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R&D* 추진 위한 예산 확보 추진('26.4.~) * 천일염산업 지속가능형 체계구축(염전 표준모델 개발, 염전자동화 생산모델개발, 가공기술 개발)
수산	98. 제6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6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계획 수립('26.1) → 용역업체 선정('26.3)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등 추진('26.4~) **<향후 추진계획>** □ 여성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26.12)
수산	99. 현행 여성어업인 육성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6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계획 수립('26.1) → 용역업체 선정('26.3)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등 추진('26.4~) **<향후 추진계획>** □ 여성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26.12)
수산	100.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담긴 어민들의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2025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내 사업중요도* 의견을 반영 수립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어업인들이 ▲청년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어획량 관리 강화, ▲온라인 거래 등 유통 판로 확대 ▲ 어업 재해 대응 강화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확인, 이를 반영
수산	101.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섬마을 기본소득 사업 접목 필요	**<시정・처리결과>** □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의원, '26.3) **<향후 추진계획>** □ 재정당국 설명(4월~) 등을 거쳐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
수산	102. 수협 부당대출 외부감사 필요	**<시정・처리결과>** □ 부당대출 의혹 관련 대출 취급 적법성·적정성 검증을 위해 수협중앙회 자체감사 실시('25.10.) □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실시('25.11~'26.3) * (사전검사) '25.11.10.~11.14. (본검사) '25.11.24.~'26.1.9. (추가검사) '26.2.23.~3.6.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
수산	103. 부실경영이 지속되는 추자수협의 경영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추자도수협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의결 ○ 추자도수협은 자금 지원 조건인 '조합 자생 계획' 마련 중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하여 순자본비율 2%기준 충족에 필요한 자본부족액 지원 (기금위 9.29. 의결, 추자도 9억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조합 자생 계획 수립 시 경영 적정성·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자금 지원
수산	104.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제고를 위한 보급·지원물량 확보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26년 사업개편*을 통해 어상자 지원 물량 전년대비 약 2배 확대 * '25년 84만개 → '26 200만개 **<향후 추진계획>** □ '27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 지원 확대 및 전환 가속화 추진('26.4~) * '26년 800원 → '27년 1,600원(예상)
수산	105 플라스틱 어상자 예산 확대 또는 현장 적용 방안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현장 방문* 및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현장 적용 검토 방안 마련 중 * 여수조합('25.11) ** 플라스틱 어상자 회수율 제고방안 연구 용역('25.10~'26.6) **<향후 추진계획>** □ 지원단가 인상 등 예산 확보 추진('26.5~) □ 연구용역 종료 후 현장적용 방안 개선안 마련('26.7~12.)
수산	106. 긴급방류 시 동일 해역에서 일시적 대량 방류를 제한하고 있는 조피볼락 관련 지침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사('26.1) 결과, 지침 해석 차이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격 지침과 달리 방류한 경우 확인* * 다만, 분산 방류 취지에는 부합 **<향후 추진계획>** □ 방류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없도록 지침 개정 예정* * 반경 1km 이상 → 방류 지점 간 직선 거리 1km 이상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07. 긴급방류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중간어 단가 신설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긴급방류 중간어 단가 신설 등 재난지원금 단가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재해어가 생산비용 실태조사('26.3~9), 어업재해 복구비용 산정 개선방안 연구(계약 절차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수산	108. 서해 NLL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재개를 위해 양국어선 조업실태 파악 및 양국 간 지도·단속 협력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중측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세부일정 협의
수산	109. 타 지역 어선의 추자도 해역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추자도 해역 불법조업(조업금지구역, 그물코 위반 등) 및 조업분쟁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25.11.12~12.18(37일간) / 제주 추자도 일원 / 국가지도선 5척, 지자체 지도선 1척 투입 ** 대형저인망 위차발신장치 미작동, 연안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건 검거 **<향후 추진계획>** □ 추자도 인근 해역 국가·지방어업 지도선 활동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10. 안전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서해5도 백령도 북방 어장을 확장하고 야간 조업시간을 연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서해5도 어장이 처음 설정('275㎢, '64.6)된 이후 현재까지 17차례 변경되어 면적이 7.3배(2,024㎢) 확장* 되었으며, 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 중 * 백령·대청·소청도 어장면적: 368㎢ ** 백령도 야간조업시간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 추가 어장확장과 야간조업 시간 연장은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국방부 및 해경은 북한의 잦은 GPS 교란 등으로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시 월북·피랍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부정적 **<향후 추진계획>** □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방부 및 해경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수산	111. 낚시어선에도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도입하고 낚시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낚시 어획량 할당제 도입을 위한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추진 □ 낚시어선 어획 실적 보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26.3) **<향후 추진계획>** □ 낚시어선 어획량조사 지속 추진 및 법령 개정 심의 대응 □ 낚시관리법 관련 금지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해경,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12. 낚시로 인한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시정·처리결과>** □ 낚시 어획량 할당제 도입을 위한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추진 □ 낚시어선 어획 실적 보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완료('26.3.19) **<향후 추진계획>** □ 낚시어선 어획량조사 지속 추진 및 법령 개정 심의 대응
수산	113. 전복 생산량 증대로 전복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새싹기업 도약지원(14.5억원), 유망상품화(44억원) 사업 추진으로 전복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향후 추진계획>** □ 국제박람회('26.上)와 K-씨푸드 팝업스토어('26.下) 홍보·마케팅 지원
수산	114. 글로벌 김산업 주도권 사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김 가공시설의 자동화·스마트화 추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미김 전환 가공률을 높이고, 융자사업 예산을 확대** * 스마트공장: ('25) 국비 30억(16개소, 개소당 최대 2억원) → ('26) 사업 추진 중 ** 가공시설 융자사업: ('25) 145 → ('26) 294억원('26.2. 사업자 모집 중), 업체당 최대 7억원,(고정금리 2.5~3%) **<향후 추진계획>** □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등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15. 김산업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도 김산업 시행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관련 내용* 반영 *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25 1개소 → '26 4개소, 임금체불 방지 및 균일한 숙식 여건 확보 효과) 등 **<향후 추진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속 확대 노력
수산	116. 수산기자재 관련 법안 시행되면 준비 철저 필요	**<시정·처리결과>**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6.3) **<향후 처리계획>** □ 하위법령 마련 용역('26.4~9)을 통해 기자재법 시행 준비 추진
수산	117.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어업인 경영안정자금과 비축자금은 유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재정당국 협의단계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비축사업비** 감액 반영 * ('25) 800억원→('26) 200억원(△600억원) ** ('25) 1,750억원→('26) 1,000억원(△750억원) **<향후 추진계획>** □ 비축사업의 경우 사업필요성 등을 보완하여 내년도 예산 증액 노력 ○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 집행률 : ('24) 19.6% → ('25) 6.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18.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서삼석의원, '25.10) * 상임위 회부('25.12)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논의 시 우리부 입장 설명 * 수협 본사 이전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
수산	119. 납입 대비 보험금 지급이 저조한 수협 재해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협 재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높아 재정이 불안정하며, 기금 설치 등 새로운 제도 신설시 장시간 소요 **<향후 추진계획>** □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양식보험 제도개선* 추진 * 보험금 선지급 확대, 기후이상 보험료 할증 제외, 보험상품 다양화 등
수산	120.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의혹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실험조작 등 제기된 의혹 설명('25.10) * (실험조작) 2012.6 발주청, 설계사, 관동대가 합동으로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단면의 안전성 확보 확인 ** (설계변경 요청기각) 발주처는 시공사 보완사항 내용에 하자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기각 결정(절차상 문제 없음) *** (설계, 감리업체 동일) 당시 국가계약법에 의거 태풍피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로 정상 결정 **<향후 추진계획>** □ 사업준공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21.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타 입법례와 형평성 및 타당성 등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손실보상액, 손실보상 항목, 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26.5~)
수산	122. 마을어장에서 생산하는 바지락 등 패류도 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	**<시정·처리결과>** □ 바지락 등 피해산정이 어려운 마을어업 수산물에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4~8) **<향후 추진계획>** □ 지수형 보험* 연구 결과 활용, 상품 개발 추진(~'28) * 사전에 합의된 지표(수온·강우량 등)가 일정한 정량조건 충족시 손해평가 없이 보험금 지급
수산	123. 지특회계로 이관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자체와 협조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지특회계 이관 후 예산안 편성절차* 변경사항을 전국 지자체 안내 및 사업 독려('26.2) * (시도) 해수부 및 지방시대위에 예산신청서 제출(4월) → (지방시대위) 평가결과 시도 및 해수부 송부 → (해수부) 기획처 예산요구(5월) → (기획처) 예산검토, 국회제출(6~9월)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수부, 지방시대위에 예산신청서 제출시 적극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24. 단김 양식 및 위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김 양식장에서 불법 종자 생산·위판·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해경, 수협, 수과원 등 합동단속 요청('25.11) **<향후 추진계획>** □ 유통 전 단계 불법종자(단김 등)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국내 단김 서식여부 및 단김 유통 여부 지속 모니터링 □ 고수온 서식 가능한 단김을 대체할 수 있는 고수온 내성 김 품종개발 * 기후변화대응 김 종자생산 고도화 및 고수온 내성 품종 산업화 연구('26~'30, 20억원)
수산	12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15조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범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운영하는 자원관리 선박 추가 가능여부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 유관단체 등과 면세유 공급 가능 여부 등 논의 추진('26.上) *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산	126.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등 추자도에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를 통해 '추자도 내 마을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필요' 안내('25.11) **<향후 추진계획>** □ 해당 마을이 고도화 사업 공모에 참여 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	127. 국립공원 내 양식장 월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환경 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 **<향후 추진계획>** □ 국립공원위원회 보고, 기후부-해수부 협의체 활용 등을 통해 월동 확대 방안 모색 추진
수산	128.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월동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환경 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 **<향후 추진계획>** □ 국립공원위원회 보고, 기후부-해수부 협의체 활용 등을 통해 월동 확대 방안 모색 추진
수산	129.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의 기본급 상향 등 처우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직급별 비율 조정, 기본급 인상 등 재정당국 협의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 편성 시 검토 추진
수산	130.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적극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5.12 개정) ○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5톤 미만 어선의 운항자에 대한 적성검사 시범운영 사업 도입 □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 및 절차 마련
북극	131.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과거 북극항로 운항실패 요인, 문제점 등을 찾아 극복 대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인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26.1)을 통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 (협의회 참여기업) HMM, 현대중공업 및 현대모비스 등 19개 기업(지속 확대 중) **<향후 추진계획>** □ 북극항로 관련국 협력 등 시범운항 사전준비(계속)
북극	132. 북극항로 개척 관련 범정부 협력체 및 민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추진본부* 설립('25.12) * (구성) 행안부·국토부 등 10개 부처,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 및 극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 북극항로 활성화 관련 해운선사, 물류업계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26.1) * (협의회 기업) HMM, 현대중공업 및 현대모비스 등 19개 기업 참여(지속 확대 중) **<향후 추진계획>** □ '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지속 운영 □ 북극항로 정책 자문청취 및 민관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개최 추진('26.上)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북극	133. 북극항로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위험요인, 경제성 확보 및 외교적인 문제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북극항로 개척에 접근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 위험요인, 운항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시범운항 준비(계속) ○ 북극항로 관련국 협력 전개(계속) **<향후 추진계획>** □ 북극항로 관련국 협력 등 시범운항 사전준비(계속)
해사	134. 북극항로의 환경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EU 녹색해운항로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EU 회원국인 덴마크와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5.11) **<향후 추진계획>** □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해 기존 항로 외에 한-EU 간 북극항로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추진(중장기)
북극	135. 북극항로 개척 관련 데이터 구축, 항로 안전 제공 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를 포항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 데이터 및 항로 안전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한 (가칭)「북극항로 특별법」 의원 발의 중(8명) ○ 의원발의 제정 법률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 의견조회 및 국회 심의 대응 **<향후 추진계획>** □ 법률안 제정 이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검토 추진('26.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36.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대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25.10) 및 26년도 펀드 운영지침 반영('25.12) ○ (펀드 자금 지원 확대) 철강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선박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하여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 2.5배** 상향 * 선박건조용 철강 후판 가격($/ton) : ('20) 662 → ('22) 1,850 → ('24) 1,566('20년 2.5배) ** (30%) 60(현행)→150(개선)억원 미만, (50%) 60~120억원 →150~300억원, (60%) 120→300억원 초과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 선정('26.4) 및 2차 공모('26.6)
해운	137. 수리·정비 등으로 여객선 미운항 시 대체선 투입 의무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선박 수리 등으로 항로 단절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운법 개정 추진 중 (상임위 계류) □ 여객선 임시 단절 시 인근항로 여객선에 해당 도서를 경유토록 운항명령 제도 적극 활용, 중장기적으로 공영제 도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여객선 운항명령) 운항명령 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세부기준 검토 시행('26.4) □ (여객선 공영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상임위 계류중) 통과시 공공기관을 통해 예비 여객선 운영 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38. 연안여객선이 사고·수리 등으로 미운항할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선박 수리 등으로 항로 단절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운법 개정 추진 중 (상임위 계류) □ 여객선 임시 단절 시 인근항로 여객선에 해당 도서를 경유토록 운항명령 제도 적극 활용, 중장기적으로 공영제 도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여객선 운항명령) 운항명령 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세부기준 검토 시행('26.4) □ (여객선 공영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상임위 계류중) 통과시 공공기관을 통해 예비 여객선 운영 시행
해운	139. 울릉도 항로의 미운영과 관련하여 울릉도 거주주민 및 관광객 등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울릉군), 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선을 확보하여 운항 조치 (썬라이즈호, '25.12.9.~20.(12일간) 대체운항)
해운	140. 연안해운의 여객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법 개정 추진 * 해운법 개정안(서삼석, 장동혁, 윤준병) 관계기관 협의 완료('26.2) **<향후 추진계획>** □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추진단 구성('26.上) □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및 하위 법령 개정추진('2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41. 여객선 요금제 할인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경로운임 적용 등 운임지원제 개편방안 수립('26.3) 및 관광객 운임 지원 시행을 위한 재정당국 협의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운임지원제 개편방안 시행을 위해 재정당국와 예산협의 추진(연중)
해운	142. 내항여객선 안전을 위한 선원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선원 안전·보건 기준 관련 추진경과 및 추진 계획 등 설명('25.10) **<향후 추진계획>** □ 선내 안전·보건 지원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26.下)
해운	143.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등 내항선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안해운과, 선원정책과, 해운조합 T/F 구성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등 내항선원 처우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6.6)
해운	144. ILO 어선원 노동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선원 노동협약 관련 노정 협력 추진 * ILO 주관 워크숍('26.3.) 참석 **<향후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협약 비준 검토, 협약내용 단계적 수용*을 위해 노력 *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수용 역량 등 고려 필요 □ 근로기준, 재해보상 등 협약의 주요 사항을 국내법에 지속 추가 반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45. 선원노동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선원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선원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안('24.7.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안('25.6.25.) **<향후 추진계획>** □ 이행강제금 도입 「선원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 ○ 선원 근로환경 개선, 「선원법」 위반사항 지속 점검, 고충 상담도 병행 실시
해운	146.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율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25.12.) □ 개정안 관련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속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 최종 판결 등 소송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해운법 개정을 위해 공정위와 지속 협의
해운	147. 연안화물선사와 화주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우수 선·화주 인증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 조세소위 논의('25.11) **<향후 추진계획>** □ 해운법 하위 법령 개정 추진('26.上) □ 인증심사 기준 마련('26.下) ○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심사항목별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48.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륙도서민에 추가 배송비를 부당하게 부과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 및 부당액 환수 등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택배사 등 부당행위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지적사항 전달 후 조치 요청* * 환수 금액이 적어 별도의 환수조치 없이 종결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 택배비 지원조건, 신청 방식 등 섬 주민이 택배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개선*·시행('26.2) * 신청서류 간소화(증빙서류 2종 → 1종), 지원대상 확대(자녀 등 지인이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 지자체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의무화
해운	149. 연륙섬 주민에게 청구되는 추가택배비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후 환수조치 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택배사 등 부당행위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지적사항 전달 후 조치 요청* * 환수 금액이 적어 별도의 환수조치 없이 종결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 택배비 지원조건, 신청 방식 등 섬 주민이 택배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개선*·시행('26.2) * 신청서류 간소화(증빙서류 2종 → 1종), 지원대상 확대(자녀 등 지인이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 지자체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의무화
해운	150. 평택항 내 전기차 화재 및 화학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평택항 내 다수 화재 위험시설에서의 소방력 부족에 대해 소방청과 증원 협의('25.10) * 소방청은 소방력에는 공감하나, 읍 소재지 항만으로 소방수요가 낮아 소방력 배치가 제한적이라는 입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평택항 화재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항만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환경부(화학사고) 및 소방청(위험물) 등과 협조체계 강화
해운	151. 항만별 맞춤형 항만 재해정보 통계 구축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구축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통과('26.2) ○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정책용역 추진계획 수립('26.3)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통계 연계를 통한 통계 작성 또는 자체조사를 통한 항만 맞춤형 통계 생산방안 마련 용역 추진('26.4~10)
해운	152.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복구 점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위를 밝힐 것	**<시정·처리결과>** □ 장애복구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재해복구시스템 누리집 주소(포털 미연결)가 기존 PORT-MIS의 주소와 함께 노출된 문제 조치완료(재해복구시스템 주소 노출 제외) **<향후 추진계획>** □ PORT-MIS 재해복구 훈련 절차서 내 관련 개선사항 반영하여 개정 추진('26.下)
해운	153.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로드맵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관련 용역('23.12)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안업무 일원화 추진중 * (1단계) 근무형태 통일(4조2교대) → (2단계) 청경 전환 → (3단계) 항만공사 보안 관리기관 통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4조2교대) 인천·울산항만공사는 기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6.5월부터,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28년말 전면 시행 예정 ○ (청경전환) 법적 쟁점* 해소, 민간 부두운영사 협의, 노사 합의 전제로 '28년까지 전환(인천·울산·여수광양) 추진 * 경찰청 방문협의('26.1) 시 기존 의견(보안 자회사의 청원주 인정 곤란)유지함에 따라 법제처 유권해석 또는 관련 법령 개정 검토중 ○ (보안료) 이해관계자* 협의('25.10~12, 4회)를 통해 당초 대비 약 68% 상향**하고, 현재 고시개정 행정절차 진행중('26.5월 시행 예상) * 해운·무역협회·항만물류협회·한중카페리·해운대리점협회 등 5개 ** 보안원가 대비 보안료 징수율 개선(약 4.5%→7.8%) 및 연간 징수액 약 31억원 증가 **<향후 추진계획>** □ 항만보안 운영체계 개선 T/F* 구성·운영('26.1~, 월1회) ○ 청경 전환, 급여체계 조정, 보안 관리기관 통합 등 현안 공동대응 및 추진현황 관리 * 해수부, 4대 항만공사, 외부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해운	154. 제주항 항만 보안 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제주항 무단 이탈자 대비 보안 강화 방안* 마련('26.2) * X-ray 장비운영 정상화, X-ray 장비 신규 도입 추진, 화물차 출입 전용 입구 지정 **<향후 추진계획>** □ X-ray 장비 신규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55. IMO 넷제로 전략 준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3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민간의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 및 예산 확대 중 * 보조금 예산 : ('23) 130억 → ('24) 226억 → ('25) 230억 → ('26) 280억 **<향후 추진계획>**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신조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
해운	156. 국가필수선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가필수선박 제도개선 방안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회의 및 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국가필수선박 관계기관 회의('26.4) ○ 국가필수선박 업계 간담회 개최('26.上)
해운	157.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위원회의 특수성* 및 제도 시행기간** 등을 고려 시, 항만공사(기타공공기관)의 선제적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는 타 기관 이사회와 다르게 외부위원(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기관장, 상임위원 미포함). 관할 행정구역의 지자체장 추천(항만의 이용자단체 대표 등)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항만공사법 제11조) ** 운영 초기단계('23~'24년에 선임)로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의 평가가 불충분한 점 등 **<향후 추진계획>** □ 추후 기타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도입 여부 검토시 항만공사 도입 필요성을 함께 검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58. 항만공사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인구감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공사가 취업 연계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4개 공사에 요청 **<향후 추진계획>** □ 4개 항만공사 여건에 따라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속 협조 요청
항만	159. 군산항 준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군산항 등 유지준설공사 지속 시행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 ('24) 115억, ('25) 103억원, ('26) 131억원 **<향후 추진계획>** □ 기존 투기장(금란도 투기장) 증고를 통한 수토용량 확충 및 군산항 등 유지준설공사 지속 시행 ○ 준설토투기장 부족에 따라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추진('26.上 착수예정) ○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완료 및 준설 예산 확대('28~)
항만	160. 감천항 내 기존 수리조선소 폐지 및 신규 단지 조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천항 내 기존 수리조선소 현황 (약 70여개소) 등 검토 ○ 수리조선소 대부분은 감천항 인근 사유지에 위치하며 사업자 동의 없는 시설폐지 및 이전 등은 원칙적 불가한 상황 * 감천항 지역은 일부 항만구역(50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유지 **<향후 추진계획>** □ BPA, 지자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61. 군산·새만금항만공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새만금 신항 개장('26년 12월 예정) 후 항만 이용 현황 및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설립 필요성 등 검토 *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 원칙상 항만 운영 수입이 항만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수익성, 재정자립도 등의 면밀한 분석 필요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새만금 신항 개장 전으로, 신항 개장 후 재무건정성, 운영효율성 등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기초 여건 형성 시, 추후 설립 여부 검토
해운	162. 연안 자율운항선박(K-CASS) 추진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위한 중장기로드맵*('26~'35) 마련 중 * 5년 주기, 해수부·산업부 공동 수립 ○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 수립 용역('25.3~'26.3) **<향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6~'35)」 수립·발표('26.6 예정)
해운	163. 여수항만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리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해상환적 재개 관련 사항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식별된 안전성 검토의견, 환적 재개 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지역주민(여수·남해 등)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운	164. 해운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IoT 장비 보급 및 활용 지원사업의 재개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당 사업은 '21~'22년 추진한 바 있으며, 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신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해운물류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 검토 및 예산 반영 추진
해운	165. 제6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이 실현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6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완료('26.3)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과제 이행 여부 점검 등 관리 철저
해사	166. 매년 발생하는 선박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선박(일반선박, 어선)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안전장비 보급 및 안전교육 등 예방대책 수립('25.10) □ 어선안전 합동점검('25.12~'26.2), 위험물운반선 화물작업 절차 점검 강화('25.12~),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99척, ~'25.12) 등 조치 **<향후 추진계획>** □ 화재예방을 위한 어선, 화물선 지속 점검 및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47척, ~'26.12)
해사	167. 국제운송규정 강화로 숯 수입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숯 수입업계 대상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 설명('25.10) □ 해운선사 및 업·단체 대상 해상운송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개정사항 안내('25.11) □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및 업계 피해 지원방안 논의('25.11, '26.3) □ 숯 수입망 안정을 위한 숯 수입 관련 업계(한국성형목탄협회, 해운협회, 해운선사 등) 간담회 개최('25.11, '26.3) ○ 원활한 숯 수입 지원 위해 국적 선사 선적 당부 및 숯 수입업계-해운업계간 소통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한국성형목탄협회·해운협회·선사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강화(지속) □ 숯 공급 차질·해상운송 거부 등 모니터링 실시(지속)
해사	168. 이용자가 저조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 안내 앱을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존 앱을 대체하여 별도의 설치나 가입이 필요 없는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 기반 웹 전시안내 서비스로 개편 완료('26.3.) **<향후 추진계획>** □ 웹 전시안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배포 및 박물관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 실시('26.4~) ○ 관내 홍보물 게시 및 LED전광판을 활용한 대내 홍보 강화('26.4~)
항만	169. 화종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북극항로 거점 항만을 육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에 따른 화물 및 물류 등의 여건 변화를 권역별 주요 항만에 반영하기 위한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수립용역' 발주('26.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검토('26～'27) 및 발표('27)
항만	170.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25.8) 이후 '우' 정부의 후속사업 추진 여부 지속 모니터링 **<향후 추진계획>** □ '우' 정부에서 후속 항만개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경우 국익 차원에서 경제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지원* 등 여부 결정 예정 * 우리부에서 지원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 정부에서 항만개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우리기업의 참여 지원 등
항만	171.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대부두를 포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서 다대부두 재개발 필요성 등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고시('26.下)
항만	172. 항만기본계획이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의 원칙과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사업계획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서울항 관련 항만기본계획 반영 재요청 시 무역항 항만시설로서의 정합성,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	173.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사업계획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서울항 관련 항만기본계획 반영 재요청 시 무역항 항만시설로서의 정합성,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예정
항만	174. 지방관리 항만의 국가로의 전환 방안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기준 개선 및 무역항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안 법제처 예비검토*('26.1) * 항만 관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무의 이양(국가↔지방)에 관한 기준이므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항만법」 일부개정(안) 발의(의원입법, '26.3.19.) **<향후 추진계획>** □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추진('26~)
북극	175. 북극항로 개척 관련 제주항의 크루즈 육성 및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에 따른 화물 및 물류 등의 여건 변화를 권역별 주요 항만에 반영하기 위한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수립용역' 발주('26.2) **<향후 추진계획>** □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검토('26~'27) 및 발표('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	176. 새만금신항이 푸드허브항·수소전용·콜드체인 항만으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청)과 연계한 수소·식품 등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지속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27)
항만	177.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30년까지 3선석을 추가 건설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청)과 연계한 선석 확충 반영 등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지속 검토 □ 배후부지 호안 조성완료('21) 및 준설토 투기를 통한 매립 추진(~'28) **<향후 추진계획>** □ 배후부지 재정전환을 위한 재정당국 협의 추진('26~)
항만	178. 항만자동화 국산화 비율 목표치 달성 및 5G 통신망 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23년 수립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에서 부품 국산화율을 '26년 45%로 제시, 현재 광양항 테스트베드 하역장비 일체를 국산장비로 발주 완료함에 따라 66%로 초과 달성 □ 광양항 테스트베드에서 구축하고 있는 5G 통신망의 경우에도 국내 컨소시엄이 설계를 진행 중이며, 국내 기업이 구축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	179. 여수광양항을 AI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컨테이너 부두 항로를 증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스마트AI)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적용 가능한 항만분야 AI 기술개발 사업 연구용역 진행 중 *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항만 운영기술 개발(R&D) 기획연구('25.11~'26.5) □ (항로 증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500억원 이상)으로 선행 행정 절차인 사전타당성검토*를 추진중에 있음 * '26년도 광항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 기본 및 실시설계('26~'27, 34억원)에 포함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AI) 광양항 테스트베드 개장('29년 예정)에 맞춰 항만분야 AI 기술 접목·실증 계획 구체화 및 추진 예정 □ (항로 증심)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결정 후 관련 절차 이행
해운	180. 항만 안전사고 연구용역 실시 등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신규자 교육강화, 근로자 안전수칙 제정 등을 포함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마련('25.11)
해운	181. 항만안전사고 발생시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의무화를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등 개정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항만안전사고 발생 공유를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통과('26.2)
해운	182. 항만에 특화된 재해통계 집계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구축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통과('26.2) ○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정책용역 추진계획 수립('2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통계 연계를 통한 통계 작성 또는 자체조사를 통한 항만 맞춤형 통계 생산방안 마련 용역 추진('26.4～'26.10)
항만	183. 연안침식 대응 관련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안침식에 대응한 안전한 연안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인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25.12.) **<향후 추진계획>** □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추진
항만	184.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비리 관계자의 처벌과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를 실시 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 마련('25.12) * ①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②상하부 통합 사업추진체계 마련, ③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전략 마련, ④공공 역할 강화 및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 구체화된 북항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26.下), 상하부 통합개발 법적 근거 마련(～'27.),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계획 수립(～'27.), 해양기관 클러스터 및 복합문화레저타운 조성계획 마련(～'26.下),
해운	185. 비상사태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항만운영 협약 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시정・처리결과>** □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협의회 시 논의하여 협약 체결이 미진한 업종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협약제도에 대한 업종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결률이 미진한 업종에 대한 협약 조건 재검토
해운	186. 부산항 환적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환적 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적모니터링 시스템*(Port-i) 개시('25.12) * 컨테이너 선박과 화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탐지 시 선석 스케줄을 조정하여 최적 처리 지원 **<향후 추진계획>** □ BPA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환적 지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환적운송시스템(TSS), 전자인수도증시스템(E-slip) 등
항만	187.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및 포승~평택 철도 공사를 조기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도 38호선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전체 10억원 중 '26년 5억원)에 대하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 * 국도 38호선 확장사업 / 7.3㎞ / 1,603억원 (제4차 항만기본계획 기준) **<향후 추진계획>** □ (국도38호선 확장) 평택·당진항 인프라 확충으로 국도38호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주체 등 추진방안 검토 예정 * 新국제여객부두 개장('24.12.),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준공('25.10.), 항만배후단지 2-3단계('27. 준공예정) □ (포승-평택 철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철도노선 구간의 투기장 구역 우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매립 등 사업 추진에 협조할 예정 * 항만기본계획에 철도노선이 기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 용역을 통해 노선 재검토 중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3공구 기술조사 / 국가철도공단 / '25.5 ~ '26.3)
해운	188. 감천항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천항 관할 기관인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공사 소유 부지를 개방하는 방안 협의 **<향후 추진계획>** □ 부산항만공사, 관할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친수공간 조성방안 검토
수산	189. 남해 미조항 방파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미조항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주민 건의('22.11)* 발생 후 정비사업 조기 개발 요청 * '24년 미조항 정비사업 준공 후 정온도 확보 및 계류시설 확충 요청 □ '26년도 예산안에 정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미조항 정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설계비* 재요구 * 기본조사설계비 350백만원, 실시설계비 800백만원
기타	190. 본부 및 소속기관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신규정원 확보 등을 통해 본부 초과현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으로 정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 소속기관의 부족한 현원은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민경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충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6.3. 자체채용 : 40명(소속기관 배치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정현원 관리 및 채용확대 등을 통해 본부-소속기관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 해소 노력
기타	191. 부산이전 관련 인력 이탈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주거, 가족지원 등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실시('25.12~) **<향후 추진계획>** □ 직원근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 지속
기타	192.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의 추진('26.2~) ○ 제1회 해수부-부산시 정책협의회 추진('26.3.9)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별 이전관련 내부 소통 및 이전절차 등 내부검토(계속) □ 지원방안 윤곽이 나오면 공공기관 노조와 협의를 거쳐 로드맵 마련
기타	193.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이사 인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석·임기만료된 직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선발절차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타	194. 해수부 내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3월까지 승진·신규채용 등을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 4명 임용 * 1명(2.6%, '25.12) → 5명(11.6%, '26.3) **<향후 추진계획>** □ 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균형인사를 위해 지속 노력
기타	195.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	**<시정・처리결과>** □ 산하기관 대상 공직기강 특별점검('25.10~12) ○ 복무위반, 업무해태 등 비위 적발 및 처분 요구 조치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산하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개최('26.4) 및 산하기관 청렴도 측정('26.上, 13개 기관)
기타	196. 온나라 해킹사고 보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보안인식 제고 ○ GPKI 보안관리에 대한 전직원 정보보안 교육 실시(25.11.) □ GPKI 보안점검 강화 ○ 반기별 GPKI 저장·보관 관리 현황 및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26.1.) □ 국가정보원 보안대책 전파 ○ 원격접속 단말기 보안강화, 공인된 통합인증체계(SSO) 제품 도입 안내 등(25.11.) **<향후 추진계획>** □ GPKI 보안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26년 분기별 1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GPKI 보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속 확인('26년 4월, 10월) □ 국정원, 행안부 등 유관기관 GPKI 관련 보안지침 준수·이행(수시)
기타	197. 이중화, DR 구축 등 데이터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위한 '26년 예산 확보 ○ 어선안전조업시스템(2등급) 14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3등급) 1.2억원 예산 확보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정 * 1등급 시스템(해운항만물류정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은 기 구축 완료 **<향후 추진계획>** □ 국정자원 대전센터 입주 시스템(2등급 2개, 3등급 4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DR 일괄 구축 예정('26.~'27.) □ DR이 필요한 나머지 시스템(2등급 2개, 3등급 4개)에 대해서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기타	198.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실태조사하여 인사관련 내규 개정 등 조치사항 안내('25.11), 이행현황 점검('26.2) ○ 기관별 인사관련 내규를 개정하거나 인사시스템 先 조치 완료 * 상반기 중 내규 개정 진행 예정(4개,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향후 추진계획>** □ 내규 미개정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현황 추가 점검 추진('26.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타	199. 해수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회증액 노력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DR) 관련 '26년 예산 일부 확보 ○ 어선안전조업시스템(2등급) 13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3등급) 1.2억원 예산 확보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정 * 1등급 시스템(해운항만물류정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은 기 구축 완료 **<향후 추진계획>** □ 국정자원 대전센터 입주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DR 일괄 구축 예정('26.~'27.) □ DR이 필요한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기타	200. 향후 세월호 선체절단물 폐기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2차례 의원실 방문('25.10.23, 11.19)을 통해 유가족단체 협의 등 선체절단물 폐기 진행 절차, 보관중인 품목(선조위·사참위가 채택한 증거물 목록 포함)과 폐기된 품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체절단물 폐기 관련 의혹 해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선체절단물 등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 예정
기타	201.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범부처 전담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25.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28년 UN해양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범정부 준비기획단 설치('26.上) □ 국정과제 이행 등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
해운	202.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문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외국인 어선원의 동일 선주 선박 간 이동*의 예외 적용 방안 검토 중 * (現)「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근무처 변경 허가' 없는 이동은 불법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및 노·사 협의를 통해 국적 선원 일자리 보호, 정확한 출입항 신고, 외국인 어선원 보호 준수를 조건으로 선박 간 이동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26.下)
해운	203. 예선사업자와 해운대리점 사업자간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리청별 무역항의 예선사업자-해운대리점 사업자 간 불법 유착 사례 조사 중 **<향후 추진계획>** □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불법 유착 사실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북극 해운	204. 해기사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기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 양성된 해기사의 북극항로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기사 양성 지원 확대 ○ (해양수산연수원) 전문수산실습선 신규 투입('25.12) 및 서남권 해기교육 원활화를 위한 목포 분원 시설 증축('2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천해사고 해기교육원) 6급 해기사 과정을 5급 국내 한정 해기사 과정으로 전환 지원('26.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극지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을 활용한 승선 기회 마련('26.2) □ 실제 북극항로 해빙 현황을 구현하는 선박 모의 조종 시뮬레이터 구축('26년~)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연수원) 노후 실습선 대체 친환경 실습선 건조 추진(기본설계 적정성 검토중) 및 경인지역 종합비상훈련장 건설 추진(건립 타당성 용역(2억원) 발주) □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을 활용한 승선 기회 제공 방안 등 검토(계속)
북극	205. 화종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북극항로 거점 항만을 육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에 따른 화물 및 물류 등의 여건 변화를 권역별 주요 항만에 반영하기 위한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수립용역' 발주('26.2) **<향후 추진계획>** □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검토('26~'27) 및 발표('27)
해양	206.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기후변화 시책 규정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진행중 (위성곤 의원실 대표 발의, '26.2)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사	207. 바다내비 센터 이전 지가 부산 임시청사와 떨어져 있는데 이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재해복구 훈련('25.11, '26.2)으로 DR 센터 서비스 제공 상태 확인 □ 센터 이전 사업 발주 요청 완료('26.3) **<향후 추진계획>** □ 재해복구 훈련 실시 및 일정에 따라 센터 이전 추진 ○ 재해복구 훈련 실시('26.4, '26.5 예정) ○ 이전 일정 * 공사('26.5~6), 센터 이전('26.6말), 안정화('26.7)
해양	208. 김 판매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기관(독도경비대, 독도사랑운동본부 등) 및 언론사 대상 사실관계 확인·홍보 문구 정정 완료('25.11) * (당초) 수익금 일부 '독도경비대' 기부 → (변경) 수익금 일부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 **<향후 추진계획>** □ 필요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등 조치 추진
해양	209. APEC 대비 해양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CEO 서밋 참석자를 위한 크루즈 선상호텔 이용객을 위해 포항시, 포항청,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항내 이동동선 정비, 안전펜스 설치 등 이용객 안전조치 실시 □ '대테러안전상황실*'에 참여하여 불법 드론 등 항만 주변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원활한 호텔운영 지원 * 국정원 주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간사, 세관, 육경, 해경, 소방 등 참여('26.10.28~11.1), 같은 기간 해수부 본부(국제협력총괄과, 항만안전보안과) 지원 근무 실시 □ 선상호텔 운영 준비상황 점검(장·차관 총 3회 현장 방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210.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방정부의 해안가 폐기물 처리를 지원 예산 확대 * '25. 83.3억원 → '26. 102.4억원(22.9%↑) **<향후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해안가 폐기물 처리 등 국비 지원비율 상향(50%→70%) 등을 적극 추진
해운	211.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최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25.6~) **<향후 추진계획>** □ 부산항 신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해신항 운영사 선정방안 마련 및 입찰공고 예정('26.12)
해사	212.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전기추진선 전환 로드맵', '녹색선박 펀드 조성', '시범항로 운영' 방안 검토 및 추진일정 수립('25.12)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수립·시행('26.上)
항만	213. 북극항로 개척 관련 항만별 기능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북극항로에 따른 화물 및 물류 등의 여건 변화를 권역별 주요 항만에 반영하기 위한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수립용역' 발주('26.2) **<향후 추진계획>** □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 전략 검토('26~'27) 및 발표('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타	214. 민간투자개발사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문제 해소 필요	**<시정·처리결과>**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절차 진행 시 전문성 보유여부, 업무처리 내역,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취업제한 제도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검토·시행중 **<향후 추진계획>** □ 퇴직 공무원의 개인 구직활동과 민간기업 채용에 관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격히 지도·감독 추진
해운	215.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중으로, 감사 간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감사결과에 따라 불법전대의 법적 근거조항* 및 처벌근거 마련 예정('26.12) *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관리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효율적인 전대 관리방안 마련 추진
기타	216. 서해어업공무원 해양수산부장(葬) 거행 관련 재조사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고인은「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

해 양 경 찰 청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주권수호	1.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내란특검' 조사와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해양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음
	2.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출장보고서 누락, 방첩사 업무협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출장 후, 중요사항 등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특검 등 수사·조사 진행 시 협조예정
	3. 서해북방한계선(NLL) 등에 집단으로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 시기별 중국어선 밀집해역 선제적 단속세력 배치, 해경·해수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한 강화된 단속 활동 전개 * '25.12월 나포 56척, 검문검색 1,135척 등 전년 나포 46척, 검문검색 858척 대비 증가 - 또한, 비밀어창 단속 방법 연구, 함정·항공기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어려운 단속 환경 속에서도 검거를 목표로 해경청 단속역량 집중 * '25년 주요 단속 사례 비밀어창 단속 9척, 등선방해물 설치 선박 3척 나포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무허가 조업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은 [1차] 대한민국에서 처벌하고, [2차] 중측에 직접 인계하여 이중 처벌을 통한 재범 등 차단 주력 * 직접인계 현황 / '23년) 1척 → '24년) 6척 → '25년) 8척→ '26년) 4척 **<향후 추진계획>** □ 불법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도입*, 해상특수기동대 장비 개선 등 * '26~'28) 설계 및 건조 완료(2척), 예산 요구 후 '30년까지 추가 2척 도입
	4.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관련 잠정조치수역 內 경비구역 확대, 대형 경비함정 추가 배치 및 유관기관 협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서해 구조물 관련 감시 강화 방안 마련('25. 11월) □ 한·중 잠정조치수역 內 광역 경비구역 신설('26. 1월) 및 전담함정 1척 배치('26. 2월) **<향후 추진계획>** □ 대형함정 상시 배치를 위해 3천톤급 함정 9척 도입* 추진 ✔ (참고) 대형함정 9척(3천 톤급 9척) 단계별* 건조 추진 * (1번함) '26년 2월, 서해청 배치 완료 (2번함) '26년 末, 제주청 배치 (3번함) '27년, 중부청 배치 예정 ** 2단계 사업으로 (4번~6함) 예산 당국과 신규 건조 협의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한반도 주변 광역 해역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인 감시체계를 포함한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무인기 정책연구) 무인 감시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드론보다 고성능의 중형드론에 대한 필요성, 도입·운영방안 정책연구('25.6월~9월) □ (해양경비체계) MDA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시행('25.10월)을 비롯하여 MDA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 계속 추진 ※ △관측·통신위성 개발사업 △위성활용기술 개발사업 △위성센터 구축 △드론 도입·운영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플랫폼) 구축 등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계획으로 중형드론 임무실증('27년) 및 중고도무인기 도입 검토('28~'32년) □ (해양경비체계) MDA 담당 조직 정규화(現 임시조직→해양영역인식課) 추진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26~) 등
	6. 조리사 없는 열악한 소형 경비함정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집행지침 개정) 급식비 항목으로 도시락, 간편식 등 구입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을 개정('24. 5월) □ (급식비 증액) '26년도 함정 급식비를 8,821원에서 9,500원으로 증액 □ (정기직제 요구) 취사 담당 조리사 채용을 위해 '27년 정기직제 요구 **<향후 추진계획>** □ 취사 담당 조리사 정기직제 반영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최 관련 해상경호 등 대응	**<시정・처리결과>** □ (경호임무 완료) '25. 10. 16 ~ 11. 02(8일간) 보문호수 및 해상(포항, 경주, 울산, 부산)에 경호 세력으로 특공대, 경비함정 등 166척 8,518명 투입하여 경호 임무 완벽 수행
	8. 무인기 도입 시 실제 비행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안전성 검증) 정책연구를 통해 기체를 규격화하고 해상성능시험을 통해서 무인기를 도입하도록 관련 절차 개선 * '24년 해상성능평가를 거쳐 안정성이 검증된 무인기 15대 도입·배치('25.10.23) □ (교육훈련 강화) 무인기 운용역량 향상을 위해 제작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원에 무인헬기 전문화 과정을 마련('26. 1.) * '25년 무인 헬기 운용자 대상 제작사 교육(1회 26명), 무인 멀티콥터 제작사 교육(2회 64명) **<향후 추진계획>** □ 무인기 운용역량 향상을 위한 무인기 특성화 훈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 시행('26. 1.~)
	9. 해양경찰청 초계기는 2012년 이후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항공대(김포·무안)에만 배치되어 있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도입 필요	**<시정・처리결과>** □ (예산요구) '26년도 정부 예산 요구 및 국회 증액을 추진 하였으나 미반영 □ (예산추산) '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최신 견적 요청('25.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신규 초계기에 대한 소요 규격 마련 위한 연구용역* 실시('26년) *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 착수('26. 4월~) □ (예산반영) 최신 견적 근거로 '27년 예산 편성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 추진
	10. 원거리 해역에서의 장시간 수색·구조 임무 수행을 고려한 대형헬기 도입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예산요구) '26년도 정부 예산 요구 및 국회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 (예산추산) '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최신 견적 요청('25.11.) **<향후 추진계획>** □ (예산반영) 최신 견적 근거로 '27년 예산 편성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추진('26년)
	11.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사고 원인 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22. 4. 8.) ○ 현장 사고조사('22. 4. 8.~4. 29.) 및 내·외부 합동사고조사회의 28회(국토부, 민간 등 외부 전문가 참여) ○ 사고조사 결과보고 심의·의결('26. 1. 22) □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항공기 사고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24. 9. 23.) ○ (조직관리) 항공기 운용부서 일원화 (경비과→항공과/'23. 12.) 및 기종 단일화 ○ (운항안전) 승무시간 기준 개선(야간 1.5배 적용) 등 * 항공운영규칙 일부 개정('23. 2.)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교육훈련) 야간비행, 이착함 등 강화 * 기종별 이착함 표준절차 마련·시행('24. 12.) ○ (안전장비) 항공승무원용 드라이 슈트('23. 11.) 및 헬멧('24. 4.) 구매 보급 **<향후 추진계획>** □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헬기(S-92) 시뮬레이터 도입('26~'29 / 4년차 사업)
	12. 신안 해역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목포광역VTS와 전남 해상풍력 간 레이더 연계 관련 대책 마련	**<시정 · 처리결과>** □ 목포광역VTS 운영시스템에 특별 경계구역·경보 설정, 관제 강화 방안 마련, 규정 개정 등 지속 안전관리 시행 중('24.11.12.)이며, □ 풍력단지 인근 레이더 음영구역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경비함정(200톤급)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 음영구역 없음을 확인('25.10.29.) □ 풍력운영사 등과 협의하여 공인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레이더 음영구역 발생 여부 추가 검증 결과 음영구역 없음을 재확인('26.02.12.) * 검증 관련 업무협의 4회('25.11.12, 11.20, 12.9, '26.1.29 / 해경청, 전남해상풍력㈜, ETRI)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간 협력, 풍력단지 인근 선박 집중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개정된 사례가 확인된 바, 위임입법 한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중(~'26.10.) ○ 법제처 구두 협의('25.11.7) ○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개정소요 파악('26.1.29~2.11.) ○ 시행령 개정 초안 법제처 사전 검토('26. 3.16~3.18)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개정안 내부 의견수렴 (3월 4주~5주) □ 시행령 개정 계획 수립(4월)
해양범죄단속	1. 해양경찰청의 업무 범위 근거가 불분명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 수사는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급증하는 해양 마약 범죄 대응에 배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 2.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및 범죄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 증원,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 국제공조 확대 등을 통해 수사력 강화 필요	**<시정・처리결과>** □ 수협조합장 선거사범 단속성과* 취합·분석('26. 1월~2월) * '19년, '23년 두차례 선거에서 56건 169명 검거(구속 14명) □ 해양경찰의 수협선거사범 수사성과 등 방문 설명 □ 마약수사 전담 인력(27명)을 운용중이나 급증하는 해양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서 외사 인력(62명)을 마약수사 전담인력과 병행하여 운용중 * 선거사범 수사는 4년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며, 마약 수사인력과는 별개임. □ 마약류 장비 도입 '26년 마약류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한 수중 드론 +5대 도입, 이온스캐너 +7대 도입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제공조 확대 국제마약범죄 대응 및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경청-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의향서 체결('25. 11. 25.) **<향후 추진계획>** □ (수사심사 강화) 해경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인력 증원 요청) '27년 마약수사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행안부 직제 대응 중
	3. 밀입국 등 국경범죄 관련 해상경계 강화를 위한 경비함정 추가 배치, 무인 항공기 도입 및 유관기관 공조 체계 확대	**<시정・처리결과>** □ (경비력 강화) 한·중 잠정조치수역 內 광역 경비구역 신설('26. 1월) 및 전담함정 1척 배치('26. 2월) □ (무인기) 무인 감시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드론보다 고성능의 중형드론*에 대한 필요성, 도입·운영방안 정책연구('25. 6월~9월) * 중형드론 :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150kg미만으로 무인헬기(24kg)보다 크고 운용반경·시간(약 150km이상, 약 10시간이상) 등 성능이 우수하며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 □ (국경범죄) 해상 국경범죄 대응 종합대책('26. 1. 28.) 수립 ○ 정례훈련(3,000만원) 및 국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전문교육(1,500만원) 예산 확보 완료로 해상 밀입국 등 대응 역량 체계 구축 ○ 지방청 해역별 세부 대책 수립('26. 3월) * (주요내용) 역량강화 전문교육, 집중 예방활동 탄력운영, 유관기관 합동 훈련(불시)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경비력 강화) 대형함정 상시 배치를 위해 3천톤급 함정 9척 도입* 추진 ✔ (참고) 대형함정 9척(3천 톤급 9척) 단계별* 건조 추진 * (1번함) '26년 2월, 서해청 배치 완료 (2번함) '26년 末, 제주청 배치 (3번함) '27년, 중부청 배치 예정 ** 2단계 사업으로 (4번~6함) 예산 당국과 신규 건조 협의 완료 □ (무인기) 중장기 계획으로 중형드론 임무실증('27년) 및 중고도무인기 도입 검토('28~'32년) □ (밀입국) 전국 밀입국 취약지 재정비 * 취약지 신규 대상지 파악 등 현행화(~5월)
	4.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수사인력 양성, 수사연구소 직제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수사역량 강화)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관 선발·관리('25. 9월 신규 5명 선발), 역량·책임 중심에 수사관 자격제 관리·운영('26. 1월 신규 12명 선발) 등 수사역량 강화방안 마련 □ (전문인력 채용) 변호사·과학수사 등 수사 전문가 채용('25. 8~12월) □ (교육체계 강화) 수사교육 현황분석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사경찰 교육체계 강화('26. 2월) **<향후 추진계획>** □ 수사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수사연수소 직제화를 추진하고, 현재 계획중인 인재개발원('26. 3월 예타 선정) 內 수사연수센터 설립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해양경찰 수사권 범위 명확화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양경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사법권을 가지며, 경찰청과의 양해각서('17. 9월)에 따라 '해양 관련 범죄'*를 우선 관할 * ①해양 발생 범죄, ②해양→육상 범죄, ③육상→해양 범죄, ④해양 관련 종사자 범죄, ⑤해양 관련 장소 범죄 **<향후 추진계획>** □ 불명확한 수사 관할 발생 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검토·조정 예정
	6. 경찰에서 기소 송치 후 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한 분석·평가 시스템 등 제도 보완 필요	**<시정・처리결과>** □ 최근 5년간('21년~'25년) 구속 송치사건에 대한 무죄사례* 분석 * 구속 총 770건 중 무죄·불기소 사례 3건(0.4%)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內 구속사건 관리기능 신설* 및 재판(처분)결과 입력('25.12.) * '구속사건 처분결과 관리' 시행계획 하달 **<향후 추진계획>** □ 분기별 구속사건 처분결과 확인·입력*, 본청(수사심사과) 통합 관리('26년~) * 관서별 사건관리 담당자가 처분결과 확인하여 구속사건관리시스템에 입력 □ 무죄·불기소(불송치)사례 확인시 해당 판결문 및 결정서 확인 * 필요시 관련 수사기록 추가 확인 □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죄판결에 영향을 끼친 인권침해 및 중대한 절차위반 유무 등 분석·평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 번복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고발 필요	**<시정·처리결과>** □ '22. 6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에 따라 소재수사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면 재수사 진행 예정
	8.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관련 불법 의혹 및 해양경찰청 수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동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 규명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25. 4. 10. 수사외압 의혹 언론보도 의거 감찰조사 착수, 대상자 1명 대기발령('25. 4.11.) □ 신고인 외부 수사기관 수사 선행 입장 등 감안, 수사종료시까지 감찰조사 잠정 중단 □ 전남경찰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입건 전 조사(4. 15.) → 수사개시(11.21.)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전남경찰청 수사결과 종료·수사서류 등사·열람 조치 후 관련자 감찰조사 등 조사 예정
해양구조안전	1. 영흥도 순직 사건 관련 근무수칙 미준수 상황보고 지연, 초기 대응 부실, 구조장비 미지참 등 대응체계 개선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시정·처리결과>** □ (근무수칙 재정립) ①상황발생 시 상황실 즉시 보고 및 휴게자 포함 총원 대응, ②2인 1조 순찰, 임무별 안전장비 지참, 근무기록 관리 철저 등('25. 10월) □ (대책 수립) 인천 영흥도 고립자 구조 중 경찰관 순직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25. 1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책 마련 필요	□ (장비 도입 예산 확보) 경찰관 안전 및 구조장비 예산 확보(14.7억원) * 외근부력조끼 등 6.3억원, 동력구조보드 4.8억원, 연안순찰 드론 3.6억원 등 **<향후 추진계획>** □ (대책 추진)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추진 중('25. 11월 ~) □ (장비 도입) 외근부력조끼(1,000여벌, '26. 12월), 동력구조보드(24대, '26. 下), 드론 5대('26. 下) 등 도입 추진
	2. 해루질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운영, 갯벌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야간 해루질 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드론 도입 예산확보) 갯벌·갯바위 등 접근이 어려운 연안해역의 안전 순찰 등 활용을 위한 드론 도입 예산 확보(3억 7천만원) * 도입규모 : 총 77대('26년 5대→'27년 20대→'28년 20대→'29년 20대→'30년 12대) □ (출입통제장소 지정)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정('26. 1. 12.) 및 주진입로 3개소에 안전시설물** 설치('25. 12. 12.) * 야간·기상특보 시 통제 ** 위험알림판, 인명구조함 각 1개씩 설치 **<향후 추진계획>** □ (드론 도입) 연안순찰 등 활용 드론 도입 예정('26. 下, 5대) □ 내리갯벌 등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26. 4.), 특별단속, 순찰, 홍보활동 추진, 해루질 등 연안안전관리 강화 □ 출입통제장소 과태료 상향(1→3백) 추진('26. 3. 23. 법사위 심사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사고 위험성이 높은 테트라포드에 출입통제 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시정·처리결과>** □ 위험 테트라포드 3개소* 출입통제장소 추가 지정 ('25. 9 ~ 10.) * 동해 천곡·임원항, 울진 해파랑공원 **<향후 추진계획>** □ 위험 TTP 등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26. 4.), 특별단속, 순찰, 홍보활동 추진, TTP 등 연안안전관리 강화
	4.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및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시정·처리결과>** □ '26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활동시간·근무일수 확대* * '25년 월 51H(1일 3H, 월 17일) → '26년 월 80H(1일 4H, 월 20일) □ 연안안전지킴이 배치장소·근무시간을 조정,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칙(고시) 개정('26. 3.) **<향후 추진계획>** □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26. 4) 후 배치·운영*('26. 5. ~ 10.) ※ 194명, 전국 위험구역 97개소 배치
	5.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안전한 낚시활동 및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사고예방대책 수립*('26. 1.16.) * 각 소속기관별 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26.2.2. ~) □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3~5월) 운영 ※ 지방청 중심 안전관리(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안전관리 교육·홍보) 대책 수립·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시기별 수요가 증가하는 선종·해역 대상 음주운항 단속 활동 강화 * 여름철 수상레저 음주운항 집중단속(6~8월),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특별단속(9~10월), 연말·연시 다중이용선박 집중단속(12~1월) □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처벌 기준 「해상교통안전법」 동일 적용 관련 등 해수부 협의('26년 下)
	6.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운영) 어선사고 취약시기(2~3월)에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승선원변동 미신고 홍보 및 특별 단속 시행 중(~3. 31.) ※ (운영실적) 홍보 1,185명 / 단속 48건 **<향후 추진계획>** □ (관리대책 마련) 승선원변동 미신고에 대한 어민의식 개선 계획 수립('26. 4월) ○ (시스템 개선) 승선원변동 신고시스템에 대해 가독성 저하 등 불편사항 개선('26.12월) ○ (포스터 제작) 파·출장소, 수협 등 어민 근접 시설 및 SNS, 타기관 어플 등 게시('26. 6월) ○ (QR코드 스티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스티커 제작·배부('26. 6월) ○ (안전교육) 수협·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 안전의식 개선 교육(상시)

<table>
<tr><th>구분</th><th>시정 · 처리요구사항</th><th>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td><td>7.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점검 필요</td><td>
<시정 · 처리결과>

□ 법률 시행일('26.4.23.)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인 력</td><td>4명 확보(서귀포·통영·속초·강릉서)
* 수중레저 치안수요가 높은 해경서 우선 배치</td></tr>
<tr><td>예 산</td><td>13.8억 확보
* 온라인 시스템 구축(13억), 안전캠페인 등 (8.4백))</td></tr>
<tr><td>교육
(매뉴얼)</td><td>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운영
(16회 712명) 및 실무지침서 제작·배포</td></tr>
<tr><td>제도개선</td><td>협·단체 소통 간담회·법령체계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td></tr>
<tr><td>대국민 홍보</td><td>언론보도, '수중레저 안전수칙' 모바일 교육·홍보영상 제작·배포</td></tr>
</table>
□ 수중레저 안전관리 종합 시행계획 수립('26.2월)

* 법 시행('26.4.23.) 초기 정책 추진 방향과 구체적 기준 제시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반 마련

<향후 추진계획>

□ 수중레저 사업장 일제점검 등 성수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26.5~10월)

* 해역·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자 안전수칙 모바일 홍보영상 배포 등

□ 수중레저 전담인력·예산 지속 확보('26.3월~)

□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수중레저 현장 실무과정 확대 운영('26. 4월 ~)

□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 구축('26.5월)

* 주요기능 원스톱 사업등록, 활동자 안전정보 제공 등
</td></tr>
</table>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26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지자체 통보('26. 1.13) -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대책」 수립·시행('26. 2.23) * 화성호, 북한강 등 위험개소 예방대책에 포함 - 해경-지자체 「내수면 합동지도반」 운영 * '25년 운영실적 : 49회(단속·계도 138건) **<향후 추진계획>** □ 해경-지자체 「내수면 안전관리 대책 회의」 개최('26년 上) - 현안 및 안전대책 진행 사항 등 논의 □ 해경-지자체 「내수면 합동지도반」 운영 (5~10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9. 해양재난 현장 수색구조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	**<시정·처리결과>** □ (조직신설) 제주권역 대형·특수·복합 해양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발대 ※ 발대식: '26. 4. 8. 예정 □ (수난대비)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수상구조법」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5년마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매년) □ (대응지침)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25.3월), 해상추락 전기차 구조 대응 가이드 마련('26. 3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대응역량) 국제 합동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수난대비기본훈련*) 및 구조장비 첨단화(R&D 추진) * '25년 107회 실시 □ (교육훈련) 기본교육을 직무 중심으로 개선 및 각종 상황· 유형별 훈련 확대, 교육훈련지침 개정('26.1월) □ (협력체계)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으로 협력관 지정·운영 및 긴급구조교육 **<향후 추진계획>** □ 민·관·군 합동 해역 특성을 반영한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年 105회) □ 구조대원 인력보강* 및 구조장비 확충**(신형구조정, 출동차량 등) * 구조대원 911명 / '26년 55명(채용 50명, 자체양성 5명) 증원 예정 ** 신형구조정 9척 도입('26년 5척, '27년 4척)
장비기술	1. 내구연한 경과한 5천톤급 삼봉호(제2독도함) 대체건조 필요	**<시정・처리결과>** □ (증강배치) 서해·동해상 주변국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대형 함정 신규 증강(5척) 추진 ○ 동해 3000톤 2척 배치完('24년) ○ 서해 3000톤 1척 배치完('26.2월), 2척 건조중('26.11월, '27.12월 배치) **<향후 추진계획>** □ (예산반영) 중기재정 계획에 삼봉호 대체건조 예산 반영 추진 ('26년) * '28~'29년 기본설계 / '30년~ 건조 □ (함정정비) 삼봉호 교체 전까지 사전 정비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26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안전검사 실적) '23년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40mm・20mm 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가스발사총) 실적이 저조(23%) '24년부터 관리강화를 통한 실시율 제고 노력을 통해 '25년 100% 실시완료('25. 11. 28) □ (방아쇠 장력 검사장비 보급) '25년 기존 23개 → 185개 추가보급을 통해 전 소속기관 보급 완료('25. 12. 23.) **<향후 추진계획>** □ (전자충격기 검사장비) 전자충격기 안전검사 장비* 도입으로 전면검사 체계 구축 및 매년 실시율 100%달성 추진('26. 10월) * 오실러스코프 5개(지방청) x 4천만원(1대당) = 2억원
	3. 산업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함정 안전모 개선 대책 필요	**<시정・처리결과>** □ (법령검토) 문제없음('26. 1. 30.) * 해양경찰은 사업장·근로자에 해당되어 KCs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KC인증을 받은 경우 KCs인증 의무가 면제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성능검사) 성능시험 결과 산업용 안전모보다 상대적으로 내관통성이 낮음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26. 1. 30. □ (시장조사 및 운용사례 검토) 소방청·경찰청도 시중의 KC 인증제품 사용 중이며, 시장조사 결과 재질개선을 통해 내관통성 향상 가능('26. 3. 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안전모 성능개선) 산업용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내관통성) 개선 추진 예정('26. 4월)
	4. 서부정비창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외부위원회 검증) 실시설계 서명·날인 누락, 쉽리프트 보수공사 등 의혹은 외부위원회 검증 및 의원실 방문 설명 완료('25. 10월) □ (변호사 자문) 관급자재 대상 중 일부 사급자재 시공건 처리방안 변호사 자문완료('25. 12. 17.) **<향후 추진계획>** □ (시공평가) 해수부 주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대상 시공평가 예정('26. 상반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관련 목포지방해양 수산청 항만건설과 시공평가 대상 사업 신청 ('25. 11. 27.)
	5. 부산정비창의 노후 시설 개선 및 관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환경개선) 함정근무자 숙영 시설 환경개선 공사(사업비 1.9억) 완료('25. 12말) □ (기능보강) 함정근무자 숙영시설(숙영동) 신축(사업비 170억) 및 리프팅도크 친환경 설비(쉘터 등) 설치 연구용역(사업비 1.5억)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부산정비창의 노후화된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및 리모델링으로

<table>
<tr><th>구분</th><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td><td></td><td>수리·근무 환경개선, 숙영동 신축* 및 리프팅도크 친환경 설비 설치** 추진('27년～'30년)
* 국유기금(총 사업비 170억, 4년차('27～'30년) 중기계획 제출
** 리프팅도크 친환경 설비 선정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중기계획 제출</td></tr>
<tr><td></td><td>6.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td><td><시정・처리결과>
□ 조치대응
○ 정보시스템 정비 및 등급 상향 검토 확정(12. 4., 국장 주재회의)
○ (등급 상향 검토) 행안부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 등급 상향 추진
<table>
<tr><th>정보시스템명</th><th>현 등급</th><th>목표 등급</th></tr>
<tr><td>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원격응급의료시스템</td><td>4</td><td>1</td></tr>
<tr><td>업무포털시스템</td><td>3</td><td>1</td></tr>
<tr><td>선박패스시스템(V-Pass)</td><td>3</td><td>2</td></tr>
</table>
○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확충* 검토
* 장애 예방 및 대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소요직제 대응('26. 3월)
<향후 추진계획>
○ 1등급인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통해 재해복구(DR) 설계 추진 예정('26. 5월)
○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해복구시스템(DR) 및 백업체계의 단계별 도입 방안 수립·예산* 확보('26. 8월)
* '27년 소요제기, 9.2억
○ 정보시스템 등급 상향 협의(행정안전부) (~'26. 12월)</td></tr>
</table>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연구센터 R&D사업 효율적 추진 및 3D 프린팅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 R&D 사업 효율적 추진 ○ (자체연구) 해경청·소속기관에 연구과제 공모, 현장의견을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 ○ (자문/심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심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선정·추진 □ 3D 프린팅 관리체계 개선 ○ (연구개발) 시제품의 실용화율을 높이기 위해 '26년 자체 연구과제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수요자 참여형 연구 추진('26. 3월) ○ (의견수렴) 기존 3D프린터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재질로 대체 가능한 부품 현장 적용(상시) **<향후 추진계획>** □ R&D 효율성 증대 ○ 신속한 현장적용 및 수요와 연계된 임무장비 개발을 통한 실용화 확대 * 해양오염 및 해양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확산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27년 국가 R&D 신규사업 대응 중 □ 3D 프린팅 ○ (예산확보) 실효성 있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속 3D프린터 도입 예산 확보 추진('27～'28) ○ (기술교류) 정비창·해군 등 3D프린팅 기술을 활용 중인 유관기관의 기술교류·협력('26～'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오염방제	1. 해양오염관련 변상금 미수납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법률자문) 변상금 미납시 제재가능범위 및 징수방안 변호사 자문('25.10.14.) ㅇ 자문결과 출국제재 불가 및 해외재산압류 제한적, 선체 및 오염보험 등을 통한 채권확보 필요 □ (보험정보 공유) 무보험 선박 방제비용 미납 방지를 위해 해수부 방문 협의('25.11.26.)를 통한 유류오염보험 가입정보 공유('26.2.26.) * 유류오염배상법에 따라 국내선박 및 입항선박 오염보험 가입정보 해수부가 보유 **<향후 추진계획>** □ 장기체납 납부의무자 실제 납부능력 전수조사 및 채권관리('26년 연중지속) □ 비용납부 독려를 위한 미납금 연체료 부과 법령개정 해수부 협의('26년~) ㅇ 향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소요 조사 시 반영 요구 예정
	2.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측정 간이분석장비의 주기적 검·교정 필요	**<시정·처리결과>** □ 검·교정 주기 설정 및 분석결과 이력관리토록 개선 조치('25.8月/완료) ㅇ 전문기관에서 2년(ISO 최소권장주기)마다 검·교정 받도록 주기 설정 ㅇ 점검보고서에 분석 결과지를 첨부하고 시스템에 등록·관리토록 개선 **<향후 추진계획>** □ 검·교정 및 시스템 등록·관리 여부 주기적 확인 점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조직운영	1. 파출소 근무 규정 위반·성 범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쇄신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양경찰청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수립('25.10.28.) ○ 현장부서(파출소, 함정 등) 기본근무 이행실태 확인 등 공직기강 확립 점검('25.10월) ○ 성비위, 갑질 등 주요비위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 관리자용 핸드북 제작·배포('25.12월, '26.1월, 5000부) □ '26년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직기강 확립 추진('26.3.13.) **<향후 추진계획>** □ 선제적 예방 중심형 공직복무·예방감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나 정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현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예정('26.3월~) ○ 시기·테마별 주요 점검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 잔존하고 있는 악습 발굴·개선 등 공직복무 관리 예방 감찰활동 실시('26.3월부터 수시)
	2.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내부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종합청렴도 향상 및 평가 대응계획* 수립('26. 2. 4.) □ 기관장 주관 청렴도 향상 공유 회의 개최('26. 2. 27.) **<향후 추진계획>** □ 기관장 주관 청렴도 향상 추진 점검회의 개최(2, 3분기) □ 부패방지교육(연중), 상호신뢰 및 존중 캠페인 추진(연중) * 상호존중의날 운영(매월 11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렴동아리 재구성 및 운영('26.3월) * 청렴한박스('26.10월) □ 청렴 문화 확산 및 반부패 행위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전문강사 초빙교육(본청 '26.6월), 소속기관 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 * 전직원 반부패・청렴 사이버교육 2시간 수강(연중)
	3.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 대상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징계 기준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26년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으로 비례성 원칙 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징계 처분 방안 마련('26.3.13.) ○ 징계 처분 '사전컨설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징계위원회 前 타 기관 징계 사례 공유 등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비례성 원칙에 맞는 징계 처분 추진('26.3월부터 계속)
	4. 평택 대산항 경찰관 공상사고 관련 전면 재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당 경비함정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불구속 송치('25.8.25.) 결정되어 기소중지 형사 조정 절차 진행 중('25.10.2.) **<향후 추진계획>** □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상황보고서 누락 경위 등 사건 은폐・축소에 대해 감찰조사로 문제점 등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함정스피커 등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 개선	**<시정・처리결과>** □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및 경쟁입찰 활성화를 통해 계약업체 다변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계약 추진 * (상한제 도입) 年5회 동일업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신규 계약업체 다변화 추진 * (경쟁입찰 확대) 경쟁입찰 활성화로 신규 중소기업 등 우수업체 참여 확대 □ 특정업체 집중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하달·시행('25.11.3.) **<향후 추진계획>** □ 특정업체 집중 수의계약 방지 등 지속 추진
	6. 해양경찰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확보 필요	**<시정・처리결과>** □ (국회 증액) 해양경찰병원 사타 용역비(2.5억원) 확보를 위해 국회 방문 설명('25～'26년) 등 □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시 해양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설립 추진 보고('25. 12. 23) * 【보고 내용】 해양경찰 직무 특성으로 야기되는 부상·질병에 특화된 의료시설 설립 추진 □ (예산안 제출) 해양경찰병원 사타 용역비(2.5억원) 중기사업 계획서 기획예산처 제출('26. 1月) **<향후 추진계획>** □ (예산 대응) 해양경찰병원 사타 용역비 반영을 위해 '27년도 정부예산안 요구 및 대응 예정 ('26. 5月～)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함정 등 현장과의 소통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 가입 기준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유관기관 비교분석('25.11.), 관련기능 의견조회('25.12.), 행정안전부 업무협의('26.1.) 등을 통해 가입 대상 확대('26.1.14.) * 전체 13,562명 中 6,900명(51%) 제한 → 2,878명(22%)으로 확대(약 78% 가입 可) □ 직장협의회 설립・활성화를 위한 소속기관 컨설팅 지원(4회) * 창원서[1.28.~29.,행안부주관]·태안서[2.4.]·여수서[2.12.], 소속기관 기획운영계장 대상 컨설팅(2.10.) □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 T/F팀 구성(3.16.)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노무사) 활용, 직장협의회 설립 희망자 대상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화상교육 실시(3.31.) □ 자발적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T/F팀 운영(격주 1회)
	8. 국제적 해양경찰 임무특성을 고려, 조직의 업무범위 등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양경찰 미래발전 전략(Vision 2040) 연구('25. 12월)를 통해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맞춰 주요정책 추진(상시) * 국정과제 76번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해경청 협조부처)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고흥 및 제주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경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개발(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완료('24. 12月)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6년 정기직제를 통해 해경서 신설 요구안을 제출('25. 3月)하였으나 관계부처 검토 단계에서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고흥 및 제주동부 해역은 해경서 신설 필요성이 연구용역에서 확인되며, 이를 토대로 행안부 직제 소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26. 3月~)
	10. MZ세대 경찰관 의원면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시정・처리결과>** □ 우수 직원이 빠르게 승진 가능토록 속진형 경위임용제* 계속 시행 *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사 중 인재를 선발·교육 후 경위 승진('24년 5명 / '25년 4명) □ 팀 포상제와 적극행정 승진가점 등 즉시성이 있는 포상 실시(연중) **<향후 추진계획>** □ 비연고 근무 고충 경감을 위해 지방청 전보제한의 단계적 축소(10→5년/~'32년), 부부공무원 합가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26년 12월) □ 상호존중·배려·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연중) □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으로 세대와 성별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26. 4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여성 경찰관 고위직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5년 정기 승진심사 시 역대 3번째 여성 총경 배출('21년 이후 4년 만의 여성 총경) ※ (경감 이상) '24년81명→'25년106명→**'26년 126명** □ 여성 경찰관 역할 확대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해 성과지표(KPI)에 여성 주요보직자* 비율을 반영하여 가점으로 관리 * 경감 이상 여성 주요보직자 **12명(6.1%) 증가** 시행 전('25년 1월) 25명 → 시행 후('25년 12월) 37명 **<향후 추진계획>** □ 여성직원 비율을 높혀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 시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 '26년 충원 계획 수립 시 여성경찰관 비율을 경위공채·외국어 채용은 20%로 유지, **순경공채·함정요원 채용 확대**(10%→15%) □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근무경력 등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능력있는 여성 경찰관을 적극 발탁(연중)
	12. 함정·파출소 등 지방관서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시정・처리결과>** □ '26년(2월)에 신규 임용된 경찰관 296명 현장부서 우선 배치*(충원율 97.8%) * 함정 198, 파출소 54, 구조 13, 관제 12, 특공 9, 수사등 10 **<향후 추진계획>** □ 신속한 현장 충원*을 위해 신규임용 경찰관을 현장부서 우선 배치 예정 * 신규채용 및 교육생 500명이 임용되면 '27년 2월 예상 충원률 99.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table><tr><th>구 분</th><th>'26년 10월</th><th>'27년 2월</th></tr><tr><td>신규임용</td><td>300명 (교육 중)</td><td>200명 (채용 중)</td></tr><tr><td>충원률</td><td>98.3%</td><td>99.9%</td></tr></table> □ 육아휴직 및 의원면직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임용대기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인력 충원* * (충원규모) '24년 483명 → '25년 681명 → **'26년 813명** □ 현장 인력을 사무실로 배치할 경우, 성과평가(KPI) 감점 등 엄격히 관리하고, 인사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
	13.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무와 직무 중심으로 교육훈련 전면 재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26년 현장부서 교육 훈련 기본지침을 직무 중심으로 수립 완료('26. 1. 7.) * 계급별 기본교육: 직무비율 50% 이상 **<향후 추진계획>**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 전문 과정과 보직 과정 지속 운영
	14. 전문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계획 재수립 및 '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3.10.) **<향후 추진계획>** □ 자체 T/F 운영 등 예타 최종 통과를 위한 조사 업무 대응

공백

부 산 항 만 공 사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항만공사	1. 사이버보안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4개 PA 기관장 업무협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완료('25.12.)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며, 4개 PA 공동 협의체 발족 추진('26.上)
	2. 관리자산 및 예산 규모 대비 전반적인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 대상 적극적인 증원 협의('25.下) ○ '26년 정기증원 인력 8명 확보('25.12.) **<향후 추진계획>** □ 기관 인력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 협의 지속 실시('26.上/下, 2회 증원 요청)
	3.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을 증액할 것	**<시정·처리결과>** □ '25년 대비 약 6억원(13.6%) 증액 편성 ○ (사회공헌 예산) 45.4억원'25. →51.6억원'26. * (영업이익) 1,295억원'24. → 1,440억원'25.
	4.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관리·심사 강화하고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할 것	**<시정·처리결과>** □ 투자사업 의사결정 시 외부위원 50% 이상 참여한 투자심사 실시('25.11.) □ 재무위험 선제적 대응체계 운영 ○ 재무지표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한 재무리스크 사전 진단,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 사업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고도화 ○ 투자사업 및 사업비 관리체계 고도화 ○ 심사위원 인력풀 재구성 및 전문성 강화 □ 선제적 재무위험 관리 강화 ○ 재무지표 상시 점검 및 관리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연계 투자규모 관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북극항로 전략 수립 시 정부의 멀티포트 전략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정부(해양수산부)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도록 부산항 북극항로 전략 수립 예정
	6.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선임 시 특정 기관 출신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제7대 사장 선임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6.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 * 취업심사 결과 확인(4월초), 인사검증 및 결격사유 조회(4~5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5월)
	7.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 완료('26.3.) ○ 대표 홈페이지, ERP, 업무관리 등 7종 * 백업 체계 상시 운영 : VTL(논리적, 디스크) 1차 백업 및 PTL(물리적, 테이프) 2차 백업 병행 **<향후 추진계획>** □ 핵심 정보시스템(2등급)인 체인포털 이중화 및 DR 구축 추진('26.~'27.) * 클라우드 기반 이중화('26.下), DR 구축('27.下)
	8. 경영혁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항만공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주무부처(해양수산부)와 협의 추진
	9. 감천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사하구청과 다대부두 개방을 위한 MOU 체결 논의('26.1.~) * 사하구청 주관 '다대부두 관리이관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26.7.) □ 친수시설 공간조성을 위한 대포어촌계 주민 및 관계기관 간담회 실시('25.12., '2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감천항 인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유사사례 벤치마킹 등)
	10. 부산항 클러스터 사업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심업체 대상 방문 홍보・마케팅 추진('26.1.~2.) □ 입주 지원혜택(각종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지자체 협의 중('26.3.~) **<향후 추진계획>** □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대책 마련('27.上) □「해양산업클러스터법」개정(PA 관리・운영 권한 강화) 협의(해수부) □ 사업설명회, 물류박람회 참석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속 추진
	11.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및 사업화 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중 *「부산항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용역」(~'26.11.) **<향후 추진계획>** □ (단 기) 인근 탱크 터미널 활용 □ (중장기) 신항 남 '컨' 배후지역 내 벙커링 인프라 구축 추진 *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24.12., 관계부처 합동)
	12. 영도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상해 크루즈 포트세일즈 참석('25.11.) ㅇ 부산-상해 크루즈 대상 영도 크루즈 터미널 사용 협의 □ 유관기관 합동 영도 크루즈터미널 입항선박 사전 보안성 검토 회의('25.12.) **<향후 추진계획>** □ 대규모 크루즈 승객 수용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26.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청학안벽 활용 용도를 명확히 정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학안벽 일부 시설의 한계*로 인해, 안벽의 전용사용 및 전면수역 점사용 허가를 통한 활용 추진 * 약 400m의 안벽이 사유지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입 등이 불가하여 안벽 활용 어려움 □ 나머지 안벽(약 800m)은 공용부두로 지속 활용(선석 회의를 통한 사용 등) 예정
	14. 신항 7부두 물동량 확대, 대기 시간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비 자동화시스템 시설 보강, 안정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개선 중 □ 글로벌 선사 얼라이언스 서비스 유치 등을 통한 신규 물동량 확보 추진('26.3.~) **<향후 추진계획>** □ 신항 7부두 운영 효율화 협의체 운영(월1회) 및 피더부두 등 시설 확충('26.7.~)
	15. 신항 터미널 과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최적 통합방안 등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사와 논의 진행 * 신항 '컨'터미널 통합 운영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25.12.) □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적모니터링 시스템 등 개발·적용 중('26.2.) **<향후 추진계획>** □ 신항 터미널 통합 운영방안 등 마련을 위한 TF 지속 운영(정부·BPA·운영사)
	16. 제주-부산 크루즈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연안화물 노선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부산 간 연안화물 수요 및 운항 여건 실태조사 공동연구('26.1.) □ 제주 입항 크루즈 대상 제주-부산 연계 스케줄 공동협력 중('2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제주도 등)과 협력방안 지속 협의 및 공동 마케팅 추진 □ 제주-부산 기항 크루즈 적극 수용
	17. 항만공사 간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수산부-PA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6.~, 분기 1회) **<향후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표준화·공동과제 발굴 및 이행 등 지속 협력
	18. 항만공사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보안 일원화 로드맵 수립('26.1.) ○ 일원화 1단계(4조 2교대 개편) 추진 - 시범운영('25.6.~), 임금개편 용역(~'25.12.) **<향후 추진계획>** □ 4조 2교대 단계적 전환 추진 ○ (4조 2교대 정식 운영) 임금체계 확정, 규정·제도 보완 노·사 합의(~'26.上) ○ (4조 2교대 확대) 보안구역 해제 일정에 맞춰 점진적 확대(~'28.12) * 해양수산부 ‘항만보안 일원화 추진 로드맵’ 수립 일정에 따라 추진
	19. 불법 전대와 임대 관리 부실 문제를 점검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배후단지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 전국항만 최초 운영('23.9.~) * 신고제도를 통해 G사의 불법전대 사실 접수 □ 배후단지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규정·실시협약 이행 실태 정기 점검('26.1.~) * 현재 운영중인 입주기업 68개사 전수조사 **<향후 추진계획>** □ 공익신고센터 및 정기점검 제도 계속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장기 방치 선박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	**<시정・처리결과>** □ 유관기관(부산청, 남해해경, BPA)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5.7.~, 분기1회) ○ 현장 합동 점검 및 고위험 취약선박 지정・관리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업, 방치 선박 관리(고위험 선박 자진 폐선) 및 개선 지속 이행
	21.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부처 및 보안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 ○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비행금지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 항만보안법상 우리기관의 보안책임구역은 항만시설에 국한됨
	22.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수부(부산청)-BPA 공동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중(~'26.4.) * 안티드론시스템 안정화 시점(~'26.8.)까지 기 운영 중인 드론탐지시스템은 계속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안티드론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보안 협의·훈련 추진 ○ 군·경 공조 대응 체계 공고화,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정립, 보안인력 운용 숙지 ○ 안티드론시스템 활용 보안훈련 실시(분기)
	23.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산항보안공사 노·사간 임금교섭 3년만의 타결 지원('25.12.) * 노조 핵심요구사항인 '중식보조비' 지원 등 **< 그간 청원경찰 처우개선 현황>** - ('15년~'18년) 특수경비원 기본급 인상(청원경찰 수준) - ('19년)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전환 - ('20년) 호봉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인상 - ('21년~) 복지 확대를 위한 건강 관리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근무 교대제(4조 2교대) 단계적 전환 추진(~'28.12.) ㅇ 향후 보안구역 해제에 따른 유휴인력 재배치 및 증원 추진 * 해양수산부 '항만보안 일원화 추진 로드맵' 수립 일정에 따라 추진
	24.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AMP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이용률 제고 기반 확보('25.12.) ㅇ 정부 중기계획('19.)상 부산항 전 부두 AMP 구축 목표 시점(~'40년)에 대해 전문가 회의,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조기화 필요성 도출 ㅇ 중기계획 재수립 시기에 맞춰 구축 목표 단축(~'32년) 요청,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25.12.) □ AMP 인센티브* 지원 연장(~'27.) * 전기 기본 사용료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육상-선박 간 수전 공급기술 지원 **<향후 추진계획>** □ AMP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 및 이용자 간 간담회 추진(반기별) □ 북항(신선대, 감만) AMP 추가 구축('26.~'28.)
	25. 신항의 질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형 터미널 운영체계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최적 통합방안 등 논의 진행 * 신항 '컨'터미널 통합 운영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25.12.) □ 터미널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환적 모니터링시스템 적용 중('26.2.) **<향후 추진계획>** □ 신항 터미널 통합 운영방안 등 마련을 위한 TF 지속 운영(정부·BPA·운영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동북아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포트 조성과 운영체계 개선 등 추진 ○ (메가포트 조성) 진해신항 1-1단계 (3선석, 안벽 1,390m, 수심 23m) 착공('25.12.) ○ (운영체계 개선) 신항 '컨'터미널 통합 운영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25.12.) ○ (해외물류거점 확보) 인도네시아(2개소), 유럽(2개소), 미주(1개소) 물류센터 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 부산항 허브 경쟁력 지속 강화 추진 ○ (메가포트 조성) 신항 남 '컨' 배후단지(1,161천㎡) 입주기업 공모('26.下) ○ (운영체계 개선)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TF 지속 운영(정부·BPA·운영사) ○ (해외물류거점 확보) 사업 제안 공모 등 신규 해외사업 지속 발굴
	27.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 내 운송장비 및 하역장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신기술 개발 ○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모니터링 기술('23.9.~'25.12.) - 항만크레인 전도방지 신기술 개발(~'25.12.) **<향후 추진계획>** □ 주기적인 현장 및기술보유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안전 신기술 개발 지속 추진 ○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안전사고 탐지예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26.7.) ○ 컨테이너 라싱로봇 기술개발(~'26.9.) ○ 콘 자동 탈부착 장비 개발(~'28.12.) ○ 추론형 VLM 기반 항만 이송장비(YT) 안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27.5.) ○ 크레인 레일 파손 자동 감지기술('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지 진출 물류기업(중소·중견) 간담회 등을 통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파악, 개선사항 관리 * 베트남 하노이·호치민('25.10.), 미국 LA/LB('25.11.), 스페인 바르셀로나('26.3.) 현지 물류기업 간담회 개최 □ 한국 소비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설비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지속 증가 * BPA 해외물류센터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42%'23. → 50%'24. → 66%'25.) **<향후 추진계획>** □ 중소·중견기업 대상 다품종 소량화물 우선 취급, 통관 서비스, 공유 오피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 □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판로개척 계속 등
	29. 해외사업 인력관리 비용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되도록 기재부에 적극 요청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외 파견에 따른 부대비용 중 '자녀학비보조금'을 총인건비 산정 대상 제외 조치('25.) * 2025년도 해양수산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中 - 공무원 수준 이내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체재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 - 제외 조건 : ①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함을 내규에 명시하고, ② 회계처리시 별도 계정과목으로 설정 **<향후 추진계획>** □ 기타 부대비용(현지국 소득세 대납분)의 총인건비 제외 관련 부처 협의 추진
	30. 북항 재개발에 있어 공공성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사업시행자 역할 확대(하부→ 상부+하부 개발)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및 추진 중('25.3.~) □ 선분양부지 토지매수인 협의 및 당초 사업계획 이행 촉구 중(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사업자 사업계획 이행 관리 등을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마련('26.3.~) □ 토지분양 시 발생 가능 리스크 자가진단 정례화 (분기별) 추진 ('26.3.~) **<향후 추진계획>** □ 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속 □ 선분양부지 토지매수인 협의 및 당초 사업계획 이행 촉구 지속 □ 공공성 강화를 위한 표준 공모지침서 및 행정절차 체크리스트 마련(예정) □ 토지분양 시 관리기관 사전 승인・협의절차 강화 및 외부위원 과반수의 심의위원회 도입 추진(예정)

인 천 항 만 공 사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미납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장기 미납채권 외부 전문기관 위탁 추진 ○ '26년 미납채권 관리방안 개선 수립('26.1.) ○ 소송채권 등 신용정보사 추심 위탁 공고('25.12.) 및 계약 체결('26.3.) **<향후 추진계획>** □ 장기 미납채권 외부 전문기관 추심 위탁(~'27.3.) ○ 고액 채권부터 채권추심 우선 진행
경영관리	2. 사이버보안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조치실적>** □ (인력·예산 확보) 정보보호 예산·인력 확보 ○ 정보보호팀('24.7. 신설) 팀장 발령('26.1.) ○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 → 2명 증원 ○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20% 확보 □ (협의체 구성) 제7차 PA 업무협의회 안건 협의 **<향후 추진계획>** □ 4개 PA 사이버보안 협의체 발족('26.上) ○ 공동 훈련,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방안 논의
경영관리	3. 안전관리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조치실적>**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 확충을 위한 전보인사, 신규채용을 통해 '24년 말 대비 4명 증가한 총 23명 확보(19명'24년말→23명'25년말) ○ (안전관리실) 13명'24년말→16명'26.1 (개발계획처 건설안전관리팀) 6명'24년말→7명'26.1 □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 '26년 안전예산은 전년 대비 35억원(9.26%) 증가한 416억원(381억원'25년→416억원'26년) - 주요 증가 사유는 통항안전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실시(42억원), 항만시설 정밀점검(18억원)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4. 공사 부채비율 현황을 점검할 것	**<조치실적>** □ 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23년 67%→'24년 62%→'25년 56.5%) o 전사 차원의 수익확대, 지출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달성 o 골든하버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한 차입규모 감소로 부채비율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재무개선 TF 운영('26.3.~) o 신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수익 확대 o 고강도 지출절감 노력을 통해 공사 부채비율 개선 o 골든하버 잔여부지 대상 투자유치 노력과 추가 자산매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경영관리	5.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조치실적>** □ 공사 시스템은 무중단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성 완료('25.7.) o 분기별 원격지 데이터 소산으로 연속성 확보 □ Port-MIS는 해수부 및 4개 PA 공동으로 DR 센터를 운영, 장애 시 DR시스템으로 전환 **<향후 추진계획>** □ 4개 PA 공동 DR센터 구축 추진방안 논의 중 o '24~'29년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상 DR 센터 구축 계획 수립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6.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불법전대 근절방안 마련('25.5.) ○ 불법전대 정기점검 확대(1→4회), 불법전대 합동점검 실시('25.12.~'26.2., 해경, 세관, 해수부, 항만공사) ○ 신규 입주기업 선정평가 시 불법전대 적발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내부규정 반영('25.12.) ○ 상시 점검·관리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전담 부서 신설(배후단지관리실, '26.1.~) □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협의 (해수부 주관 / 4개 PA 합동, '26.3.) **<향후 추진계획>** □ 배후단지 관리 선진화 방안(가칭) 수립 ○ 불법전대 근절 및 배후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 모색 □ 해수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전대요건 명확화 및 전대 가이드라인 마련 ○ 입찰참가 제한 등 불법 전대업체 제재 강화
항만운영	7. 항만배후단지 임대 기간을 형평성 있게 연장할 것	**<조치실적>** □ 합리적 임대 연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25.9.~'2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향후 추진계획>** □ 타 배후단지와의 형평성, 추가 투자 및 물동량 창출 계획,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 유무 등을 고려한 연장방안 마련('26.上) ○ 연장방안은 '27년 연장계약부터 적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8.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인천항 암모니아·수소항만 구축수요 해수부 제출(2개 선석, '23.9.) ㅇ 해수부에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중 □ "친환경 연료 벙커링 활성화 실무협의회" 참여 ㅇ 친환경 연료 벙커링 동향 공유, 항만 인프라 표준화, 벙커링 활성화(홍보) 등 추진 *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 4대 PA, '26.2.~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계획 확정시 해당 계획에 따라 인천항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예정 □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동향 파악, 벙커링 지원 등 추진
항만운영	9. 인천-제주 항로 재개를 위한 지원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인천-제주 항로의 경제성·타당성 분석 용역 공고 추진 * (1차 공고) '25.11.27.~12.10. 유찰(무응찰) / (2차 공고) '25.12.15.~12.26. 유찰(무응찰) **<향후 추진계획>** □ 인천-제주항로의 경제성·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재개 노력 지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10. 골든하버 부지매각 계획 및 근린공원 미개방 관련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골든하버 앵커시설(스파)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호텔업 위주 투자유치 실시, 잔여부지의 성공적 매각을 위한 관련 용역 예산 확보(5억원, '25.10.) □ 골든하버 공공시설(공원) 이관을 위한 관계기관 간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5.12.) **<향후 추진계획>** □ 골든하버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추진 ㅇ 마스터플랜 롤링, 투자설명자료(IM) 작성 등 □ 골든하버 공원 시설개선공사 설계·조성 후 이관 ㅇ 시설개선공사 설계('26년) ㅇ 시설개선공사 시행 및 이관('27년~'28년)
항만운영	11. 항만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를 추진할 것	**<조치실적>** □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추진 로드맵 마련('25.11.) ㅇ 해수부와 4대 항만공사 공동작업 수행 * 교대제(4조 3교대→4조 2교대) 개선 완료('24.7.)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중장기) 임금체계 표준화(호봉제→직무급제) □ (2단계, '28년말) 특수경비원 → 청원경찰 전환 ㅇ 청원경찰법 개정과 민간 운영사(13社) 합의 선행 □ (3단계, 중장기) 통합전담기관 설립
항만운영	12.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	**<조치실적>** □ 국가중요시설 보안구역 내 드론 금지구역 설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향후 추진계획>** □ 안티드론시스템 운영매뉴얼 기반 드론비행 금지 권역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조) ㅇ 드론의 접근 거리 및 위험수준 고려하여 단계별 관리 권역 설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13.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조치실적>** □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완료('25.8.) **<향후 추진계획>** □ 인천항 3개소에 탐지·식별·무력화 장비 구축('26.7.) □ 안티드론시스템 통합운영체계 운영매뉴얼 최적화 및 전담 운용인력 교육훈련·배치 □ 군·경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드론테러 대응 합동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항만운영	14.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25.11.~) ○ 기관별 역할 확정 및 인천시 수행 용역 관련 협의('25.12.) * 관계기관 TF 총 5회 운영(~ '26.3.) **<향후 추진계획>** □ 중고차 수출 관련 사업방식 및 부지선정 용역 추진('26.4~'26.11, 8개월) * 인천시는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25.12.~'26.5.)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주요 키워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재무관리	1. 공사 부채비율 현황 점검 필요	**<시정·처리결과>** □ 부채비율 현황 점검 및 부채 관리 강화('25.11.) ○ 투자사업 관리 강화, 경비 절감, 박람회장 선투자금 상환(958억원) 등으로 부채비율 개선(41.2%'24년 → 40.6%'25년) **<향후 추진계획>** □ 부채비율 현황 정기 점검(반기) ○ 경상경비 절감 및 신규 투자사업 최소화 등 재무 관리 강화
미납채권	2. 항만공사 미납채권 관리 필요	**<시정·처리결과>** □ 분기별 미납채권 관리 강화 ○ 채권별 회수 실적 및 계획 점검 강화로 미납채권 감축(205억원'24년→125억원'25년) - 채권이 전액 확보된 '컨'부두 운영사 유예임대료* 114억원'25년을 제외한 실질 미납채권은 11억원 수준 * 운영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유예한 임대료로, 대주주 자금보충약정 및 연대보증으로 채권 전액 확보 완료('27.6월 내 전액 회수 예정) **<향후 추진계획>** □ 미납채권 현황 모니터링(매분기) ○ 체납기간별 납부독촉, 채권 추심 등
사이버보안	3. 사이버보안 인력·예산 확보, 항만공사 간 협의체 구성 필요	**<시정·처리결과>** □ (예산) 매년 정보화 전체 예산 대비 사이버보안 예산 15% 이상 책정 * 국정원 정보보안지침 제5조에 따라 정보화 예산 대비 사이버보안 예산 15% 이상 수립

주요 키워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인력) AI 생태계 구축 등 정보화·사이버보안 인력 증원(1명/'25.12.) **<향후 추진계획>** □ 4개 PA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예정('26.2분기)
수의계약	4.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적정성 점검 필요	**<시정・처리결과>** □ 수의계약 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 규정 개정('26.4.) ○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제한 명문화 ○ 동일 업체 수의계약 제한 조항 신설 등 * 회계연도 내 동일업체와 5회 초과, 또는 1억원 초과 불가 ○ 수의계약 체결 정보의 공개 의무화
항만안전	5. 항만 안전관리 철저 필요	**<시정・처리결과>** □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CEO 주도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 고도화 ○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실시 * 열화상 드론, 수중 드론, AI분석 드론, 등 ○ 스마트 안전장비 대여 플랫폼 운영으로 안전 취약업체 지원('25.10.~) * AI 중장비 협착 경보기, AI 에어백 조끼 등 ○ CEO 주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취약시기별(명절, 휴가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 안전장비 대여 플랫폼 확대 운영 ○ AI 장비 추가 수요조사 및 구매('26.上) □ CEO 주도 안전점검 강화 등 사고 예방 지속 관리

주요 키워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여수박람회장	6.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있는 마스터플랜 추진 필요	**<시정·처리결과>**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설문조사 시행('25.10월) 및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연중) **<향후 추진계획>** □ 전남도·여수시 협력을 통한 공공개발사업* 구체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K-컬쳐 아레나 조성사업 등
여수박람회장	7. 2026여수섬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	**<시정·처리결과>** □ 개최 지원을 위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 지원협의회」 참여('25.10~11./2회) **<향후 추진계획>** □ (여수박람회장 활용) 박람회장 대관시설 우선 사용 지원 및 대관료 감면 ○ 필요시 여수시 협의를 통해 대관료 감면율 상향 여부 검토 □ (추가 지원) 홍보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여수시 지원 요구사항 적극 대응
인사	8. 공석인 신임 사장의 조속한 인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신임사장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26.1월~) ○ 임원 최종후보자 추천(해수부, '26.2.13.)
사이버보안	9. 정보시스템 DR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주요 업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대상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중('14.10~) ○ 서비스 중단 예방을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전체 이중화 완료('23.12~)

주요 키워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인사	10. 크루즈 특경 위·수탁 계약 관련 징계 감경 타당성 검토, 재발 방지 필요	**<시정·처리결과>** □ 크루즈 보안경비 계약 관련 징계의 건 등, 향후 '보안 관련' 징계 시 양정 감경 제외를 위한 규정 개정 타당성 검토 * 노무사 자문 결과, 근로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필요 □ 노동조합과 규정 개정 관련 1차 업무 협의 추진('25.11.) **<향후 추진계획>** □ 2차 규정 개정 관련 업무 협의('26.3월 中)
해양산업 클러스터	1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율, 수익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상시모집공고 진행 및 임대료 감면(최대 40%) 등 기업친화정책 시행 중 □ 총 임대면적(132천㎡)의 약 55%를 자동차 야적장(72천㎡)으로 임시활용하여 추가 임대수익 창출 □ 자동화 스마트 크레인 제작기업 유치 * C/C 제작 H사 신규 입주('26.3.~'27.11.) ** T/C 제작 S사 입주 연장('26.1.~'27.6.)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협력) 친환경 탄소저감 R&D 기술 실증과제 유치를 위한 MOU 체결('26.上./전라남도) □ (대외홍보) 설명회 개최, 신기술 박람회 참석 및 홍보 등 입주율 제고 활동 추진
불법전대	12. 불법전대 현황 점검하여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불법전대 전수조사 완료 및 해당사항 없음('25.11.) ○ 분기별 입주기업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법적 주의사항 안내

주요 키워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안티드론	13.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안티드론시스템 설계 용역('25.7.~12.)을 통한 구축지 선정, 상세설계도 및 운영비용 등 산출 **<향후 추진계획>** □ 안티드론 탐지·식별 장비 도입 등 시스템 구축('26.下)
AMP	14.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적극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AMP 전기요금 지원 인센티브 등으로 기 구축*된 고압 AMP 이용 실적 증대 * 고압 AMP 6선석(3대) 설치('19년 2대, '20년 1대) ○ '23) 0회 → '24) 4회 → '25) 8회 **<향후 추진계획>** □ 항만 AMP 구축 계획(해수부/'25.12.)에 따라 '35년까지 3선석 추가 확보 * 6선석'25년→9선석'35년 □ 해수부, 4PA 공동 AMP 관련 기술* 개발 * 이동식·모듈화 AMP, 무인 AMP-선박 연결 기술 등 개발(항만육상전원 공급설비 구축 계획(해수부/'25.12.))

공백

울 산 항 만 공 사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인사평가 오류 재발방지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역량평정 계획 사전공개, 외부전문업체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 역량평정 결과 점검단(내·외부위원 구성) 운영 및 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승진명부 양식 개선을 통한 수기입력 영역 최소화, 승진후보자 명부 다회 교차 검증 시행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역량평정 및 승진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경영관리	2. 사이버보안 협의체 구성 등 사이버보안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시정·처리결과>** □ '26년 정보보안 예산 증액(60백만원) * '25년: 1,252백만원 → '26년: 1,312백만원 □ 정보보안 분야 중간관리자를 임명하여 대응인력 확충(1명) * '25년 상반기 1명 → 하반기 2명 **<향후 추진계획>** □ PA 사이버보안 협의체 구성·운영 - 통합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3. 영업이익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 증액 필요	**<시정·처리결과>** □ 단계별 사회공헌 예산 증액 **<향후 추진계획>** □ 증액된 사회공헌 예산 중 인근 주민 수혜성 예산을 50% 수준으로 확대 추진
경영관리	4. 미납채권 회수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미납채권 관리계획 시행 **<향후 추진계획>** □ 미납채권 전담인력(1명)운용을 통해 미납채권 회수 강화
경영관리	5.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 해결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항만안전점검 전문인력 증원과 안전역량 확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협력업체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종사자 안전교육,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하역안전지수 도입 등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6.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중 - 시스템 중요도 기반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투자 계획 포함 * 사업기간: '26. 2~7월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라 연차별 정보보안 인프라 투자예산 편성 및 집행('27.~'30.)
항만운영	7.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저압 AMP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압 AMP 인센티브 제도 시범도입 완료 □ AMP 이용안전을 위해 AMP 디스펜서 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수립 □ 울산항 저압 AMP는 상시 사용 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시 즉시 설치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 울산항 고압 AMP는 장래 15개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 소요분석을 통해 적정시점에 설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8.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토양오염 정화 조치 조속히 이행 필요	**<시정·처리결과>** □ 전담 TF 운영,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오염원인자 규명, 정화 노력 중임 **<향후 추진계획>** □ 오염원인자 규명 후 적법하고, 신속한 정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항만운영	9.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사업 조속히 완료 필요	**<시정·처리결과>** □ 4조2교대 도입 완료,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체계화 컨설팅 완료 및 적용 완료 □ 공사 소속 청원경찰은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전환 완료
항만운영	10.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차질없이 사업 진행 중이며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할 군·경과의 협의체와의 대응체계 강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 민·관·군·경 합동으로 군집드론 대응훈련 실시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드론 테러 대응 훈련 확대 □ 불법드론 대응 절차 컨설팅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11.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필요	**<시정·처리결과>** □ 『울산항 중장기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 전략』 수립 및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지속 **<향후 추진계획>** □ 울산항 중장기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 전략 고도화 및 공급망 구축 지속
항만운영	12. 항만게이트 전동화 가능성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근로자와 합동으로 안전성 확인 조사 시행 및 조치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전동 출입문 도입 방안 검토(항만 환경 고려)
항만운영	13. 항만 간 중복 투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친환경 선박 연료 구축방안(해수부 2023)에 따라 울산항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을 확보하여 국내 항만 간 협력 지속 **<향후 추진계획>** □ 타 항만으로 공급망 확장전까지 공급망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만운영	14. 불법 전대, 임대 관리 부실 문제 점검 필요	**<시정·처리결과>** □ 현재까지 항만시설 불법 전대 사례는 없음 **<향후 추진계획>** □ 불법 전대 예방을 위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 전대 예방 교육 예정 □ 자체 항만시설관리시스템 통해 항만시설 신청 누락 및 무허가 사용 없도록 관리

해 양 환 경 공 단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보전	1. 해파리 폴립 제거 잠수 인력 양성 및 해상풍력 관련 해파리 폴립 서식지 증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폴립제거 잠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워크숍 추진계획 마련(전곡항, '26.6.) □ 서식지 증가 교두보로 추정되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부산북항마리나 폴립 탐색·제거 추진('26.3.~6.) **<향후 추진계획>** □ 교육워크숍(매년) 개최로 인력양성 지속 추진 □ 서남해해상풍력, 부산북항마리나 폴립탐색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 및 마리나 폴립관리 지속 추진
해양보전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수거 목표 달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3년('23~'25년) 연속 수거목표(6천톤)달성 ○ 신규 장비 도입: 당초(소형어선) → 개선(전문조사선, 드론) ○ 업체선정방식 : 당초(소액수의계약, 가격중심) → 개선(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중심) * 수거실적: '23년(6,697톤), '24년(6,075톤), '25년(7,298톤)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수거 및 조사 등의 개선을 통해 침적폐기물 수거목표 달성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방제	3. 공단이 보유한 유회수기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 방제기자재(유회수기 포함) 실태점검 ○ 점검기간: '25.5.~9. <전수조사> ○ 대 상: 보유 방제기자재 ○ 점검결과: 양호 **<향후 추진계획>** □ 방제기자재(유회수기 포함) 실태점검 ○ 점검기간: '26.4.~9. <전수조사> ○ 대 상: 보유 방제기자재 □ 성능시험: '26.4.~12. ○ 20년 이상 유회수기 성능시험 □ 중점관리 및 컨설팅: 연간 ○ 내·외부 전문가 유지·관리 협업
경영관리	4.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규직+청년인턴 투트랙 채용 실시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 '26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4.6%)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ZERO 달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장애인 고용컨설팅 실시 및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방안 발굴 지속 ○ 장애인 직원 대상 평가체계 마련 ○ 장애인 직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배치 부서 및 직무 범위 확대 ○ 장애인 직원 대상 주기적 간담회 실시 **<향후 추진계획>** □ '26년 장애인 정규직 및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추진('26.~) □ '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컨설팅 참여 예정('26.~) □ 각종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 구직자 대상 채용홍보 및 직무 상담 등 실시('2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5.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재해재난 대비 백업 및 훈련 실시 ○ 재해·재난 대비 실제 복구훈련 실시 – 데이터 정합점검을 넘어 실 복구훈련 실시 (25.11.19.~12.16.) ○ 화재 등 전산실 소실 대비 원격지 소산 백업실시 ('25년 3회, '26년 2회 완료/서울→부산) **<향후 추진계획>** □ 백업시스템 고도화('26년) ○ 백업시스템 용량증설 및 대상 확대를 위한 고도화 실시 □ DR센터 구축 중장기 검토(중장기) ○ DR센터 구축 등 장애대응 및 재해복구계획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ISP 사업 내 과업추진('26년)
해양보전	6. 민·관·학이 함께 폐어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폐어구 재활용 기술 개발 관련 R&D 적극 참여 및 민관학 협의체 운영 ('25.12) ○ 산자부 주관 폐어구 재활용 R&D 공모 참여 및 민관협의체(연1회 운영 중) (과제명: 해양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폐폴리스틸렌 해중합 촉매공정 개발) **<향후 추진계획>** □ 해양폐기물 재활용 민관학 협의체 운영('26.4분기) ○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 도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보전	7. 중앙부처의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효과 및 위협요인 분석사업' 신규 추진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해양보호구역 지정효과 및 위협요인 분석사업' 추진 ○ 순천만갯벌, 대이작도 등 8개소 해양보호구역 문헌 및 현장조사 실시
해양보전	8.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쓰레기 저감 실무협의회 개최·참여 (경상남도청 주관, '25.12.19.) ○ (주요내용)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추진 방안 등 - '26년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홍보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효율적 추진 방안 ○ (참석기관) 경남도 내 7개 시·군, 4개 기관 - (시) 창원, 통영, 사천, 거제시 - (군) 고성, 남해, 하동 - (기관) KOEM, FIPA, FIRA, KNPS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실무협의회 개최('26.상반기) ○ 홍수기 전 유관기관 간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등 논의(예정)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보전	9.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노후선박 교체, 공공집하장 설치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할 것	**<시정 · 처리결과>**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해양폐기물 재활용 민관산학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 참여 노력 ○ (실적)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25.12, 장관 주재), 해양폐기물 재활용 민관협의회('25.1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 **<향후 추진계획>** □ '26년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해양폐기물 재활용 민관산학협의체 운영 예정('26.4분기) ○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 도출 및 협의
해양보전	10.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관련, 해양환경측정망 수준의 전문인력, 예산(분석장비)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시정 · 처리결과>** □ '26년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 예산 미확보 □ 공단 보유 분석장비의 공동활용(3건) **<향후 추진계획>** □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 유지관리 및 분석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방제	11. 위치미상 및 고위험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위치미상 및 고위험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관리 운영방안 수립 **<향후 추진계획>** □ 위치미상 침몰선박 정보 재검증 추진 및 잔존유 제거사업 신속 추진
해양방제	12. 대형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영 구난 전문기관 신설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중장기적으로 협의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기관 등과 대형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난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향후 추진계획>** □ 필요 시, 구조구난 전문 기관 육성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방제	13. 다목적 대형 방제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준설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접점 확대 및 사업수주 방안 협의 지속 ○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 현장설명회, 비관리청 영업활동 확대 등 □ 선내 인력운영체계 전면 개편으로 준설 수주 경쟁력 확보 ○ 위탁관리사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2교대 체제 확립(기존 ONE TEAM 체제) * 2교대 운영으로 일일 준설 작업량 증가 및 공사기한 단축 → 효율 약 50% 이상 개선 □ 항만공사 협의를 통해 부두 내 육상전원설비(AMP) 본격 사용으로 유류비 대폭 절감('25.10~) * (사업비 절감효과 5.4억원/년) 유류 7.1억원/년 → 전기 1.7억원/년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등에서 추진 중인 준설사업 모니터링 및 공사별 참여방안 모색

공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공백

2025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및 장애인 채용 다양화로 고용률 상승 ○ '24년 3.85% → '25년 5.56%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직원 추가 채용 추진('26.下)
경영관리	2.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보시스템 이중화, DR서버 지속 운영 및 화재 대비 전산실 외 별도 장소에 데이터 소산 백업 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백업·복구체계 및 시설 안전 정기 점검으로 운영 안정성 제고
주요사업	3. 폐어구 재활용 체계와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폐어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수요조사서 접수 완료('26.1.) **<향후 추진계획>** □ 폐어구 재활용 기술개발 및 체계 고도화를 위해 R&D 기획('26.上) 및 과제 추진 검토('27.上)
주요사업	4. 해양수산 R&D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행정 교육(KIMST EDU)에 보안 교육 신설·운영('25.5.)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조사('25.11.~) **<향후 추진계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개정 예정('26.10.)

공백

한국수산자원공단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수급업체 포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신뢰받는 안전경영 및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수산공단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25.12.) □ 최고경영자와 근로자대표 합동 해빙기 대비 건설 조경공사 현장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26.2.) □ 공단 및 수급업체 위험요소 점검, 안전관리 고도화 발전 전략 방안 수립을 위한 기관장 주재 안전담당자 회의 개최('26.1월, 3월)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점검(반기별) □ 고위험 작업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추진(상시) □ 수급업체 비상상황 대비·대응 훈련 및 전문화 교육 지원(수시)
경영관리	2.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및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26.1.~12.) □ 정보보안 전담 1인, 담당 1인으로 재편하여 업무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26.2) * (기존)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정보화 담당 2인 **<향후 추진계획>** □ 전담인력 충원을 위한 정기 증원 요구 등 인력 확보 노력 강화('26.6.~8) □ 정보보안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연합회 등 전문기관 주관 교육 추진(~'26.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진행(2회) 시 화상면접 방식 도입 및 장애인 전문 면접관 위촉 등 면접전형 응시 편의성 제고('25.11.~12.) □ 재택근무 제도 활용을 통해 출퇴근 부담 감소 및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 장애인 근로자 6명 신규채용 완료 ('25.12.~'26.1.) * ('26.1~3월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따른 부담금 미발생 중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을 위해 '26년 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진행 예정
주요사업	4. 수산종자방류사업의 품종별 효과 차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이 높은 품종 확대 및 방류 품종 편중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신규 방류 품종 3종 확대* 및 기존 방류 품종 3종**의 크기 및 시기, 지역 조정('25.12.) * 새조개, 벤자리, 우럭조개(총 78종→81종) ** 가무락, 바지락, 동남참게 □ 지자체 대상 방류품종 경제성 분석 결과 공유(설명회 개최 등 5회)로 방류품종 선정 시 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25.12.~'26.3.)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품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방류 담당자 대상 경제성 분석 결과 정보 제공 확대 □ 방류품종 확대 및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류지침 개정 지원('26.12.)
주요사업	5. 사천·남해권을 포함한 광역단위 자원 회복 체계 구축 및 국가 차원의 집중 관리 필요	**<시정・처리결과>** □ 사천·남해권 자원회복 대상종 검토 및 기초자료 확보('2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광역단위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우리나라 난·자치어 및 지역별 특화품종 생활사 연구정보 수집·분석('26.2.~) **<향후 추진계획>** □ 사천·남해권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업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 검토('26.上) □ 광역단위 자원회복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 노력('26.上) * (공단) 자료 조사, 컨설팅 (해수부·지자체) 행정 절차, 예산 확보 등
주요사업	6.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를 재검토하고 바다사막화에 따른 피해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대책 강구 필요	**<시정・처리결과>** □ 바다숲 사업의 실질적 효과 증진을 위한 민간점검단 운영, 테스트베드 운영,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등을 추진('25.12.~) **<향후 추진계획>** □ 바다숲 효과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 점검단 운영 및 점검 추진('25.12.~'26.6.) □ 기술 중심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기술포럼 및 신규기술 테스트베드(해역별 4개소) 운영('26.5.) □ 기후변화 가속화, 탄소저감 정책 확대 등 바다숲의 기능 다변화 요구에 따라, 2기 바다숲 사업 수행 방안 마련('26.5.) □ 바다숲 사업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26.7.)
주요사업	7. 국제기구의 의무승선률 확대 기조에 맞춰 옵서버 인력 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보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옵서버 양성 신규사업인 'K-옵서버 학교 운영' 신규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의('25.12./해양수산부) □ 승선경력 보유자에 대한 옵서버 응시자격 확대*로 신규 인력 유입 및 현장 전문성 확보('2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해경, 해군, 어업지도선 등 승선경력 보유자에 대한 옵서버 응시 자격 확대 □ 옵서버 자격 유지 요건 완화*로 인력 확보 * 직무교육(연 2회) 중 1회 이상 승선한 옵서버 대상 자격해지 요건 완화 검토 **<향후 추진계획>** □ 'K-옵서버 학교 운영' 제도화를 위한 주무부처 협의('26.4./해양수산부) □ 승선 중 직무훈련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26.9.) □ 경력직 옵서버 선발·운영('26.6.~) □ 'K-옵서버 학교' 사업계획 수립(~'26.12.)
주요사업	8. 수산분야 전문가 파견 ODA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FAO 협력 강화를 위한 PSMA 10주년 행사 공동개최 계획수립('26.3.) □ 아프리카·인도태평양 옵서버 인증 지원 ODA 사업 추진('26.3.~) **<향후 추진계획>** □ 국제협력분야 상호 정보공유 및 국제 거버넌스 기반 확대 노력('26.6.~) □ ODA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당국 협의 추진(~'26.12.)
주요사업	9. 어촌소멸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강화, 예산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필요	**<시정・처리결과>** □ 홍보 채널 다양화 등 세부사업 반영 및 추진 완료('26.3.) * (당초) 수산지 지면 홍보 → (개선) SNS,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향후 추진계획>** □ 홍보 채널 다양화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무부처와 예산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지속 협의 * 청년 좌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 및 의견개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사업	10.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임대인(노령어업인)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청년어업인 자부담 완화(자기부담률 50%→30%), 권역별 컨설턴트 운영(4명→9명) 사업계획 반영·추진('26.2.) **<향후 추진계획>** □ 시·도 단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실시 및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좌담회 개최 * 시·도별 2회(총18회) 개최, 좌담회 상반기 중 개최
주요사업	11. 공단 제주본부 시설물 노후화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후생명자원센터 설립안 마련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주무부처 합동 제주본부 시설물 노후화 현장 점검('25.10.) □ 제주 기후대응 수산생명자원센터 설립(안) 마련('25.11.) □ 센터 실시설계비 8억원 확보('25.12.) **<향후 추진계획>** □ 건축기획 및 사전 검토('26.3.~9.) □ 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26.10.~)
주요사업	12. 어부가 판다 플랫폼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 및 담당자 조치 계획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담당자 주의 조치('25.10.) □ 월별 플랫폼 운영 실적 관리('25.10.~) * '24년 대비 방문자수 78.4% 향상 □ 지역축제*를 활용한 플랫폼 홍보 등 소비자 인지도 제고 노력('25.12.) * 부산 고등어축제, 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13건/'25.12.) 및 서버 증설('26.3.)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지속 이행으로 안정성 확보('26.4.~) □ 어촌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개편 추진('26.6.~) □ 지역축제·박람회 등 오프라인 행사 연계, 이용자 인지도 제고 강화('26.4.~)

공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업관리	1. 하이브리드 선박의 체계적인 검사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하이브리드 선박검사 방안이 반영된 내부 지침(안) 검토·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 건조검사와 해상시운전시 고장설비 제조사와 연계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검사 강화 □ (지침 마련, '26上) 하이브리드 선박 검사 방안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 후 검사 현장 반영
사업관리	2. 한강버스의 전기계통, 방향타 등의 고장원인에 대해 파악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타신호 수신부 타각조타신호 수신 타각전달 레버(가변저항) 고정 불량으로 전문업체 참여, 전수조사 및 조치 완료 □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하여 고장분야 집중 점검 실시 □ 105호~108호 건조 조선소에 방문하여 고장분야 집중 현장 점검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선박검사 시 유사 선박에 대한 고장 취약 분야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업관리	3. 선박 시운전 검사 시 운행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과 운행 여건을 확인함 **<향후 추진계획>** □ 특정항로 및 조건에 따른 운행 적합성 판정은 관계 기관과 선주 요청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계획
사업관리	4. 내수면선박 구명·소방설비 도면승인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행 규정의 적합성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을 통해 내수면 선박 구명·소방설비 도면승인 제도의 보완 필요성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의견조회, '26上) 현행 규정의 적합성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실시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업관리	5. 여객선 선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추진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공단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내항 여객선사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제작, 안전·보건 컨설팅 등 관련 업무 추진 * 국가보조항로 여객선(29척) 안전・보건 물품 제공('25.11.) * 여객선사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25.11.～12.) * 내항여객선사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25.12.～'26.3.) * 여객선사 안전・보건 컨설팅 수행('26.1.～6.) **<향후 추진계획>** □ 공단이 여객선 선원 안전·보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 여객선 운항관리자 직무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추가 반영 추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6년) ○ 공단을 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추진 *「선원법」 개정('26년) □ 내항여객선사 안전·보건 지원 지속 추진(중장기) ○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 종사자 교육, 내부직원 역량강화, 안전 캠페인 실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원 등('2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업관리	6. 부유물 감김사고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유물 감김사고 다발지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관기관과 항해장비 제조업체에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부유물 수거사업과 정보표출에 활용 中 **<향후 추진계획>** □ 효과적인 부유물 제거사업 지원을 위해 상세 분석 정보를 지속 제공·최신화 □ 부유물감김사고의 다각적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발굴 등
사업관리	7. 매년 증가 중인 어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단 해양사고 예방대책(12개 세부과제) 수립('26.1.), 추진 中 □ 화재·폭발사고 특별 관리기간 운영(2~3월) **<향후 추진계획>** □ 연중 공단 해양사고 예방대책 지속 추진 ○ 고위험선박, 안전진단서비스 등 어선 인명피해·빈발사고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 실시 ○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체험교육 확대 및 컨텐츠 개발 등 ○ '스스로 안전관리'로 전환을 위한 데이터분석 기반 안전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 기조에 따른 안전강화활동 적극 협조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사항 시행에 대해 어업인 대상 홍보 및 현장 교육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업관리	8. 미수검 선박 관리를 위해 연락불가 어선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부 협의) 검사기관은 별도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등록관청에 매월 10일까지 통보하고 등록관청은 소유자 또는 강제집행 여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검사기관에 통보토록 조치 ○ 등록관청은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 어선에 대한 청문시 소유자 연락불가 여부를 파악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상 어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말소 등 필요 조치를 시행토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지침개정) 미수검선박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정부와 '26년 1분기 관련 지침 개정 豫
사업관리	9. 공단의 수지차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선검사 수수료 등 어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향후 추진계획>** □ 공단의 수지차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요구시 현실화 노력 □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노력

공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26년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2026. 1) **<향후 추진계획>** □ 정보보안 인력 6명 증원 요구 * 정보보호분야 3명, AI기반 데이터 보호 3명
경영관리	2.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 * (2023년) 4등급 → (2024년) 3등급 □ 2026년도 윤리(청렴) 종합계획 수립(2026. 2.) **<향후 추진계획>** □ 종합계획 단계별 이행을 통한 기관 청렴인식 지속 제고
경영관리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23년부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중 * 2024년 이후 부담금 납부내역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채용 확대 노력 계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사업	4. 관내 훈련장 부재로 법정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권 선원들의 교육훈련 적기 이수를 위하여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유치를 위한 연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 (2026. 8.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추진
주요사업	5. 해기사 시험 문제의 적정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상시적·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시험문항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중 ○ 상근시험위원 운영, 시험문항 적정성 평가체계 운영, 국가자격시험개선위원회 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 상기 관리·점검·개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평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험문항 품질 관리체계 고도화를 계속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사업	1. HMM 매각 방향 및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의 우려를 청취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HMM은 단순히 민간 해운사가 아니라 국가 물류 안보와 직결된 국적 원양선사로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HMM 지분 매각은 국내 해운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주요사업	2. 내항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24년) 및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개편('25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외항→개정: 외항 및 내항) 하여 내항선사 지원체계 기반 확보함 **<향후 추진계획>** □ ①내항선사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접 대출에 준하는 선박담보부대출 채무보증 사업 시행안을 마련, ②공사법 개정('26.3월 시행)에 따라 예·도선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예정
주요사업	3. 북극항로는 해양전문 정책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필요한 금융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직개편을 통해 북극항로 전담조직인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함('25.12월)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사업	4. 중소선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진공 설립 후 전체 지원실적 중 중소·연안선사 지원건수는 약 30%로 중소선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중에 있음 □ '25년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25. 5월)을 통해 지원한도 확대(기존: 200억원→개정: 400억원) 및 직접 대출에 준하는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시행안 마련하여 금융접근성을 개선함 **<향후 추진계획>** □ 해진공은 앞으로도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음
경영관리	5.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진공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총 6명(중증장애 3명)의 장애 직원을 채용하였고, 장애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를 개발하여 배치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해진공은 올해 8명의 장애 직원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적응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경영관리	6. 데이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금년도 재해복구(DR) 센터 구축 컨설팅 실시 예산을 확보하였고, 컨설팅 진행 추진 예정임('26년) **<향후 추진계획>** □ 데이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년도 재해복구 시스템 컨설팅 수행 완료 이후 '27년 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양	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하여 해양과학기술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해양과학기술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해양임무 수행을 위한 내부 역량 결집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한 R&D 예산 확보 및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선도 노력 지속
	2.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 관련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진단과 대응 연구를 추진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미세플라스틱*등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 및 진단예측 체계 구축 필요성 인식 *해양대형동물의 플라스틱 노출, 행동반응, 영향 연구 : 바다거북과 바닷새 중심('26~) **<향후 추진계획>** □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 및 데이터 축적 추진
	3. 심해저 자원은 정부 주도의 준비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정부-민간 협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유망광구 선정 및 단계적 개발 기반 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심해저 자원 개발규칙 제정 이후를 대비한 정부-민간 협력 기반 마련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2022년 발생한 연구소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보완대책 및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정보보안을 위한 통신망 분리(망분리) 사업」 추진 중 □ 정보보안 담당인력 전문교육 확대 (연 40시간 이상) 실시 중 **<향후 추진계획>** □「정보보안을 위한 통신망 분리(망분리) 사업」 조기 완료('27.上) * (당초) '27년말 → (변경) '27년 상반기 내 ○ 인증시스템 및 보안 솔루션 도입,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한국어촌어항공단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어촌어항공단	1. 수급업체를 포함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스마트 기술 활용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과 현장 안전사고 사전예방 위한 '26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25.12.) □ 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사 신규 배치(3명)하여 현장 안전관리 전문인력 강화('26.1.) **<향후 추진계획>** □ '26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기술 고도화 및 장비 지원, FIPA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19개 과제 시행 중('26.12.)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한국어촌어항공단	2.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매년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웹사이트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 마련('25.10.)·시행 □ 정보보안 전담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담당인력 1명 추가 채용('25.11.) **<향후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웹 모의해킹 및 정보통신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조치('26.7.)
한국어촌어항공단	3. 낮은 보수 및 취약한 복리후생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재정경제부(공공제도기획과, 공공정책총괄과) 및 주무부처(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대면 협의하여 공단 임금 현실화 방안 논의('25.10~12월 총 8회 이상 대면 협의)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재원) 및 재정경제부(정원) 지속 협의('26.3.18.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 대면협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어촌어항공단	4.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산 이전 노사공동 TF 구성('25.11.24.) 이후 정부 이전 관련 추진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지속 노사 소통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정부 방침 확정시 노사공동 TF에서 부산 이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한국어촌어항공단	5. 어촌어항공단 등 수산업 관련 기관의 본사 소재지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 이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협조 중 **<향후 추진계획>** □ 정부 방침 확정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전 추진
한국어촌어항공단	6.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어촌·어항 특화 정책으로 확대하고, 전담기관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촌뉴딜사업 등을 어촌·어항 특화 정책으로 연계·확대하여 전담기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해수부, 국회에 관련자료 지속 설명 중 **<향후 추진계획>** □ 뉴딜사업을 어촌·어항 특화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 필요성을 지속 요구
한국어촌어항공단	7. 체계적인 어촌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촌 기초조사 추진을 위하여 해수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 요구('25.11.) 하였으나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조사주기,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해수부 협의하여 '27년 예산 요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어촌어항공단	8. 부산 지역의 어촌·어항 개발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부산권역 회복형 1개소(영도구) 시행협의 하였으며, 부산권역 내 지자체와 연락망 및 협력체계 유지 **<향후 추진계획>** □ '27년 신규 공모사업('26.상반기 접수) 발굴을 위해 지자체(해운대구 등)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자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행 협의 추진
한국어촌어항공단	9.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촌 기업과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촌-기업 상생모델(Co:어촌) 정책개발('25) 및 정부 재정사업으로 예산 확보('26년 국비 65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비즈니스 모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구체화('26.12.) □ 수산식품 강화·유휴공간 사업화·ESG 기반 삶의 질 서비스 개선 등 유형별 모델 개발, 기업 매칭을 통한 제품화 추진
한국어촌어항공단	10.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양식장 임대료 지원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극 지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26년 사업시행지침상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상 예산 확대* 반영 * ('27) 24억 → ('28) 40억 → ('29) 40억 **<향후 추진계획>** □ 재정투입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차년도('27) 예산 설명 등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업하여 청년귀어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어촌어항공단	11.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컨설팅 유형에 따라 상담비를 차등화하는 한편, 더 많은 귀어귀촌인 및 어업인이 상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운영 예산 '25년 약 67.5백만원에서 '26년 75백만원으로 11.1% 증액 완료 * 전체 사업비는 동결로 전년과 동일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 유형별 차등화를 위해 귀농닥터 등 관련 컨설팅, 멘토링 사례 조사 및 관계자 협의를 거쳐 차등화 방안 검토 예정('26.6.) □ 차기 상담사 선발(임기:'27.3~'29.2)시 어업인 참여를 위하여 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어업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예정('26.12.)
한국어촌어항공단	12.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대응을 강화하고, 어항관리선 배치 등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강화 ○ 유관기관(KOEM) 업무협의 실시('26.1.) ○ 재해 대비 유관기관 비상 연락 체계 구축('26.3.) □ 어항관리선 지원체계 고도화 ○ 남해안권역 긴급지원 운영방안 협의('25.11.) ○ 남해군-공단 간 어항관리선 운영 및 재난 대응 관련 업무협의('26.3.) **<향후 추진계획>** □ 신규 건조선 투입('28년) 연계 및 배치 체계 재정비 ○ 어항관리선 배치 권역 재검토 ○ 재해 대응 지원 절차 등 정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고용컨설팅 추진 완료('26.1월)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채용 가능 분야 발굴 및 '26년 채용 공고 시 반영('26.2분기) □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채용제도(알선) 활용('26.2분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자원관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은 3등급 이하로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대상 □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데이터 소산백업 완료('23년), 재난 및 장애 발생 시 24시간 내 복구 체계 구축 * 자체 정보시스템 백업, 복구 매뉴얼 수립 및 재난 대비 연 1회 복구훈련 실시 **<향후 추진계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재해복구 체계 재정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장애인 전용 서비스 제공률 개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형 무인발권기(3대) 교체('26.1월) □ (교육개발) 장애인 맞춤형(발달,지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착수('26.2월) □ (기획전시) 점자패널, 촉각전시물 설치로 이용 장벽 없는 전시 기획('26.2월) □ (주차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주차장 바닥 개선 착수('26.3월) **<향후 추진계획>** □ (편의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보강, 관람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계속) □ (교육개발) 장애인 맞춤형(발달,지체) 교육프로그램 운영('26.6월~) □ (기획전시)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기획 전시 개최('26.10월) □ (주차시설) 장애인 주차장 바닥 개선 공사 완료('26.6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나라장터 엑스포 참석 및 조달업체와 1:1 상담을 통해 혁신 제품 발굴 및 구매 연계('26.3월) □혁신제품 관련 정보 내부 공유('26.3월) **<향후 추진계획>** □ 혁신제품 계약, 구매 요구 시 해당 여부 확인제 운영('26.4월) □ 전기·시설 등 혁신 제품군 수요 발굴을 통한 구매 실적 제고('26.上) □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한 우선 조달 제품 구매실적 관리('26.5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5. 해양바이오뱅크 자원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시정・처리결과>** □ 기업 간담회를 통한 뱅크자원의 산업화 개선사항 도출('26.3월) □ 제품화를 위한 효능정보 확대 제공 (前 6개→現 9개) **<향후 추진계획>** □ 뱅크자원 산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기관-대학 협업 체계 구축('26.上) □ 기업 수요 반영 식품·화학·의약 분야 소재 발굴('26.下) □ 산업계 수요 반영, 해양유래 유용소재 대량생산기술 개발('26.下) □ 제품 개발에 적합한 '맞춤형 AI서비스' 구축('26.下)

공백

국립해양박물관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연평균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직 내 업무조정을 통해 안전·보건 업무 집중 운영 □ '26~'28년 중기인력계획 재경부 제출 (소방 1명/안전·보건 1명, '26.2.) □ 항만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3.19), 다중이용시설매뉴얼 점검 및 직원 교육(3.16.~27.) **<향후 추진계획>** □ 소방안전 교육 및 1급 소방안전 관리물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강화 □ 재경부 인력 증원 요청 예정('26.5.)
경영관리	2.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정보보안업무 연간 추진계획 수립('26.1.) □ '26~'28년 중기인력계획 재경부 제출 (정보보안 1명, '26.2.) **<향후 추진계획>**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 재경부 증원 요청 예정('26.5.)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침해사고 예방 활동, 자체 정보보안 감사 등 연간 추진, 사전 취약점 발굴 및 대응 체계 구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3. 박물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5년 유니버설 디자인 시민참여단을 통해 박물관 이용(시각장애인) 개선과제 24건 발굴('25.12.)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전시 관람 지원 콘텐츠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세부 계획 수립('26.5.) □ 전체 전시물 712건에 대한 촉각·점자·수어 등 순차적 확대 추진 ('25. 86건→'26. 150건→ '30 600건) □ 시각장애인 맞춤형 비콘(Beacon)기반 자동음성안내 서비스 도입(~'28.) □ '25년 발굴 과제 개선 추진 완료('26.6.)
경영관리	4. 지난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미흡한 바, 구매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련 부서에 혁신제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필요한 분야별 맞춤 아이템 발굴 추진 □ 박물관 운영사에 혁신제품 구매 협조 요청('25.10.), 전직원 구매독려('26.4) □ 박물관, 혁신제품 구매(1건, 2.1백만원, '25.11.)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신규 혁신제품 발굴(계속), 구매제도 및 혁신제품 리스트 전사 공유·직원 교육 추진('26.5.) □ 임대형 민자사업(BTL)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사 대상 구매 독려(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5. 창의적인 민간기업의 역량 발휘를 취지로 하는 민간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운영계획서에 민간운영사의 신규 계획 적극 반영, 콘텐츠, 시설 개선 추진 * 주요실적: '26년 상반기 관상용 해외 해양생물 23종 661마리 구매, 공용부 실내조경 개선 등 □ 공백없는 박물관 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콘텐츠 및 시설 분야별 관리 매뉴얼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엄격한 BTL 성과평가 추진('26. 5.,11.) □ 운영협의회 활성화 등 협력 체계 강화 □ 콘텐츠운영, 시설관리에 보다 새로운 운영 요청('26.4)

공백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침을 재검토하고, 기관 내 규정에 우선구매 사전검토 조항 반영 □ 혁신제품 지정 현황 및 구매 가능 품목에 대한 내부 공유를 실시하여 임직원 인식 제고 **<향후 추진계획>** □ 혁신제품 구매 실적 확대를 위해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 비율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 추진 □ 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 분야에 대한 개선 조치 추진
경영관리	2.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렴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간담회 추진 ○ 기관장-주니어보드의장단 소통('26.2.) □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 복직직원 청렴교육 추진('26.2.) □ 노사협의회 추진(매분기) ○ 매 분기말 노사협의회 시행 * 매년 3,6,9,12월 노사협의회 정기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청렴보안관 임명 및 활동프로그램 추진 ○ 주니어보드 청렴 보안관 임명 * 4월중 추진 □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노력 ○ 사회환원 프로그램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상시 근로자수 점검 결과, 우리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체 추진 가능 사항 점검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계획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시 장애인 별도 전형 운영 등 * 현재 과학관은 모든 채용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서류~면접전형별 3% 가산점 부여 中
경영관리	4.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보시스템 이중화 ○ 클라우드 VM(Virtual Machine, 가상환경) 탑재 * 장애 발생 시 5분 이내 VM재생성 가능 □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 구축 ○ 클라우드 자체 백업 ○ 소산 백업 이용(물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장소) * 클라우드 → 과학관 백업 서버 **<향후 추진계획>** □ 클라우드 DR 센터 지속 이용 ○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 현재 유지보수 비용의 2~2.5배 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람전시	5. 과학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서비스 개선 추진 ○ 지역 장애인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대상: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 주요내용: 교통장애인 대상 의견수렴 및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6.2.) - 기대효과: 지역 내 교통약자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관람 접근성 제고 및 실질적 자문 체계 확보 □ 전시물 접근성 개선(조치완료) ○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자기 주도적 관람을 위해 9존 신규 전시물 2종에 대한 '점자 안내판' 설치 완료('26.1.) □ 취약계층 대상 전시서비스 향상 사업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전시서비스 강화 예산 1억 확보 **<향후 추진계획>**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의견 수렴 ○ 취약계층 맞춤 행사 운영 * 장애인 초청 팸투어 추진 및 현장 자문·의견 수렴 등 ○ 전시 안내 인프라 고도화 -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안내문 보완, 음성안내 등 개선 병행 ○ 네트워크 기반 관람 활성화 - 지속적 네트워킹 및 성과 공유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후속 사업 추진 * 교통장애인협회MOU 체결 *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협력 논의 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관람전시	6. 지역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양과학교육을 활성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고교학점제 등 정규교육과정 내 협력사업 강화 ○ 경북교육청, 김천대학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9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공계열 진로 탐색 학교밖교육 연계 프로그램 신규 개설 * 9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26.3.) **<향후 추진계획>** □ 경남교육청, 광주교육청 등 전국 단위 원거리 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업기반 구축 및 교원연수, 심화탐구 교육프로그램 협력 기획・운영 * 현재 경기도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7개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교류 협력 中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 캄보디아 ODA 사업을 계획에 맞게 이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원국 요구로 사업 착수 지연('25.5) 및 외교부 캄보디아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25.10.10)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세미나 개최 등 현지에서 과업 이행이 불가하여 '26년으로 이월 (해수부 승인 '25.12.24) * 공정률 70%, 예산 집행률 71.1% **<향후 추진계획>** □ 등부표 설치, 세미나 개최, 기자재 지원 수행을 통한 사업 완료예정('26.3분기)
	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운영과 대외 활동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술원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누리집 및 알리오 플러스 내 게시 완료('26.03) **<향후 추진계획>** □ 누리집 메뉴 구성 변경 및 대외 활동관련 공지사항을 대표 누리집과 실시간 연동한 통합 안내 체계 구축 예정('26.3분기)
	3. 국립등대박물관과 부표사업소의 인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육아시간, 장기근속 휴가 및 출산장려금 제도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 정상화 방안 마련('25.12) **<향후 추진계획>** □ 근로자 측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인력 안정화 유지 협의 추진(연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 점검('25.11) - 장애인 채용을 지속 추진('25년, 2회) 하였으나 응시자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채용 실시 예정('26.4) - 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채용공고 및 추천 방식을 병행 추진
	5. 정보보안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보안 문제는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향후 추진계획>** □ 정보보안 전담인력 충원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증원 요구서 제출('26.5)
	6.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조속히 진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정보시스템 이중화(콜드사이트 시스템 운영) 기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재해복구시스템(DR) 선정 등 구축 계획안 수립 및 추진('26.3분기)

한국해양조사협회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영관리	1. 장애인 의무고용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근로자 2명(중증 1명, 경증 1명) 채용('25.9.29.)으로 의무고용율 이행 완료(4.48%)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근로자 현원 관리를 통해 정부 권장 목표 비율(3.8%) 유지
주요 사업	2 영해기준점 시설 훼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관리자 안전 대책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밀 안전점검과 외부도장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유지 중 □ 현장 관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도 재경부 정기인력 증원을 통해 안전전담인력 확보·배치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영해기준점 시설이 10년차('27년도부터)에 도래함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 증액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 ○ 영해기준점 예산을 현행 17억원에서 '27년 19억원으로 2억원 증액 요구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정보보안	3. 정보보안 전담인력 증원 및 예산편성의 일관성 필요	**<시정・처리결과>** □ '25년 수시·정기 인력증원에 정보화 전담인력(2명)을 요청하였으나 인력 증원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못함 □ 전담인력의 부재에 따라 정보보안 업무는 사업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보안 대응체계를 유지·운영 중임 □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위하여 정보보안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 '26년 재경부 인력증원 지속 요청 (3월 수시, 6월 정기) □ 중장기 정보보안 분야 투자계획 수립 및 정보보안 예산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예산 편성의 일관성 확보 추진
정보보안	4.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시정・처리결과>** □ 주요 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계획에 대해 기관장 보고 완료를 하였고, 현재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장비 도입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중화 구축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시스템 중요도와 업무 영향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중화 구축 지속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사 실시 완료('25.10.13~'26.1.9) * 자체감사 : '25.10.13~17 * 금감원감사 : '25.11.10~'26.1.9 ○ 대출 심사 소홀 등 위규 확인 **<향후 추진계획>** □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진해수협 및 고성수협의 사랑제일교회 대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사 실시 완료('25.9.29~'26.1.9) * 자체감사 : '25.9.29~10.17 * 금감원감사 : '25.11.10~'26.1.9 ○ 대출 심사 소홀 등 위규 확인 **<향후 추진계획>** □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여수수협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체불임금 지급 완료('25.10.21) ○ 수시감사('26.2.2~6) 시 지급내역 확인 **<향후 추진계획>** □ 처리 완료(종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회원조합 횡령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 준법감시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임금피크제 인력 영업점 지도검사역 배치 ○ '26년 1월 지도검사역 4명 배치 - 회원조합 영업점 지도·점검업무 수행 ※ 총괄지도역 포함 총 11명 **<향후 추진계획>** □ 임금피크제 인력 지속 활용 ○ 향후 임금피크제 인력 정기적 수급 ※ 인력부족시 계약직 채용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조합원 1인당 출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배당금액은 감소하고 있는바, 과도한 부동산 대출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 악화 원인 ○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차주 상환력 저하 및 담보가치 하락 □ 2025년 연체관리 실적 ○ 부실채권 1조 2,718억원 매각 및 대손상각 1,168억원 완료 ○ 부실채권 정리 의무화, 특별상각 등 연체감축 활성화 제도 시행 등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발생에 따른 건전성 악화 시 신속 정리 지도 ○ NPL 자회사 등 부실채권 매각 지원 및 추정손실 분류채권 상각 지도 ○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건전성 분류 및 적정 회수예상가액 산정 지도 등 □ 신규부실 예방 및 건전여신 증대 ○ 공동대출 등 중앙회 사전검토 지원 ○ 중앙회·수협은행 연계 대출 지원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 검토 필요 ○ 현행법상 중앙회는 조합을 출자자이자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중앙회장 선출권자의 변경은 이러한 조직 및 법 체계와 회원(조합)의 의견, 타 협동조합 조직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향후 장기 과제로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종합적 검토 필요 ○ 회원조합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이전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비상임이사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연구활동비 지급 관련 제도적 근거 정비 및 타 기관 유산 사례 등 종합적 검토 후 개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2022년부터 3등급 유지) 상향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 유지 및 청렴체감도 소폭 상승 ○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3등급 유지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렴체감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에 그침 **<향후 추진계획>** □ 종합청렴도 결과 등 반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시책 지속 추진 ○ 다양한 부패리스크 분석, 부패취약분야 개선 시책 발굴, 기관장의 반부패·청렴 의지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 및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 철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협중앙회 정보보호위원회 신설 예정 ○ 2026년 1분기 신설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수협중앙회 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지침 제정 진행中 ○ 제정(안) 작성 및 내부 의견조회('26.2월) ○ 정보보호위원회 신설('26.3월)

<table>
<tr><th>구분</th><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td><td>11.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노량진 수산시장)</td><td>
<시정・처리결과>
□ 소화설비 확충 완료('26.01월)
(단위 : 개)
<table>
<tr><th>구분</th><th>기존</th><th>추가 후(증감)</th></tr>
<tr><td>D급 소화기</td><td>5</td><td>10 (+5)</td></tr>
<tr><td>하부 주수관창</td><td>1</td><td>2 (+1)</td></tr>
<tr><td>질식소화포</td><td>1</td><td>2 (+1)</td></tr>
</table>
* (D급 소화기) 알루미늄, 마그네슘, 리튬 등 금속 재료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 소화기
(하부 주수관창) 소방 호스 끝에서 물이 분사되는 관창(노즐)이 하부에 위치한 구조로, 주로 차량 하부 등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
(질식소화포) 불연성 재질의 대형 천으로 차량을 덮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산소를 줄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장비

<향후 추진계획>
□ 화재 예방·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 충전구역 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 열화상 카메라 사용 실시간 감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 설치업체와 협의 중
□ 대응역량 강화
○ 2026년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 실시 예정('26년 하절기)
</td></tr>
<tr><td>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td><td>12.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td><td>
<시정·처리결과>
□ 여성 임원(비상임이사) 1명 선출('26.3.24.)
※ 임기 : '26. 4.13. ~ '28. 4.12.

<향후 추진계획>
□ 추가적인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인재 발굴 및 공정 기회 제공 등 점진적 개선
</td></tr>
</table>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 이행 ○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분투자를 통한 장애인 고용 이행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실시 ○ 채용 시 장애인 가점 부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행 ○ 장애인표준사업장 추가 출자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도이치모터스 그룹, 사랑제일교회, 우진메디컬프라자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사 실시 완료('25.9.29～'26.1.9) * 자체감사(도이치) : '25.10.13～10.17 * 자체감사(사랑제일) : '25.9.29～10.17 * 자체감사(우진) : '25.10.13～10.17 * 금감원감사 : '25.11.10～'26.1.9 ○ 대출 심사 소홀 등 위규 확인 **<향후 추진계획>** □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 대출 관련 사전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중앙회 사전검토 도입 ○ 사전검토 대상 조합이 특정 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검토 의견 반영 후 취급 ○ 검토실적 : ('25년도) 151건, 9,154억원 / ('26.3.17.) 44건, 2,800억원 □ 여신심사 종합컨설팅 실시 ○ 高 연체율 조합의 주요 연체 업종에 대해 심사방법 컨설팅 실시 ○ 컨설팅실적 : ('25년도) 9개조합 / ('26년도) 인천수협(2.11.)

<table>
<tr><th>구분</th><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td><td></td><td>□ 회원조합 여신감리(론리뷰) 지도·교육 실시
○ 교육실적 : 40개조합, 41명('25년도)

<향후 추진계획>
□ 중앙회 사전검토 강화
○ 全 조합, 거액여신 대상으로 확대
('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취급금액이 조합 자본 10% 이상
& 35억원 이상 대출건
□ 여신심사 종합컨설팅 실시 지속
○ 진해수협('26.4.8. 예정)</td></tr>
<tr><td>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td><td>16. 일반대출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할 것</td><td><시정・처리결과>
□ 심사기준 강화
○ 기업대출 이자상환력검토 의무화
○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여신심사역이 사유와 증빙자료 확인 후 조정 가능

<향후 추진계획>
□ 심사기준 강화
○ 현장조사 실시 내용 전산입력 필수
('25.11.20. 시행)
○ 유효담보가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산 개선
○ 1년 이내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검토</td></tr>
<tr><td>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td><td>17. 상호금융 공동대출에 대한 심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td><td><시정・처리결과>
□ 회원조합 취급 거액 공동대출에 대해 대상 기준을 강화하여 중앙회 사전검토 제도 운영 중('26. 2. 27.)
<table>
<tr><th>종전</th><th>변경</th></tr>
<tr><td>수협 취급액
<u>80억원</u> 이상</td><td>수협 취급액
<u>70억원</u> 이상</td></tr>
<tr><td colspan="2">건설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은 50억원 이상</td></tr>
</table>
</td></tr>
</table>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실적 : 74건, 8,007억원('26. 2월말 기준) **<향후 추진계획>** □ 공동대출 연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대상 기준 강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8. 단위수협 고위험(브릿지론)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부동산개발관련대출(브릿지론 포함) 취급 기준 강화('25. 11월) ○ 차주가 토지구입비 및 공사비 등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기자금 확보 시 취급 가능 ※ '25. 11월 이후 신규취급 실적 : 1건, 40억원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개발관련대출 연체 발생 등을 고려하여 관련 관리 강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 신탁 공동대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회원조합 담보신탁물건 공매 진행현황 전수조사('25.8월) □ 신탁사 공매요청 물건 조기 기일 지정 협조 요청 방문(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무궁화신탁) **<향후 추진계획>** □ 신탁수익권증서 담보대출 부실 발생 시 신속 정리 지도 ○ 신탁공매(필요시 채권매각 병행) 신속한 접수 및 적정 회수예상가액 산정 지도 □ 신규부실 예방을 위한 거액 공동대출 대상 중앙회 사전검토 지원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 상호금융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관리를 위하여 건전성 회복 목표치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상호금융 건전성 회복 목표 수립 ○ 2030년말 연체율 3%대를 목표로 건전성 개선 중장기목표 수립 □ 2025년 연체관리 실적 ○ 부실채권 1조 2,718억원 매각 및 대손상각 1,168억원 완료 ○ 부실채권 정리 의무화, 특별상각 등 연체감축 활성화 제도 시행 ○ 연체감축 대책회의 개최(8회) 및 현장지도(12개소) 실시 등 **<향후 추진계획>** □ 연체채권 감축 ○ NPL 자회사 등 부실채권 매각 지원 ○ 추정손실 분류채권 상각 지도 ○ 고연체조합 밀착관리를 통한 연체 감축 독려 등 □ 신규부실 예방 및 건전여신 증대 ○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대상 중앙회 사전검토 지원 ○ 잠재부실여신 대상 디마케팅 추진 ○ 중앙회·수협은행 연계 대출 지원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1. 비어업인 대출 연체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비어업인 대출 건전성 악화 원인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민감 업종 부진 및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연체 증가 □ 2025년 연체관리 실적 ○ 부실채권 1조 2,718억원 매각 및 대손상각 1,168억원 완료 ○ 부실채권 정리 의무화, 특별상각 등 연체감축 활성화 제도 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연체감축 대책회의 개최(8회) 및 현장지도(12개소) 실시 등 **<향후 추진계획>** □ 연체채권 감축 ○ NPL 자회사 등 부실채권 매각 지원 ○ 추정손실 분류채권 상각 지도 ○ 고연체조합 밀착관리를 통한 연체 감축 독려 등 □ 신규부실 예방 및 건전여신 증대 ○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대상 중앙회 사전검토 지원 ○ 잠재부실여신 대상 디마케팅 추진 ○ 중앙회·수협은행 연계 대출 지원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2. 부실채권 매각 자회사(수협엔피엘대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회원조합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수협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협엔피엘대부(주) 설립 - '24.10.28 설립 - '25.03.27 금융위 대부업 등록 완료 □ '25년 부실채권 6,363억원을 매입하였으며, '26년 부실채권 3,650억원 매입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3. 양식재해보험의 낮은 지급률 문제에 대하여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 지급 불가 내역에 대한 통계 관리 및 사후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험금 지급률 저조에 대한 개선 ○ 어업인 보장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 검토중 □ 지급불가 내역에 대한 통계 관리 ○ 지급불가 내역 통계 관리 전산 개발 **<향후 추진계획>** □ 보장을 확대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손해평가가 어려운 품목 보장을 위한 지수형 상품 검토 연구용역 추진('26.03~07월) ○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위험보장방식 도입 가능 여부 검토 연구용역 추진('26.05월) □ 지급불가 통계 관리 전산 개발 ○ 전산 개발 추진('26년 상반기) ○ 통계 자료 누적(2~3개년)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4. 양식재해보험 조기 가입을 유도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위한 가상계좌 제도 등을 신설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기 가입 유도 ○ 양식보험 담당자 교육 및 대어업인 홍보 실시 □ 양식보험료 납입시스템(가상계좌) 도입 ○ 증권번호를 계좌번호로 하는 시스템 도입 **<향후 추진계획>** □ 조기 가입 유도 ○ 가입추진반 및 현장교육을 통한 조기 가입 독려('26.2월 예정) ○ 대면, 유선통화 및 문자발송을 통한 대어업인 홍보 실시(수시) □ 양식보험 가상계좌 도입 ○ 수협은행 스마트(인터넷)뱅킹 납부기능 도입('26.1 完) / 타 금융기관('26.3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5. 양식재해보험 할증 방식 및 특약(약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구용역을 통한 요율(할인·할증) 방식 및 특약 개선 방안 검토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양식재해보험 요율(할인·할증) 개선 ○ 이상(거대)재해 손해 할인·할증 적용 제외 연구용역 진행중('26.04월 용역 완료 예정) -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개선 지속 추진 □ 특약(약관) 문제에 대한 개선 ○ 고수온(이상수온) 특약 주계약 편입을 위한 보험요율 산출 및 효과 분석 용역* 진행중('26.01.05~12.31) ○ 약관 개정(피해보상 산정기간 명확화) 예정(3월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6. 소음성난청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지급 기준을 보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선원의 소음노출 현황조사 연구용역 진행 중 ○ 용역기간 : '26.01.19. ~ '27.01.18. ○ 측정목표 : 300척 ○ 계약금액 : 351백만원 ○ 내 용 : 어선의 소음측정을 통한 환경조사 및 보상심사 방안 개선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방안 마련 예정('26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해녀학교 실습생에 대한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입건의 검토 ○ 해녀 실습생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인(어업근로자) 및 재해의 종류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어업안전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보상) 불가 **<향후 추진계획>** □ 민간보험 가입 안내 ○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 안내(해녀학교장) - 現 스포츠안전공제 가입 中(스포츠안전재단 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8. 바지락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수형 보험을 통한 살포식품목(바지락, 새꼬막, 피조개) 담보 가능 여부 검토 **<향후 추진계획>** ○ 기존 양식보험의 상품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지수)의 상품 검토 연구용역 추진('26.03~0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9. 섬 주민을 위한 자동차 보험 상품 신설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법률 개정이 우선인 바, 국회 및 관계부처 사전 추진 필요 □ 개정 경과사항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전국적 보상조직인력 감안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0.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합별 Sh보이스피싱 지킴이 운영하여 어촌 취약계층 홍보 추진 ○ 87개 조합 90명, 조합원 등 대상 자율적 교육·홍보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경영평가 가점 및 포상 등) ○ 상시 수협고객 예방 메시지 발송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Sh보이스피싱 지킴이 인센티브 확대 및 현장교육 실시 ○ 포상 확대(10개→15개)로 적극활동 유도 ○ 중앙회 전문강사의 현장교육으로 취약계층 이해도 제고 □ 보이스피싱 예방 상시홍보 추진 ○ 영업점 IPTV 광고, 푸쉬 등 메시지 발송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적극 홍보 - 모바일뱅크·ATM화면·현금봉투 표시, 창구 게시 등 □ 全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全 직원 온라인 교육 실시, 연수원 집합교육 추진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1. 발전소 건설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손실액을 현실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본회 수산정책과제 선정('26.2월) ○ 면허어업 할인율 개선 - 현행: 8.3년 → 개선: 10년~28년 ○ 허가어업 손실보상액 한도 개선 - 현행: 3년 수익 → 개선: 5년 수익 ○ 양식업 특성 반영한 별도 산출기준 마련 - 현행:수산업법령 준용 → 개선:별도 마련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및 정부 건의 ○ 수산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어정활동 실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2.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업 보호 중심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건의 ○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25.7월~'25.1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어업인 중심 이익공유모델 설계('25.7월~'26.1월) ○ 본회 연구용역 결과 정책건의 및 공론화('25.11월~) - 이익공유 국회토론회(박지혜, 김태선 의원 공동 주최) 개최('25.11.26.) - 민관협의회 국회토론회(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김정호 대표의원 주최) 개최('25.12.18.) ○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내 수산업계 핵심 건의사항 반영('25.12.9.) -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어업인단체, 주민) 50% 이상 구성 및 지구별·업종별 수협 참여 보장 등 - 입법예고(안) 지역수협 의견수렴 및 검토의견 회신 ○ 정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내 수협 이익공유 관련 건의사항 반영('25.12.10.) - 어업인 참여기회 보장 및 참여한도 상향 등 우대사항 - 수협 주민참여법인 사무관리 대행 등 ○ 기존사업 특별법 편입 관련 국회토론회(위성곤 의원, 어기구 의원, 이원택 의원, 문금주 의원, 임미애 의원 공동 주최) 개최('26.3.25.) □ 권역별 맞춤형 해상풍력 대응 지원 ○ 해상풍력 제도 및 어업 공존 사례 분석을 위한 세미나·간담회 개최('25.11월) - 한국-대만 해상풍력 현황 공유 및 제도 비교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 일본 해상풍력 전문가(前 일본 수산청장관 등) 세미나 개최 ○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 관련 지역수협 간담회 개최('25.12.1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 본회 연구용역 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 등 ○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대비 수산업계 정책설명회 개최('26.2.27.) - 해수부·기후부 참석 지역수협 대상 민관협의회·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주요사항 설명 및 이해도 제고 □ 개발행위 대응을 위한 해양공간정보 분석 수행 및 분석역량 강화 ○ 조업정보 기반 실질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원(지속)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입지 컨설팅,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 조업정보 데이터 표준화·최신화 연구용역 완료('25.10～12월) **<향후 추진계획>** □ 수산업 보호 중심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지속 건의 ○ 하위법령 내 수산업 보호 방안 마련 -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 단체 대표성·논의 투명성 확보(시행령) - 해상풍력 어업인 참여·이익공유방안 마련 등(행정규칙) - 기존사업 입지적정성 평가(행정규칙) □ 권역별 맞춤형 해상풍력 대응 지원 ○ 어업인 궐기대회, 설명회 등 해상풍력 대응 활동 지원(수시) ○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수협·어업인 지원체계 마련 - 민관협의회 참여 조합 지원, 해상풍력 어업인·수협 이익공유 행정·금융 지원 등 □ 수협 해양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 특별법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어업인단체) 구성을 위한 수협중앙회 조업정보 시스템 구축('26.4월~) - 시행규칙(안)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3. 낚시 활동과 관련된 기준 및 어업인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본회 수산정책과제 선정('26.2월) ○ 낚시어선 TAC(총허용어획량) 도입 등 낚시 관련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자원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수산자원 남획 어종 대상 TAC 설정 - 1인당 포획 가능 어종·어획량 제한 □ 낚시 기준 마련 건의 ○ 낚시 TAC 도입 관련 해양수산부 방문 건의('26.3월)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및 정부 건의 ○ 수산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어정활동 실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4. TAC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업종별수협장 협의회 간담회 참여('26.1월/부산) ○ 배분량 산정방식 및 자원평가방법 개선, 배분량 확대 등 현장 의견 전달 □ TAC 제도개선 위한 회원조합 실무 간담회 개최('26.2월/부산) ○ TAC 제도 관련 회원조합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논의 **<향후 추진계획>** □ TAC 제도개선 워크숍 실시('26년 중) □ 어업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해수부 제도개선 지속 건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5.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25년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및 수협재단 위탁 지원사업 추진 결과 ○ 수산자원조성 : 종자 4,807천미 종패 52톤 방류 ○ 바다환경개선 : 해양쓰레기 대응 234톤, 조업중 인양쓰레기 797톤, 침적폐어구 222톤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추진 ○ 수산자원조성 : 63개 조합, 1,884백만원 실시예정 ○ 바다환경개선 : 36개 조합, 741백만원 실시예정 ○ 기타비용 : 12백만원 실시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6. 어선 감척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척 확대 건의 ○ 업종별수협조합장협의회 시 해양수산부 건의('26.1월) 및 해양수산부('26.1월) 방문건의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 ○ 조경태 의원실, 농해수위 입법조사관('25.11월), 해양수산부('26.1월) 방문건의 ○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26.2.12.) 및 공포('26.3.10.) **<향후 추진계획>** □ 정부예산 확대 건의 ○ 대규모 감척실시를 위한 정부예산 확대 건의 □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대응 ○ 업종별 기준가격 상향을 위해 대정부 건의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7. EU의 뱀장어 양식 CITES 부속서 등재 요청에 대하여 등재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트랙 대응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뱀장어 CITES 등재(안) 부결(제20차 CITES 총회, '25.11.23 ~ 12.5) ○투표결과 : (참석) 147개국, (반대) 100개국 **<향후 추진계획>** □ EU CITES 등재 재추진 대비 민관 합동* 현안 대응 및 뱀장어 자원 관리방안 검토 지속 * '실뱀장어 수산자원관리 협의체(해수부 주관, '25.5월 ~)', 본회 및 민물장어양식수협 참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8. 김 양식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 · 처리결과>** □ 고용주 대상 외국인 노동자 불법 노동 방지 및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지도 공문 발송 (26.03.23.) **<향후 추진계획>** □ 고용주 대상 외국인 노동자 불법 노동 방지 및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하반기 지도 공문 발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9. 일반선원 및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어선원 안전교육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외국인선원 신규입국자는 안전교육을 실시중('16~), 일반선원은 고위험 업종을 우선 시범교육 추진 ○ 저인망(쌍글이, 외끌이, 동해구),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등 고위험 분류 5개업종(약4백척)의 일반선원 2천명을 대상 안전교육 실시('26~) **<향후 추진계획>** □ 일반선원(외국인포함) 안전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 □ 일반선원 안전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방안 등 해수부와 지속 협의 ○ 교육대상이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되도록「어선안전조업법」개정 건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0. 구명조끼 지원사업을 내수면 어업까지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내수면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지원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향후 추진계획>** □ 구명조끼는 해수부 어선안전장비지원사업(국고보조)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수면 어선 확대 방안을 해수부와 지속 협의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1. 구명조끼 지원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지원 후정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구명조끼 구매대금 정산방법 개선 완료('25.11.6) ○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납품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 지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내수면 어업에 대한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대상 내수면 어종 확대 건의('25.11.19) ○(건의결과) 미반영 - '26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시행지침(해수부 양식산업과, '26.1.22) 시행 · 지원대상 : 해수면 어종 한정 **<향후 추진계획>** □ '26년 본회 수산정책과제 선정('26.2월) ○ 수산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어정활동 실시 □ 본회 및 내수면 양식수협 합동,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건의 지속 ○ 일부 품목 시범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요청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 모델 다각화, 친환경인증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내수면 양식업 관련 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25.11.19)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지원대상, 내수면 어종 확대 □ '26년 상반기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간담회 실시('26.3.25)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경쟁력 제고 방안 및 주요 현안 논의 *참석대상 : 본회, 내수면 양식수협 8개소, 중앙내수면연구소 **<향후 추진계획>** □ 본회 주축, '조합-정부-연구기관' 내수면 양식 네트워크 구축(상·하반기 각 1회) ○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목적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 내수면 양식업 발전' 주제, 국회 토론회 개최('26. 3분기) □ 내수면 양식수산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추진(연중) * (예) 유명 레스토랑 팝업행사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4.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원조합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완전자본잠식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약정 체결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재원 : 수협예금자보호기금 ○ 대상 : 완전자본잠식 조합 6개(거제, 추자도, 구룡포, 근해장어통발, 전남동부, 경남정치망) ○ 지원액 : '30년말 기준 순자본비율 2% 부족액 532억원 중 425억원(필요금액의 80%) ○ 지원방식 : 3년간('25~'27) 균등 분할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6.3.24 기준 2개 조합(전남동부, 추자도) 경영개선약정서 체결 준비 단계로 자금지원 미완료 **<향후 추진계획>** □ 경영정상화약정에 따른 정상화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분기별 점검 및 필요시 현장지도 등 실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5. 회원조합 임금체불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임금체불실태 전수조사 실시완료 ○ 조사기간 : '25.11. 4 ~ 12. 3 ○ 조사대상 : 전 회원조합 ○ 조사결과 : '25년 3건이 있었으나 체불임금 전액 지급완료하여 조사기간 현재 임금체불 조합 없음 **<향후 추진계획>** □ 급여담당자 착오계산 방지를 위한 노동법규 교육 강화 및 회원조합 급여시스템 재구축 예정('26. 5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6. 수산업의 AI 전환과 관련하여 수협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업 AI 활용 사전 검토 ○ 수산업 전반의 업무 특성 및 AI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진행 **<향후 추진계획>** □ 수산업 AI 활용 과제 발굴 및 단계적 추진 ○ 관계 부서 및 현장 의견조회를 통한 AI 활용 수요 파악 ○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 방향 수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7.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협중앙회-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 체결 ○ 일시/장소 : '25. 12. 24(수) 10시, 여수시청 시장실 □ 입장권 사전 구매완료('25.12월말) ○ 구매수량 : 11,112매 (100백만원, VAT포함) ○ 입장권 배부 : 수협중앙회 및 전남본부, 관내 회원조합 배부(예정) □ 수협-섬박람회조직위 참가 kick-off 회의 실시 ○ 일자/장소 : '26. 3.13.(금) / 여수 ○ 주요내용 - 수협-섬박람회 '국제교류섬' 홍보부스 참가 협의 -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 시찰 **<향후 추진계획>** □ 수협중앙회 및 여수수협 참가제안서 접수 ○ 기간 : '26. 3월중 □ 홍보부스 설치·운영 일정 및 컨텐츠 협의 ○ 기간 : '26. 3월 ~ 8월 □ 수협중앙회 섬박람회 공동관 운영 ○ 기간 : '26.09.05(토)~11.04(수) 중 2주 ○ 장소 : 여수 돌산 진모지구 ○ 주요내용 : 수협소개, 어촌관광, 수산물 상품 홍보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8. 경제사업 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 오리온수협('25.11월) 설립을 통한 '김'의 국내외 판로확보 및 경쟁력 강화 ○ Sh활어유통('26. 2월) 설립을 통한 활어 유통 참여 및 판매 확대 □ 수산물 전문 판매장 개설을 통한 수산물 판로확대 추진 ○ Sh어부세상 5개소 개점(~'26. 2월) □ '26년 군급식사업 실적 개선을 위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물 급식비 인상 ○'25년 914원 → '26년 984원, 70원↑ **<향후 추진계획>** □ 경제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중앙회 경제사업 규모 확대 및 회원조합 경제사업 연계 강화 추진 ○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판사업 구조 개편 검토 □ 합작법인 운영 정상화 추진을 통한 사업 활성화 ○ '27년까지 오리온수협 김가공장 건립으로 가공사업 고도화 ○ '26년 상반기 내 Sh활어유통 사업 개시 □ 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직매장 개설을 통한 수산물 유통 규모 확대 추진 ○ Sh어부세상 '27년까지 82개점(직영 4개소, 가맹 78개소) 개설 ○ 직매장(shop in shop) '27년까지 2개소 개설 □ '27년 군급식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회 및 대정부 건의 지속 ○ 군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및 '27년 군급식 수산물 급식비 '21년 수준 회복 건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9. 수협유통(바다마트) 적자 문제에 대하여 구조개혁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처리결과>** □ sh어부세상 가맹사업 론칭을 통한 사업 전환 ○ sh어부세상 가맹 1호점 개점('26.02.11.) □ 적자점포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 강화 ○ 점포별 등급 분류 후 저성장 저수익 점포 구조조정 - '25년 C등급 4개점 중 1개점 '26년 1분기내 구조조정 진행(동대문점) - 3개점은 '26년 상반기내 점포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전략 재수립 등 자체 회생방안 진행 후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여부 결정 □ 본사 주도 위생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 ○ 전 점포 대상 일일·주간 자체 위생 점검 의무화 및 결과 보고 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年 2회 점포별 상권·경영환경 분석 후 등급 분류 ○ 연말 기준 c등급 발생 시 익년도 구조조정 실시 검토 □ 수협중앙회 위생점검 전담 인력을 활용한 바다마트 불시·수시 점검 확대 ○ 위생 불량 점포는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재검검 및 점포장 면담 등 집중 관리 시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0. 수협유통의 기계장치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25년 노사공동 안전분야 전수조사 실시 완료 ○ 기 간 : '25.11.01. ~ '25.12.11. ○ 대 상 : 바다마트 점포 전 사업장 기계장치 및 작업환경 일체 ○ 조사자 : 노사 합동 조사반(노조위원장,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 주요성과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현장 개선 요구사항 수렴 **<향후 추진계획>** □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시설 개선 이행 ○ 점포별 즉시 조치사항과 본사 차원의 일괄 개선사항을 분류하여 효율적 관리 ○ 2026년도 안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 시설 보완 ○ 시설 관련 개선사항은 수협중앙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소요 예산 확보 및 중장기 개선 로드맵 수립 후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1. 수협-오리온 합작법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상생할수있는방안마련할것	**<시정・처리결과>** □ 어업회사법인 오리온수협㈜ 설립이 영세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의원실 소명 완료('25.10) ○ 러시아 등 신시장 판로개척 통한 조미김 진출영역 확대 가능 **<향후 추진계획>** □ 합작법인 설립 시 시장 안정화 및 관리 대책 수립 ○ 어업인 생산 물김 수매 및 마른김 가공장의 규모화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2. 김 양식업자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어업회사법인 오리온수협㈜ 설립('25.11) ○ 목적 :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 가공사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 어업인의 원물 판매가격 안정과 판로 확충, 조합 및 생산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 발전 도모 ○ 주요사업 : 조미김, 스낵 등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 가공, 매매, 수출 등 **<향후 추진계획>** □ 합작법인 설립 시 시장 안정화 및 관리 대책 수립 ○ 어업인 생산 물김 수매 및 마른김 가공장의 규모화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3. 마른김의 조미김 전환 가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고부가가치 조미김 제품개발 및 해외 신시장 판로개척 통한 조미김 전환 가공률 제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4. 수협사료 공장의 전남 신축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시장 확대 가능성 검토 ○ 현재 전남지역은 생사료 대비 배합사료 사용량이 낮아, 배합사료만 생산중인 수협사료 공장 신축의 지리적 장점이 적음 □ 경제성 검토 ○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 폐기로 정체중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장 신설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함 **<향후 추진계획>** □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의 시장 규모는 '21년까지 확장하는 추세였으나, 의무화 정책 폐기 및 고수온·적조 등의 환경적 요소로 인해 시장이 축소됨 ○ 향후 이러한 환경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신공장 건립 검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5. 다수의 위판장에서 방조·방서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가 미흡한 바, 단계적인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노후 위판장 운영조합을 대상으로 위판장 현대화 추진계획('26~'30)을 조사하여 정부예산 반영 지속 건의 ※ 4개소(성산포,여수,욕지,서남해수어류양식), 총450억원 □ (국고)저온·친환경 위판장 보조사업자 공모 및 사업추진절차 등 안내('25.12.1)를 통해 사업 참여 유도 ※ 공모내용 : 저온·친환경 위판장 4개소 (60억원/2개소, 30억원/2개소) □ 산지위판장 방조·방서시설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26.1.13.~'26.)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긴밀히 협력하여 저온·친환경 위판장(폐쇄형) 단계적 확대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6. 산지위판장 및 폐어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산분야 운영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 지속 건의 ○ 해수부(양식산업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25.12, '26.2) → 한국전력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향후 추진계획>** □ 해수부 및 본회 합동으로 한국전력 본사 면담 추진 ○ 한전 약관 개정 또는 특례 적용 등을 지속 건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7. 회원조합 친환경 냉매 전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와 논의하여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회원조합 이용가공시설(냉동창고 등)의 친환경 냉매 교체 계획('27~'29년) 및 국고사업 추진 시 참여 여부 조사 실시('26.2월) ○ 회원조합 91개소중 8개소 희망(10,809백만원) □ '27년 냉매 교체비용 관련 정부지원 반영 건의를 위한 해수부(유통정책과) 업무협의('26.2)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와 지속 협의하여 정부예산 반영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8.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회원조합 실태조사 등 포함) 관련 연구용역 추진 * 본회 수산경제연구원 대상 '26년 연구과제 선정 요청('26.1.2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관계법령 보완 및 예산 확대 등 정부 지원 필요사항 검토 건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9. 학교급식에서의 수산물 선호도 저하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한식진흥원·영양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한영양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단체급식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산물 레시피 개발·보급 ○ 학교급식 영양(교)사 및 조리교육 강사 등 6명 선정위원 구성하여 현장 실험조리 및 전문가 감수를 통해 9종 레시피 확정 ○ 단체급식 수산물 레시피앱(단수요레) 업로드 및 레시피앱 홍보물 제작·배포('25.12월) - 레시피앱 수록 탁상용 달력 1,500부 제작 학교급식 관계자 배포 **<향후 추진계획>** □ '25년 신규개발 레시피 보급 확대 ○ 레시피 품목 학교 공급시 레시피 자료 영양(교)사에 제공 ○ 학교 방문영업 시 레시피북 제공 □ '26년 대한영양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수산물 레시피 지속 계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0. 군급식 수산물 물량 감소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수산물 급식비 인상 ○ '25년 914원 → '26년 984원, 70원↑ **<향후 추진계획>** □ '27년 수산물 급식비 인상 건의 ○ 군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14→15천원) 및 수산물 급식비 '21년 수준 회복 (984→1,211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 국방부와의 급식단가 협의 시 수산물 급식비를 물가 및 인건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26년 수산물 급식비 인상 ○ '25년 914원 → '26년 984원, 70원↑ **<향후 추진계획>** □ '27년 수산물 급식비 인상 건의 ○ 군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14→15천원) 및 수산물 급식비 '21년 수준 회복 (984→1,211원)

공백

수 협 은 행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협은행	1.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 자체감사 및 금융감독원 수시 검사 실시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 실시 요청에 따라 '25.09.29~'26.10.10일에 자체감사 실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수시검사를 '25.12.10~'26.01.06일 실시함 - 자체 감사 실시 결과, 대출 승인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포함한 대출 취급 전반에 대한 위규사항 없음
수협은행	2.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신용대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여신심사 판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용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여신심사합의체 운영지침」 개정 완료 <'26.02.25> ○ 확대여신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앞으로도 여신심사합의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건전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협은행	3. 신용대출 심사 절차 및 회의록 작성 기준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여신심사합의체 운영지침」 개정 완료 <'26.02.25> ○ 확대여신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앞으로도 여신심사합의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건전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협은행	4. 8년 만에 공시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사고(정보)보고 사항 내부통제 강화 실시 ○ 사고 및 정보 적기 보고 여부 관련 감사항목 추가하여 월간 점검 실시 □ 영업점 대상 수시교육 실시 및 지도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임직원 의식 수준 제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점검 항목 반영 □ 고성과·요주의 영업점 테마점검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지속 강화하겠음 ○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 감시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지속
수협은행	5. 대출 연체율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출 연체율 전년대비 개선 ○ ('24년) 0.58% → ('25년) 0.53% <5bp↓> **<향후 추진계획>** □ 연체율 안정적 관리 지속 노력 ○ 상환능력 검증 및 일일모니터링 강화 ○ 자체채무조정프로그램 적극 활용 ○ 적기 매·상각 추진 등
수협은행	6. 비어업인 대출 연체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비어업인 대출 연체 안정적 유지 ○ ('24년) 0.54% → ('25년) 0.54% **<향후 추진계획>** □ 연체율 안정적 관리 지속 노력 ○ 상환능력 검증 및 일일모니터링 강화 ○ 자체채무조정프로그램 적극 활용 ○ 적기 매·상각 추진 등
수협은행	7. 무수익여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무수익여신 전년 수준 유지 ○ ('24년) 0.2조원 → ('25년) 0.2조원 **<향후 추진계획>** □ 무수익여신 집중관리 추진 ○ 선제적 디마케팅 및 모니터링 강화 ○ 자체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적극 활용 ○ 적기 매·상각 추진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협은행	8. 자산 대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경영 혁신 노력을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직 내 업무 효율성 진단 실시 ('25.12월) ○ 전 부서 "업무 자가 진단" 실시 ○ 비효율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제거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진행 **<향후 추진계획>** □ 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지속 실시하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음
수협은행	9. 수기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전산 개발 완료 및 진행중 ○ 전자등기 관련 전자서명 미등록 개선 완료('25.9월) ○ COFIX 금리 등록 전산화 개발 및 자동화 완료 ('26.2월) ○ 근저당권 접수처리부 전산화 개발 진행중('26.4월 시행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근저당권 접수처리부 전산화 개발·시행 예정 ○ 특히, 근저당권 접수 시 서류 인도 과정을 시스템상에서 이력 관리하고 영업점장의 결재를 득하게 하여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수협은행	10. 귀어정책(창업)자금 대출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	**<시정·처리결과>** □ 취급영업점 대상 자금집행 문제점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하여 해양수산부 건의 ○ '26년부터 어업 외 타 산업 종사자(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가능하도록 지원대상 확대('26년 사업시행지침 반영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회원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해수부와 협의하여 귀어창업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하겠음
수협은행	11.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협은행·수협중앙회·금융보안원이 사이버 보안관제 활동을 함께 수행 중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의 사이버보안 협의체 구성 시, 당행 사이버보안 체계를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임
수협은행	1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실시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영업점 TV 및 유튜브 송출 ○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기 알림톡 발송<계속>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문진제도* 도입 및 시행<'25.08.11>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유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정확을 파악하는 절차 ○ 송파경찰서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실시<'25.07.10> ○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 방법 영업점 TV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강화<'26.03.06> ○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기 예방 백과사전*」 영업점 객장 및 홈페이지 게시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4편 게시 완료 ○ 「월간 피싱zero」 경찰청 12월호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공개수배 홈페이지 게시<'26.02.0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강화 추진 ○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기 예방 백과사전*」 4편 순차적 홈페이지 게시 * 중고거래 사기, 불법사금융, 청소년 불법도박, 투자사기 ○ 「월간피싱Zero」 경찰청 피해방지 최신자료 홈페이지 주기적 게시 ○ 고객특성·피해사례 등을 감안하여 연령대별 금융사기예방진단표(문진표) 지속적 업데이트
수협은행	13.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정감사 이후 노조에 규정 개정 필요성 설명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노조합의 필요 **<향후 추진계획>** □ 노조 합의 후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 개정 예정('26.3월 중) ○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수협은행	14.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콜센터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을 포함하여 노란봉투법 시행에 적극 대응할 것	**<시정・처리결과>** □ 당행 콜센터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근무 환경 등 점검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위탁업체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장근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수협은행	15.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성별, 지역 구분 없이 임원·간부급 직원으로 중용하고 있음 ○ '26년 3월말 기준 여성임원비율 : 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여성인력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2급 책임자(과, 차장) 중 여성비율은 50%(624명 중 313명)로, 상위직급인 1급과 별급 여성 직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수협은행	16.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회사 인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 또는 계열사 신설을 자제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협자산운용(트리니티자산운용) 실적개선 ○ 순이익 & 수탁고 동시 증가 · ('26. 2월누계) 세전 20.1억원* · ('26. 2월말) 3조 1,518억원** *전년도 연간순이익 : 세전 20.3억원 **인수시(25.9.29)대비 3조 24억원 증가 **<향후 추진계획>** □ 수협자산운용과의 시너지 창출 전략을 마련·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으며,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한 국 선 급

공백

202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해사	1. 선박검사 관련 징계 건수 증가에 따라 검사 미흡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징계건수 증가는 검사 품질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무관용 원칙 등)를 강화한 결과이며, 실제로 선박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검사 미흡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 **<향후 추진계획>** □ 검사 품질 및 안전 역량 제고 활동 지속 * 차세대 검사 기술 개발 및 프로그램 고도화, 차세대 검사보고서 시스템(KR-OASIS) 개발, 검사 스킬 포털 고도화를 통한 검사원 역량 증대, 제조후 등록검사프로그램(CSA Master) 고도화 등 □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활동 강화 등
해사	2 외국 선급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현재 세계 7위에서 세계 6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시정·처리결과>** □ 해사분야 탈탄소와 디지털 부문의 기술투자 강화 * 탄소감축 전략지원 디지털 플랫폼 KR-PILOT 및 KR-POWER 개발, 해운업계 탈탄소 이행 지원을 위한 KR-GEARs 기능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분석 및 연료별 탄소 배출량 자동산정 S/W 개발 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지 맞춤 영업마케팅 전략 시행 * 현지인 중심 영업기반 구축, 본부-지역본부-지부간 영업 정보·인프라 공유 및 강화, 해외위원회 및 국제전시회 등을 통한 해외시장 영업 활성화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제해사기구(IMO)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고객 지원 등 선급 경쟁력 제고 노력 중 **<향후 추진계획>** □ 경쟁력 제고 활동 지속
해사	3.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당사는 선박검사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어 장애인 인력 채용에 일부 한계가 있음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채용 가능 직무를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시 채용을 적극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연구지원 등 비교적 수행이 용이한 직무 중심으로 채용 확대 추진
해사	4.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시정・처리결과>** □ 당사 업무 특성상 주로 산업계 대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정보시스템(총 9개)에 대해 재해 발생 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DR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주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DR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 및 복구 절차 검증 지속 추진
해사	5. IMO에서 탄소세 도입을 1년 보류한 것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 조선·해운업계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선급의 지원 당부	**<시정・처리결과>**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수산부를 지원하여 친환경 연료 국제기준 제정 지원 중 □ 신규 규제에 대한 업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규제 대응 설명서 발간 및 선사별 맞춤형 기술지원 지속 제공 □ 해운회사의 규제 대응 편의성을 향상하고 선박 상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무료 제공 □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 관련 각종 기술규칙 개발, 산업계 지원 □ 친환경 기술의 실증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군산 중대형 엔진시험센터」 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 국내 해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지속 추진